

기획연구 2008-13

서해안지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충남지역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와 전략 연구

길병옥 · 최병학 외

발 간 사

지난 90년대 이후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화하는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정보화를 통한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권리의식이 고양되어 갈등이 복잡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인하여 지역의 산업 및 경제 분야와 더불어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는 등 지역주민간 갈등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충청남도 서해안지역 산업,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어 사회문제화 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서해안지역을 비롯한 충남지역의 갈등 및 사회위험 사례의 실태의 파악·분석을 통해 갈등관리의 기본방향을 도출하고 서해안 및 충남지역의 갈등관리를 위한 모형 설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와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갈등주체 간 갈등해소를 위한 자생적 갈등조정 문화기반(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연구는 지역기반의 측면, 법·제도의 측면, 주민인식의 측면, 운영의 측면, 지역경제적 측면의 갈등관리 및 사회위험해소 방안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역의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방안을 지역적 차원, 광역적 차원, 국가적 차원 등 세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연구에 연구책임으로 참여한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길병옥 교수님과 충남발전연구원 최병학 연구위원(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운영위원장), 안혜원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조차현·배일권 연구위원,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이준건 사무차장, 윤은경·이경용 연구원을 비롯해 본 연구가 이루어지기까지 뒷받침을 해주신 충남도청 자치행정과(주민생활지원담당) 포럼 관계관님을 비롯한 4대 권역별 포럼(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서해안권) 관계관님, 그리고 연구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연구심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용웅

연구요약

- 지난 90년대 이후로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화하는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정보화를 통한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권리의식이 고양되어 갈등이 복잡화 되어감
- 이러한 시점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인하여 지역의 산업 및 경제 분야와 더불어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는 등 지역주민간 갈등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 산업,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서해안 지역을 비롯한 충남지역의 갈등 및 사회위험 사례의 실태의 파악·분석을 통해 갈등관리의 기본방향을 도출하고 서해안 지역 및 충남 지역의 갈등관리를 위한 모형구상 및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와 전략의 도출임
- 그리고 이러한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갈등주체 간 갈등해소를 위한 자생적 갈등조정 문화기반(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 마련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활용한 방법은 문헌연구, 면접조사, 사례조사, 전문가회의 등으로 이들의 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경험적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기존 문헌 및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한 지역의 갈등발생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기존 연구자료 및 사례 조사를 통한 대안을 발굴함
- 서해안 지역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대안을 도출함
- 이를 바탕으로 지역기반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 인식적 측면, 운영적 측면, 경제적 측면의 갈등관리 및 사회위험해소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기반적 측면에서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구심점 형성 노력의 부족, 주민간 또는 주민·정부간 신뢰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음
 - 둘째,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갈등관리법제 부재, 이미 확립되어 있는 민사책임제도의

한계 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음

- 셋째, 인식적 측면에서는 정보의 불투명성,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문화 부재, 심리적 지원 시스템 부족,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넷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신속한 현장대응시스템 부재, 합리적인 보상체계 확립 노력 부족, 정부부처간의 이원화된 갈등관리 시스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다섯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복구·생계비의 부족, 사고기업의 체계적이지 못한 경제 지원 등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충남지역의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을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갈등의 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해서 지역적 차원, 광역적 차원, 국가적 차원 세 측면에서 검토하였음
- 첫째, 지역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인식적 측면과 지역기반적 측면의 노력, 일부 경제적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음
 - 지역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사회행사 개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 노력, 지역의 신뢰 형성, 심리 지원 시스템 마련, 주민교육 등을 통한 지역 자생방안 탐색, 지역 대책위원회 등의 통합적 운영 마련 및 건전한 주민참여 조직 육성, 대화와 협력을 위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 등이 긴요함
- 둘째, 광역적 차원에서는 일부 법·제도적 측면, 일부 경제적 측면, 운영적 측면에 있어서 광역정부 본연의 역할인 갈등조정과 중재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강조되었음
 - 광역적 측면에서는 갈등중재기구 설립, 일부 경제적 지원책 마련, 조정·중재적 협상절차의 도입, 갈등해결을 위한 광역 차원의 제도적 장치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셋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경제적 지원 측면과 법·제도적인 정비 측면이 중요하였음
 - 통합적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합리적 보상체계 확립, 갈등관리기본법 마련 등을 통한 갈등관련 법제 정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국가 및 사회의 역할 제고의 노력 등이 중요함
- 오늘날 우리는 지난 1991년 지방선거로서 30년만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역 내, 지역

간, 지역과 국가 간의 수많은 사회갈등 속에 놓여있음

- 그러나 지방정부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많은 물질적·시간적 비용이 소모됨으로써 사회적 효용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음
- 또한 여러 실증적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사회갈등의 심화가 수많은 분쟁과 공동체 붕괴 및 사회적 자본의 유실 등 많은 사회위험과 이어짐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정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차원에서도 현재 서해안 지역에서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를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갈등과 사회위험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함
- 특히 중앙과 지역과의 관계, 지역과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날 이들의 조정과 중재자로서 광역정부 내 제3자 갈등조정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음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3
제2장 갈등관리 및 사회위험 해소와 관련한 예비적 검토	4
1. 사회위험 및 갈등관리의 개념과 특성	4
1) 갈등의 개념 및 특성	4
2) 갈등관리의 정의와 특성	15
3) 사회위험의 정의와 특성	17
2. 사회위험 및 갈등관리의 유형	19
1) 갈등관리의 유형	19
2) 사회위험의 유형	26
3. 지역사회위험 및 갈등관리에 대한 접근방법	29
1) 지역갈등에 대한 관점의 다양성	29
2) 지역갈등에 대한 접근방법	30

4. 사회위험 및 갈등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현황	35
1) 갈등관리의 이론연구	35
2) 갈등관리의 사례연구	36
3) 선행연구의 시사점	46
5. 연구의 분석틀	48

제3장 국내의 갈등 및 사회위험 실태 분석 49

1. 국내의 갈등 및 사회위험 실태 분석	49
1) 동강댐 건설 갈등사례	49
2) 서울시 청계천 복원 및 개발사례	60
3)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갈등사례	69
2. 충남지역의 갈등 실태 분석	76
1) 천안시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설치 갈등	76
2) 호남고속철도 분기구간 갈등	89
3) 천안-아산 행정구역 조정 갈등	99
3. 사례분석의 시사점	102

제4장 서해안지역 갈등관리 및 사회위험해소 실증 분석 및 문제점 도출 105

1. 사고 개요	105
2. 서해안지역 갈등관리 및 사회위험해소 실증 분석	107
1) 인구통계학적 특성	107
2) 갈등현황의 빈도분석	109
3) 차이분석	133
4) 교차분석	201
5) 상관관계분석	218

3. 서해안 사례를 통해 본 충청남도 갈등관리 및 사회위험해소의 문제점	220
1) 지역기반적 측면	220
2) 법·제도적 측면	221
3) 인식적 측면	223
4) 운영적 측면	225
5) 경제적 측면	226

제5장 충청남도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와 전략 228

1. 지역적 차원	228
2. 광역적 차원	232
3. 국가적 차원	234

제6장 결 론 237

참고문헌	240
------------	-----

■ 부록: 설문지	247
-----------------	-----

표 차 례

<표 2-1> 정치·행정적 환경의 구성요소	14
<표 2-2> 학자별 갈등관리의 정의	16
<표 2-3> 갈등관리 유형	20
<표 2-4> 갈등당사자간 갈등변화와 대응의 상호작용	22
<표 2-5> 협상과 조정, 중재를 통한 갈등관리 유형 비교	23
<표 2-5> 개혁에 대한 저항 극복전략을 통한 갈등관리의 유형	25
<표 3-1> 갈등 발생의 원인	104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108
<표 4-2> 갈등의 정도	109
<표 4-3> 갈등의 변화	110
<표 4-4> 갈등의 심각도	112
<표 4-5> 서해안 유류유출사고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주체	113
<표 4-6> 서해안 갈등의 주도 집단	114
<표 4-7> 갈등발생시 행동 유형	115
<표 4-8>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의 경제적 책임	116
<표 4-9> 사회위험의 정도	117
<표 4-10> 유형별 사회위험의 정도	120
<표 4-11> 서해안 지역갈등의 원인	122
<표 4-12> 서해안 지역 불신원인	123
<표 4-13> 갈등원인별 심각도	125
<표 4-14> 갈등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126
<표 4-15> 갈등해결을 위해 기초단체(태안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	127
<표 4-16> 갈등해결을 위해 기초단체(충청남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	128
<표 4-17> 갈등해결을 위해 기초단체(중앙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	129
<표 4-18>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	130
<표 4-19>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의 법·제도적 측면에서 필요한 것	131

<표 4-20> 사회위험의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132
<표 4-21> 학력에 따른 갈등강도의 차이	133
<표 4-22> 학력에 따른 갈등횟수의 차이	134
<표 4-23> 학력에 따른 주민과 주민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135
<표 4-24> 학력에 따른 마을과 마을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136
<표 4-25> 학력에 따른 주민(집단)과 기업(유류유회사)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137
<표 4-27> 학력에 따른 주민과 정부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138
<표 4-28> 학력에 따른 사회위험 인식의 차이	139
<표 4-29> 학력에 따른 태풍 및 호우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40
<표 4-30> 학력에 따른 가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41
<표 4-31> 학력에 따른 폭설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42
<표 4-32> 학력에 따른 지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43
<표 4-33> 학력에 따른 화재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44
<표 4-34> 학력에 따른 붕괴·폭발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45
<표 4-35> 학력에 따른 교통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46
<표 4-36> 학력에 따른 실업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47
<표 4-37> 학력에 따른 분쟁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48
<표 4-38> 학력에 따른 파업의 사회위험 심각도의 인식 차이	149
<표 4-39> 학력에 따른 주민과 주민간 또는 주민과 정부간 불신 심각도 인식의 차이	150
<표 4-40> 학력에 따른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 심각도 인식의 차이	151
<표 4-41> 학력에 따른 유류유회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 심각도 인식의 차이	152
<표 4-42> 학력에 따른 복구 참여로 인한 건강 악화 심각도 인식의 차이	153
<표 4-43> 학력에 따른 정부 복구비의 턱없는 부족 인식의 차이	154
<표 4-44> 소득에 따른 갈등강도의 차이	155
<표 4-45> 소득에 따른 갈등횟수의 차이	156
<표 4-46> 소득에 따른 주민과 주민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157
<표 4-47> 소득에 따른 마을과 마을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158
<표 4-48> 소득에 따른 주민(집단)과 기업(유류유회사)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159
<표 4-49> 소득에 따른 주민과 정부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160
<표 4-50> 소득에 따른 태풍 및 호우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61
<표 4-51> 소득에 따른 가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62

<표 4-52> 소득에 따른 폭설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63
<표 4-53> 소득에 따른 지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64
<표 4-54> 소득에 따른 화재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65
<표 4-55> 소득에 따른 붕괴·폭발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66
<표 4-56> 소득에 따른 교통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67
<표 4-57> 소득에 따른 환경오염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68
<표 4-58> 소득에 따른 실업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69
<표 4-59> 소득에 따른 분쟁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70
<표 4-60> 소득에 따른 파업의 사회위험 심각도의 인식 차이	171
<표 4-61> 소득에 따른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 심각도 인식의 차이	172
<표 4-62> 소득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 심각도 인식의 차이	173
<표 4-63> 직업에 따른 갈등강도의 차이	174
<표 4-64> 직업에 따른 갈등횟수의 차이	175
<표 4-65> 직업에 따른 주민과 주민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176
<표 4-66> 직업에 따른 마을과 마을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177
<표 4-67> 직업에 따른 주민과 기업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178
<표 4-68> 직업에 따른 주민과 정부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179
<표 4-69> 직업에 따른 기업(유류유출회사)과 정부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180
<표 4-70> 직업에 따른 정부와 정부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181
<표 4-71> 직업에 따른 사회위험 인식의 차이	182
<표 4-72> 직업에 따른 태풍 및 호우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83
<표 4-73> 직업에 따른 가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84
<표 4-74> 직업에 따른 폭설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85
<표 4-75> 직업에 따른 지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86
<표 4-76> 직업에 따른 화재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87
<표 4-77> 직업에 따른 붕괴·폭발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88
<표 4-78> 직업에 따른 교통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89
<표 4-79> 직업에 따른 환경오염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90
<표 4-80> 직업에 따른 실업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91
<표 4-81> 직업에 따른 분쟁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192
<표 4-82> 직업에 따른 파업의 사회위험 심각도의 인식 차이	193

<표 4-83> 직업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 심각도 인식의 차이	194
<표 4-84> 직업에 따른 정부의 갈등관리 정책 부족 심각도 인식의 차이	195
<표 4-85> 직업에 따른 주민과 주민간 또는 주민과 정부간 불신 심각도 인식의 차이	196
<표 4-86> 직업에 따른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 심각도 인식의 차이	197
<표 4-87>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 심각도 인식의 차이	198
<표 4-88> 직업에 따른 복구 참여로 인한 건강 악화 심각도 인식의 차이	199
<표 4-89> 직업에 따른 정부 복구비의 턱없는 부족 인식의 차이	200
<표 4-90> 학력과 갈등정도의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201
<표 4-91> 학력별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주체에 대한 교차분석	202
<표 4-92> 학력과 서해안 갈등의 주도집단의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203
<표 4-93> 학력과 경제책임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204
<표 4-94> 학력별 갈등원인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205
<표 4-95> 학력별 불신원인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206
<표 4-96> 월평균 소득과 갈등정도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207
<표 4-97> 월평균 소득별 서해안 갈등주도집단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208
<표 4-98> 월평균 소득과 경제책임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209
<표 4-99> 월평균 소득별 갈등원인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210
<표 4-100> 월평균 소득별 불신원인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211
<표 4-101> 직업별 갈등정도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212
<표 4-102> 직업별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주체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213
<표 4-103> 직업별 서해안 갈등의 주도집단에 대한 교차분석	214
<표 4-104> 직업별 경제책임에 대한 교차분석	215
<표 4-105> 직업별 갈등원인에 대한 교차분석	216
<표 4-106> 직업별 불신원인에 대한 교차분석	217
<표 4-107> 서해안지역 유류유출사고 관련 갈등정도와 갈등유형의 상관관계	218
<표 4-108> 서해안지역 유류유출사고 관련 갈등정도와 갈등원인의 상관관계	219

그림 차례

<그림 2-1> 충남지역 갈등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의 분석틀	48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지난 90년대 이후로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화하는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정보화를 통한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권리의식이 고양되어 갈등이 복잡하게 변화됨
- 이러한 시점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 산업,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
-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지역의 산업 및 경제 분야와 더불어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는 등 지역 주민간 갈등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갈등증가에 비하여 체계적인 갈등관리프로그램이 적용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되면서 이에 피해를 보는 많은 주민이나 단체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성과 불신이 팽배함
- 불신의 팽배는 기름유출사고 수습, 지역사회·문화·경제 회복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필수적이고 당연한 정책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의 선입견으로 정책 추진에 대한 부정적 환경을 초래하게 됨
- 충남지역 빈번한 공공갈등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갈등해결을 위한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남
- 단편적인 해결로는 완전한 갈등 해결이 어려우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도시전반의 기반요소들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차원에서의 합리적 갈등해결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이 필요함

- 효율적인 갈등관리로 지역공동체가 재건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고, 충남지역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와 구체적 전략 제시가 절실히 필요함

2)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지역을 비롯 충남 지역의 갈등 및 사회위험 사례의 실태의 파악·분석을 통해 갈등관리의 기본방향을 도출하고 서해안 지역 및 충남 지역의 갈등관리를 위한 모형 구상 및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와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이러한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갈등주체 간 갈등해소를 위한 자생적 갈등조정 문화기반(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 마련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 연구방법은 갈등·사회위험사례를 총량(Macro)분석을 통한 특성분석(갈등환경)과 심층사례(Micro)분석을 통한 세부속성을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갈등·사회위험사례는 서해안지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를 둘러싼 충남지역의 갈등으로 한정함
-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지역을 비롯 충남 지역의 갈등 및 사회위험 사례의 실태를 파악·분석을 통해 갈등관리를 위한 모형 구상 및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와 전략의 구축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연구방법의 종합적인 활용을 필요로 함

2) 연구방법

- 구체적으로 활용될 방법은 문헌연구, 면접조사, 사례조사, 전문가 회의 등으로 이들의 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1) 문헌연구

-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경험적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 기존 문헌 및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한 지역의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함
- 기존 연구자료 및 사례 조사를 통한 대안을 발굴함

(2) 현장조사,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 서해안 지역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면접)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대안 도출을 시도함

제2장 갈등관리 및 사회위험 해소와 관련한 예비적 검토

1. 사회위험 및 갈등관리의 개념과 특성

1) 갈등의 개념 및 특성

(1) 갈등의 개념

- 갈등(conflict)은 라틴어의 ‘콘플리게레’(confligere)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것은 ‘함께’, ‘서로’를 뜻하는 ‘콘(con)’과 충돌·대립·투쟁·상충을 뜻하는 ‘플리게레(figere)’를 묶어 놓은 것임
- 즉, 어원적으로 보면 갈등의 상대가 있으며, 갈등의 상대가 맞부딪침인 것을 알 수 있음. 맞부딪침 속에서는 적대적인 감정이 조우와 행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갈등의 근거는 의견의 차이, 이해관계의 차이, 양립할 수 없는 욕구나 목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도덕적 주장 등에 있다는 것임
- 인간을 가리켜 갈등의 존재(homo conflict)라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음(한국사회이론학회, 1995). 이런 갈등은 학문 분야별, 학자의 관점별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우선 학문분야별 갈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심리학에서의 갈등에 대한 정의로 갈등은 두 개 이상의 양립할 수 없는 욕구, 목표 혹은 경쟁되는 행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리고 유기체가 불편한 마음으로 동시에 상이한 방향으로 이끌린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함. 갈등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최소한 일시적으로 다른 대안의 속성에 따라 내적 및 외적으

로 분류되며, 내적 갈등은 갈등의 원인이 개인의 내부에 있고, 외적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대안이 사람의 외부에 있을 때 발생하게 됨

- 다음은 사회학에서의 갈등에 대한 정의로 갈등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파괴시키는 행태의 상호작용으로 다시 말해서 갈등은 목표 달성이 대립 또는 적대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희생이 없이 성취될 수 없는 경우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형태라는 것임

- 또한 코저(Lewis A. Coser)의 정의에 따르면 갈등은 대립되는 양편이 바라는 가치를 얻고, 또한 그들의 경쟁자를 해치거나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제한된 자원이나 힘 또는 지위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은 개인 간, 집단 간 또는 개인과 집단 간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한편, 경영학에서는 조직에서 갈등이란 “조직 내의 행동주체간의 대립적 내지 적대적인 상호작용이나 교호작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집단, 조직 대 조직 간에 긴장이나 불안 심지어는 적개심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함

- 학자별 갈등에 대한 정의의 관점은 크게 과정, 행동, 상태의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갈등을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 토머스(K. W. Thomas, 1992)는 “갈등이란 어떤 개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것으로 지각할 때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갈등을 좌절(frustration), 개념화(conceptualization), 행동(behavior), 결과(outcome)의 4단계로 보고 있음

- 또한 폰디(L. R. Pondy, 1969)는 갈등을 하나의 에피소드(episode)로서 역동적인 과정(dynamic process)으로 파악해, 그 에피소드가 5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함. 즉, 잠재적(latent) 갈등 → 느끼는(felt) 갈등 → 인지된(perceived) 갈등 → 현재된(manifest) 갈등 → 갈등결과(conflict aftermath)의 5단계의 과정을 말함

- 갈등을 행동으로 보는 관점에서, 리터러(J. A. Litterer, 1970)는 “갈등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상호작용적 활동에서 상대적 손실을 지각한

결과 대립·다툼·적대감이 발생하는 어떤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갈등을 상태로 보는 관점에서, 마일즈(R. Miles, 1980)에 의하면 “갈등이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목표 지향적 행동이나 기대가 다른 집단 구성원에 의해서 좌절되거나 방해받을 때 나타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음

- 이상의 개념정의를 종합하여 갈등의 개념을 조금 더 명백하게 하기 위해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갈등은 행동주체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행동주체는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조직이 될 수 있으며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집단, 개인 대 조직, 집단 대 집단, 집단 대 조직 간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임
 - 둘째, 갈등은 행동주체간의 대립적 내지 적대적인 교호작용으로서 갈등은 친근하거나 화목한 관계가 아닌 충돌·대립·질시·미움·적개심의 관계이며, 거기에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고 초조와 불안이 있음. 경쟁은 상대방에게 직접 해를 입히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아니며, 경쟁이 격화되면 갈등이 될 수 있으나 경쟁과 갈등은 구분되어야 함
- 이와 같은 갈등의 개념을 본 연구에서 다시 정의하면(S. P. Robbins, 1998), 갈등은 개인·집단·조직내외에서 행동주체간의 목표나 이해관계의 대립과 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갈등은 개인·집단·조직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서의 행동주체는 개인이거나 집단, 또는 조직일 수 있음
- 갈등이 집단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갈등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사조가 발전·변화되어 오고 있음
- 전통적 견해는 갈등이 집단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회피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행위론적 견해는 갈등이란 집단에서 당연하고 불가피한 결과이기 때문에 나쁘게 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집단성과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음
- 상호 작용론자 견해는 가장 최근의 관점으로서 갈등이란 집단에서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갈등은 집단이 효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임

- 이상의 이 세 가지 견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김종재, 1985)

① 전통적 견해

- 갈등에 관한 초기의 접근으로서 갈등이란 나쁘다는 가정을 하고 있음. 즉, 갈등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으며, 갈등의 개념이 폭력·파괴·비합리성과 같은 부정적 의미의 개념들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했고, 따라서 갈등은 해롭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것임
- 전통적 견해는 1930년대나 1940년대 집단행위에 관하여 갖고 있었던 태도와 일관됨. 따라서 갈등은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개방성·신뢰 등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적 결과이며 이것은 경영자가 고용자들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함
- 모든 갈등이 악영향을 끼칠 뿐이라는 이러한 견해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행위를 매우 단순하게 접근한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집단이나 조직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오로지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고 악기능을 제거하는데 관심을 둘 뿐이었음
- 전통적인 견해의 가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유기현, 1992)
 - i) 갈등은 저해요인이기 때문에 해소되거나 해결되어야 함
 - ii)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님
 - iii) 갈등은 커뮤니케이션의 유효성을 저해하고, 인간관계에서의 이해와 신용 및 개방성을 결여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iv) 환경이 행동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v)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량하므로 신용과 협동 및 선이 인간본성에 부여된 것임

② 행위론적 견해

- 행위론적 견해는 갈등이란 모든 집단이나 조직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학파에서는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오히려 갈등이 집단의 성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함. 이 견해는 194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지배적이었음

③ 상호작용론적 견해

- 이것은 갈등에 관한 최근의 견해로서 행위론적 견해에서는 갈등을 인정했던 반면, 상호작용론적 견해에서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함. 그 이유는 조화되고 평화스럽고 평온한 상호협조적인 집단에서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 정적이고 무감각하고 무반응하다는 것 때문임
- 따라서 상호작용론적 관점에 의하면 경영자들은 집단이 충분히 변화가능하고 자체 비난적이며 창조적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최소한의 갈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제는 갈등이 무조건 좋다든가 무조건 나쁘다는 식의 생각은 구태의연한 것이며, 갈등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는 갈등의 형태와 성격이 어떤가에 달려 있으며, 다시 말해서 갈등의 기능적 결과와 역기능적 결과를 구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음

(2) 갈등의 영향요인

① 제도적 요인

- 어떤 문제에 대한 과정으로서 나타나는 갈등이나 협력의 문제를 제도적 분석틀을 통해 분석해 볼 수 있음. 이 경우 가장 중점적인 연구대상은 각 사안과 관련된 행동의 장내에 있는 행위자들과 행동의 상황을 규정하는 일단의 규칙임. 그러나 이러한 규칙들과 마찬가지로 각 사례에서의 행위의 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및 문제고유의 특성과 물리적 조건 등도 연구의 대상에 포함해야 함
- 이러한 규칙들은 지역의 갈등발생 및 협력유발과 관련한 다양한 수준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제도들임. 즉 갈등과 협력문제는 이해당사자간의 관계에 관한 어떤 규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사회적 현상임
- 갈등의 경우 사안과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 혹은 정부의 관련정책 등의 변화가 각 지방정부 행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갈등문제 해결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동시에 각 지방정부가 가장 쉽게 통제 조정할 수 있음
- 특히, 이중에서 제도적 접근과 요인 도출의 관점에서 가장 주목하는 관심사는 바로 사용된 규칙이며, 지방정부의 갈등에 대한 제도적 접근방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제도로서의 일단의 사용된 규칙임
- 일반론적으로 기존의 제도적 요인은 갈등해소와 협력증진을 위한 공식적 제도와 협상의 장에서 활용되는 비공식적 제도로 나눌 수 있음. 주목할 것은 제도를 일반론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로 나누어 봄은 모든 제도 연구자들의 공통점이었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공식적 제도 분류

- 공식적 제도는 현재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공식적 제도적 장치로는 크게 갈등당사자간의 조정·중재에 의한 방법과 제3자에 의한 조정·중재방안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함
- 당사자 갈등조정이란 지방정부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당해 지방정부들이 스스로 직접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활동을 하는 것을 말함.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제149조에서 각각 행정협의회와 지방정부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3자에 의한 갈등조정제도로는 중앙부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시도지사, 지방정부,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등이 있음

나. 비공식적 제도 분류

- 비공식적 제도는 협상과정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그동안의 관련 국내·외 연구들에서 제시된 것을 종합하면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가) 참여규칙 : 참여규칙은 공동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당사자들이나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여 지속적인 토론과 논변과정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임
- (나) 분해규칙 : 분해규칙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문제를 쟁점별로 분해하거나 범주화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임
- (다) 자원규칙 : 자원규칙에는 자원 확대 규칙과 자원교화 규칙이 있음
- (라) 조정자 규칙 : 갈등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갈등조정방법을 강조하지만 지방정부 간의 갈등의 분쟁조정과정에서는 당사자 간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제3자의

갈등조정자가 개입함

- (마) 정보공유규칙 : 정보공유의 규칙은 두 집단 간의 갈등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정보임
- (바) 결정규칙 : 결정규칙은 결정절차와 관련됨. 갈등당사자 사이의 협상고정 상에서 결정절차는 갈등문제의 구조와 상황에 따라 다양해 질 수 있음
- (사) 지식결합규칙 : 지식결합규칙은 전문적 분석과 상식적 판단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며, 공동의사 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분석적 방법보다는 협상, 타협, 영감 등의 비분석적 방법이 필요함
- (아) 부정적 학습규칙 : 부정적 학습규칙은 갈등문제의 심화와 협력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임. 학습규칙은 기존의 선례나 해결규칙이 존재하는 갈등은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 기존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학습하였는가, 부정적으로 학습하였는가 하는 것이 갈등해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자) 조직화 규칙 : 조직화 규칙은 갈등문제의 구조가 비용과 편익분리구조일 경우 갈등당사자들의 조직화정도는 갈등의 해결가능성에 영향을 줌

② 행위자 특성 요인

- 지방정부간에 특정문제에 있어서는 서로의 갈등상황에서 갈등행위자들이 이해관계와 함께 보이는 특성에 따라 갈등요인과 협력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정부간 갈등구조에서 행위자의 특성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수준이나 정도에 따라 협력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 반면, 새로운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갈등유형의 다양성에 따라 각 유형별로 해결방안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
- 갈등행태는 갈등당사자가 갈등에 대처해 나갈 때 나타나는 가장 가시적인 측면임. 갈등상황에서 회피(avoiding), 통제(controlling), 타협(compromising), 문제해결(problem-solving), 경쟁(competition), 수용(accommodating), 협력(collaboration)

등 갈등당사자의 행동이 표출됨(Thomas, 1980; Pruitt & Rublin, 1986)

- 갈등의 구성요소(최해식, 2004)로 둘 이상의 당사자, 상호의존성, 커뮤니케이션 내재 등도 있지만, 갈등당사자, 갈등중재자, 외생변인 등에 의해 각 행위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이 요인의 핵심사항이라고 볼 수 있음

가. 당사자

- 일반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필요하며, 갈등은 일방적일 수 없기 때문에 양당사자를 전제하여야 함
- 모든 사회갈등은 둘 이상의 사회적 실체인 갈등 당사자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며, 갈등당사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는 갈등의 특성을 잘 나타내 줌
- 갈등 당사자로는 개인, 집단, 조직, 국가 등 그 차원이 다양함
 - 조직상의 요인으로서 조직의 규모, 조직 상호관계, 조직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지방정부간 갈등은 조직의 역할구조 및 기능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며 조직의 특성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됨

나. 중재자

-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부분 중재자가 필요하며, 특정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 갈등이 당사자 간 협상과 교환을 통해 협력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 그러나 갈등당사자간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갈등은 지속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 갈등당사자들을 중재할 제3자 개입이 불가피함
 - 이 때 제3자는 갈등당사자를 제외한 개인 혹은 집단이 될 수 있음

다. 외생요인

- 외생요인 변수는 일부 환경적 측면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변수와 관련하여 행위자 특성 측면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있음
 - 가령 지역주민의 의식수준이나 관심도, 정치인 또는 시민단체나 언론이 개입하느냐의 여부 혹은 지방 혹은 총선이라는 선거 시기에 따라 갈등당사자의 행태에 영향을 다르게 줄 수 있기 때문임

③ 환경적 요인

- 환경적 요인은 정치·행정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정치·행정적 환경으로는 각종 선거와 같은 정치적 사건의 존재유무,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회, 주민(NGO)간의 상호관계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갈등관련 행위자들의 상호관계가 중요한 변수임. 행위자들을 독립적으로 놓기 보다는 이들이 상호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과 역학관계 등을 고려해야 함
- 조직 환경의 측면에서는 지방정치와 중앙정치 등이 중요한 변수임
 - 갈등문제가 단체장의 재선의지와 그 여부에 따라 협력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며, 지방정부간 갈등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개입은 갈등문제가 해결되어 협력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게 됨
 - 또한 지방정부간 상호관계 여부와 갈등 당사자와 제3자와의 관계임. 다시 말해, 갈등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제3자 개입이 불가피하며, 갈등당사자가 제3자에 대한 신뢰성 여부, 중재안 도출하는 과정에 정당성, 중재안에 대한 갈등당사자의 수용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지방정부와 의회간, 지방정부와 주민(NGO)간의 관계도 중요한데, 이들이 갈등문제에 대한 협력수준 여부는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또한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주민 간에 갈등문제에 대한 합의수준여부가 갈등이 협력으로 이어지는데 영향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 주민참여 조장여부는 이들의 의견을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는 정도이며, 만약 주민참여를 제한한다면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정치·행정적 환경은 ① 단체장의 의지 및 성향, ② 중앙정부의 개입수준, ③ 제3자의 개입수준, ④ 지방정부와 의회간 관계, ⑤ 지방정부와 주민간 관계 등의 구성요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2-1> 정치·행정적 환경의 구성요소

정치·행정적 환경	구성요소
① 단체장의 의지 및 성향	- 자치단체장은 재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태도
② 중앙정부의 개입수준	- 중앙정부의 개입수준
③ 제3자의 개입 수준	- 제3자에 대한 신뢰수준 - 공개토론이나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갈등발생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갈등발생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제3자가 제시한 중재안
④ 지방정부와 의회간 관계	- 지방정부의 의회간 관계
⑤ 지방정부와 주민간 관계	- 지방정부와 주민간 관계

- 사회경제적 환경의 요인으로는 주로 경제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급 지방정부들이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경제적 여건은 갈등상황에서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국가경쟁력의 수도권 집중심화로 지방정부의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각 지방정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역정책

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음. 더구나 경제사정이 열악한 일부 지방정부나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갈등과 협력의 소지가 다른 광역자치 단체들간의 관계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나 관심도, 시민단체나 언론의 활동정도도 차이가 날 수 있는 사항임

- 따라서 지방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때로는 갈등 및 협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임

2) 갈등관리의 정의와 특성

- 갈등관리는 갈등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갈등의 해소 혹은 정리를 목표로 그것의 순기능적 측면을 활성화한다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주체의 내부 혹은 외부와 맺는 갈등을 기획하거나 예측하여 관리함으로써 갈등을 해소, 방지, 촉진, 기획하는 활동을 말함
- 이러한 갈등관리는 학자별로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음
- 안성민(2001)은 갈등관리란 불확실성의 완화나 상호관계의 조정과 같은 갈등이 가져오는 편익이 크다면 적절한 갈등비용을 지불하고 편익을 확보하려는 것이라 정의함
- 안광일(1994)은 갈등이 수용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양극화 내지는 확대되는 것을 막고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조와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갈등 해소를 용이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하였음
- 천대윤(2001)은 갈등관리란 갈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갈등의 예방, 해소, 자극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정의함

<표 2-2> 학자별 갈등관리의 정의

학자	정의
Tanter	갈등은 기본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며, 갈등관리는 갈등의 해소 내지 해결이며, 예상되는 갈등상황의 방지 및 기획에 관심을 갖는 일련의 활동
Beroovitch	갈등이 확대되어 악화되는 것을 막고,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건이나 도구를 마련하는 것
Lawer	모두의 감정상태가 평상심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을 때 의도적으로 갈등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표출시킴으로써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화난 상태를 진정시켜 당사자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안광일 (1994)	갈등이 수용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양극화 내지는 확대되는 것을 막고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조와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갈등해소를 용이하게 하는 과정
임창희 (1995)	낮은 강도의 갈등존재는 조직을 활성화한다는 현대적 인식으로 볼 때 갈등관리란 갈등해결이 아닌 적정 수준의 갈등유지를 의미
안성민 (2001)	갈등관리란 불확실성의 완화나 상호관계의 조정과 같은 갈등이 가져오는 편익이 크다면 적절한 갈등비용을 지불하고 편익을 확보하려는 것
천대윤 (2001)	갈등관리란 갈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갈등의 예방, 해소, 자극 등이 포함

자료: 한수현(2005)에서 재구성

- 결국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라는 용어는 협상, 개입, 제도적 기제 및 다른 관습적 방법을 통해 갈등의 강도와 그 영향을 조절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의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법에 따르면 갈등관리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의미함(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
- 이러한 갈등관리는 갈등에 관련된 그 모두가 만족하는 건설적 갈등에 기초해서 지배나 타협이 아닌 아무것도 희생할 필요가 없는 제3의 길을 창조한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할 수 있음

- 다시 말해서 얼마나 갈등을 잘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갈등이 건설적인 갈등이 되느냐 파괴적인 갈등이 되느냐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다양한 갈등관리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볼 때 갈등관리란 갈등이 수용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악화 내지는 확대되는 것을 막고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실현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구조나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갈등해소를 용이하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3) 사회위험의 정의와 특성

- 서구에서 위험연구는 수용 가능한 위험수준의 측정, 평가를 놓고 기본적인 지향과 고찰방식에서 3가지 경향으로 나뉘게 됨(노진철, 2005)
 - 형식적·규범적 입장을 위하는 위험객관주의와 심리학적·인지적 입장을 가진 위험 주관주의
 - 심리학적·인지적 입장을 가진 위험 주관주의
 - 문화적·사회학적 접근을 보여주는 위험 구성주의
- 그러나 이러한 위험연구는 국가의 통제를 정당화하고 위기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학문으로 전락한다는 우려를 낳았고, 이런 맥락에서 Beck에 의해 촉발된 위험사회 논의는 연구중심을 수용 가능한 위험 범위에서 위험의 사회적 구성조건으로 이행시킴
- 이는 다시 Perrow, Wildavsky, Giddens, Luhmann 등에 의해 결정자와 당사자 간의 위험갈등을 포괄하는 사회이론으로 발전하게 됨
- 우리사회가 위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가 그 계기였음

- 위험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부안 핵폐기장 거부사태, 해화전화국 전산망장애 등을 통해 과학 및 기술발전의 부정적인 결과와 위험에 대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부터임
- 사회위험은 두 가지 방식으로 기능적 분화와 관련됨
- 하나는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은 전체사회가 갖는 위험이 아니며, 그때마다의 사회체계로부터 자기 준거적으로 인지된 혹은 생산된 위험임
 - 소위 국가적 위기(혹은 총체적 위기)를 야기하는 위험은 정치의 고유한 관찰양식으로 이해되어야 함
 - 따라서 Beck의 ‘위험사회’ 개념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정치체계의 단일한 관점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음(Fuchs, 1992).
- 다른 하나는 사회체계의 위험은 외부의 다른 사회체계들이나 생태계로 부터 온 것이 아니며, 외부로부터 야기된 정보가 체계 고유한 양가적 코드에 의해 자기 준거적으로 처리되면서 잠재적 위험으로서 인식된 것임
 - 예컨대 경제는 잠재적인 손해를 환경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지불·비지불, 편익·비용, 또한 정치는 정부(여)·하부정치(야), 과학은 참·거짓, 그리고 법은 합법·불법에 의해 결과로서 처리됨
 - 즉, 위험의 처리는 각 체계가 고유한 정보처리를 통해 그 체계에 귀속시킨 위험과 교류하는 것임
 - 따라서 어떤 사회체계도 전체 사회의 위험을 처리하는 데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며, 위험의 처리과정에는 대체로 여러 사회체계들이 참여하게 됨

2. 사회위험 및 갈등관리의 유형

1) 갈등관리의 유형

(1) 갈등에 대응하는 자세에 따른 갈등관리의 분류

- 갈등이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을 지니는 동시에 제거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Deutsch, 1973), 갈등의 적절한 관리(교환, 협상)를 통하여 갈등당사자간 행동을 상호협력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뿐 아니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음(Carpenter & Kennedy, 1987)
- 그리고 특정 문제(사건)를 중심으로 갈등요인의 작용 여부 내지는 정도에 따라 갈등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양자는 공히 협력 과정인 교환과 협상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협력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수준이나 정도에 따라 협력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 반면,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음
- 갈등관리 유형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누어짐. 즉, 나의 이익과 상대의 이익과의 관계설정, 상대와의 관계와 나의 이익 사이의 우선 순위설정 등에 따라 유형은 구분됨(Pruitt & Rubin, 1986)

〈표 2-3〉 갈등관리 유형

갈등관리 유형	내용
회피형 (avoiding)	① 대응할 시간이 없을 때 ②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③ 상대의 힘과 양보의 정도를 파악할 수 없을 때 ④ 문제해결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문제의 핵심에 대한 파악도 어려우며 주위만 맴돌고 있을 때 ⑤ 상대방으로부터 제안이나 양보 없이 본인의 기대치를 훨씬 밀둘 때 ⑥ 갈등당사자 서로가 갈등 자체를 모른 척하고 있을 때
수용형 (accommodating)	① 상대의 논리에 설득 당하였을 때 ② 상대의 논리에 100% 동의할 때 ③ 애초에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이 100% 양보하는 경우 ④ 단지, 싸우는 것이 귀찮아서 100% 양보하는 경우 ⑤ 상대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때 ⑥ 상대가 상대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으며 나의 신상에 불이익이 훨씬 많은 경우
통제형 (controlling)	① 나의 힘이 상대보다 우위임을 확신할 때 ② 나의 논리가 상대보다 우위임을 확신할 때 ③ 일을 것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④ 상대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거나, 최소한 해치지는 않는다고 생각될 때 ⑤ 신념이 확고할 때
타협형 (compromising)	① 나의 이익의 일부의 손해도 감수할 때 ② 상대와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는 것도 갈구할 때 ③ 지금 다소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익이나 관계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협동형 (problem-solving)	① 문제해결의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 ② 문제해결에 대한 추진력이 있을 때 ③ 모두가 100%의 만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확신할 때 ④ 중재자를 구할 수 있을 때 ⑤ 나의 이익과 상대의 이익, 그리고 나와 상대와의 관계가 모두 중요할 때

자료: 권경득 외(2007)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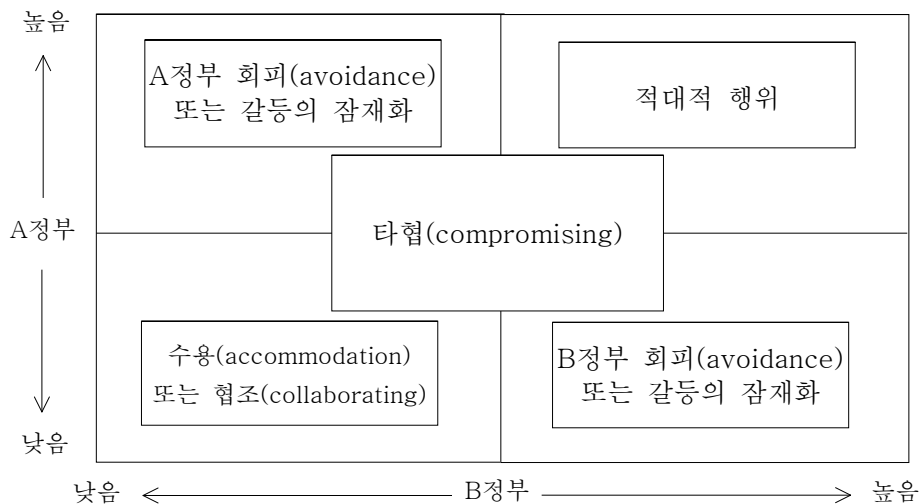
- 회피형은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행태로서 사람의 기본 성격이 그럴 수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회피형을 선택함

- 수용형이란 자신의 이익은 중요하지 않고 상대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때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선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는 타고난 성격적인 면도 있으나, 주어진 환경이나 자신이 처해있는 입지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함
- 통제형 갈등관리유형은 상대와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함
- 타협형은 상대와의 관계에서나 서로 추구하는 목표에서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 상호 양보하는 선에서 협상하는 유형임
- 협동형의 갈등관리전략은 상대와의 관계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서로 원하는 목적을 100%이상 확보하고자 하는 일종의 윈윈(win-win) 갈등관리전략임. 최근에는 거의 모든 갈등관리가 협동형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임. 협동형 갈등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되고 있기도 함(이선우, 2001)
- 갈등의 해결을 위한 전략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고정훈(2000)은 갈등의 당사자들이 협조전략을 선택하느냐, 갈등전략을 선택하느냐의 선택은 결국 자기집단에 돌아올 보상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았음. 따라서 이러한 갈등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갈등당사자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편익을 중심으로 자기 만족과 상대방의 만족을 계량화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함
- 또한 전영길(1997)은 모의협상을 갈등분석 및 조정가능성 측정지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슈에 대한 찬·반의 형태로 구분하고자 하였음. 이는 어떤 한 이슈에 대해 양 조직이 나타내는 의견일치여부를 이용하여 합의가 가능한 의제 외 불능한 의제를 명백히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조직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슈와 관련하여 집단별로 합의가능영역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그는 이슈와 관련하여 집단별로 찬성과 반대라는 의견의 경향을 파악하여 합의가능영역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Thomas(1976)는 갈등관리의 차원에서 자신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와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와 결합시켜 회피, 순응, 협동, 타협, 그리고 경쟁의 다섯 가지 전략을 제안한 바 있음. 사실 Thomas의 주장은 대인적 갈등의 관리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이광중(1995)은 그의 모형을 좀 더 발전시켜 집단 간 갈등

등의 관리방안으로 적용하려고 시도하였음. 즉, 갈등관리의 전략을 집단목표의 양립성 정도(매우 양립적, 매우 양립불가능적)와 목표달성을 위한 상호작용의 중요성(매우 높음, 매우 낮음)의 두 차원의 네가지 요소를 조합함으로써 다섯 가지의 갈등관리전략을 도출함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갈등당사자간의 갈등관리 및 갈등해소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다음 그림은 갈등당사자간의 관계에서 갈등의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갈등상태를 해소하거나 증폭시킬 것인지를 짐작케 할 수 있음(권경득 외, 2007)

<표 2-4> 갈등당사자간 갈등변화와 대응의 상호작용



자료 : 권경득 외(2007)

- 갈등의 해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갈등 당사자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3자의 개입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일반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당사자간의 조정과 제3자에 의한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당사자간 조정은 외부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갈등당사자간에 협상이나 타협, 협력적 문제해결, 광역행정방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

로서 제3자에 의한 조정보다 그 해결방안의 수용가능성이 높고 갈등의 실질적 해소에 더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제3자에 의한 조정은 당사자 간 협상이나 타협에 의한 자율적인 해결방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필요함(강인호 외, 2004)

(2) 갈등해소 방식과 관련된 갈등관리 유형

- 갈등관리는 갈등해소 방식과 관련지어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취함
- 첫째는 사법과정이나 정치과정(주민투표)에서 나타나는 힘에 의한 갈등관리이며, 둘째는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는 이성에 의한 갈등관리로 이해당사자 스스로의 참여에 의한 협상과 제3자 개입에 의한 중재, 조정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오광록, 1996)
- 그러나 힘에 의한 갈등관리의 경우 승패(Win-Lose) 전략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관리의 기본원칙과 합치될 수 없음
- 반면, 이성에 의한 갈등관리의 경우는 당사자의 역할과 제3자의 역할을 포함하고 궁극적으로 상생의 전략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관리의 기본원칙과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2-5〉 협상과 조정, 중재를 통한 갈등관리 유형 비교

구분		협상(Negotiation)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결정의 근거		쌍방 합의	제3자의 조언을 통한 쌍방합의	쌍방 간의 증거자료와 중재인의 결정
결정의 구속력		쌍방의 동의 필요	쌍방의 동의 필요	구속력 내재
제3자	개입	불개입	개입	개입
	선정	-	쌍방합의	쌍방합의
	역할	-	합의도출	일방적 결정

자료: 이달곤(2005)

① 이해당사자 참여에 의한 협상

- Rrangerajan(1985)의 협상(negotiation)이란 둘 이상의 집단이 어떤 공통된 문제에 대해 서로간의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 설명함
- 협상은 '주고받는 교환관계'로서 서로 수용 가능한 행동 대안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입장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이러한 협상에 대해 권원용(1993)은 공공정책상에는 이해와 갈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협상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갈등당사자들은 어느 정도의 양보를 허용해야 함. 협상은 일반적으로 갈등집단들이 상대적인 면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효과적이며,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월등히 강하거나 유리한 입장에 있을 경우에는 협상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게 됨
- 따라서 박호숙·이수장(1996)은 협상은 어느 정도의 자기 주장을 양보하거나 포기하여야 하므로 어느 집단도 그 결과에 완전히 만족하기는 힘들다고 함. 그러나 협상이 성공할 경우 상호이득 혹은 양보·수렴의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다른 갈등관리 유형보다는 갈등당사자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함

② 제3자 개입에 의한 조정, 중재

- 조정(Mediation)은 모든 결정을 이해당사자들이 스스로 내리는 것으로 이 때 조정자는 단지 이해당사자들이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얽힌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됨
- 중재(Arbitration)의 경우, 제3자(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학자 등)가 해결책을 결정하여 이해당사자들에게 제시 또는 강제하는 일종의 약식 재판임. 현재 각 분야의 분쟁조정기구(환경분쟁조정위, 언론중재위 등)들이 중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3) 개혁에 대한 저항 극복전략을 통한 갈등관리의 유형

〈표 2-6〉 개혁에 대한 저항 극복전략을 통한 갈등관리의 유형

구분	내용	시기
강제적 전략	사법적 판단, 사업의 일방적 추진	1990년대 초반까지
규범적·사회적 전략	공청회, 위원회 제도 운영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공리적·기술적 전략	보상실시, 사업추진철회, 시기조정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자료: 오석홍(2006)

① 강제적 전략

- 갈등관리자가 강제적 권력을 활용하여 제재를 가하고 위협을 가하거나 계서적 권한의 일방적 행사를 통해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임
- 이러한 강제적 전략의 예로는 계서적 원한에 의한 명령, 물리적 제재, 권력구조의 개편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 전략은 민주화 이후 갈등관리전략의 핵심에서 물러나고 있는 추세임

② 규범적·사회적 전략

- 상징조작과 사회·심리적 지지를 통해 자발적 협력과 정책수용을 유도하는 전략임
- 저항의 동기나 근원을 이데올로기적 장치를 통해 왜곡하거나 파편화시켜 정책의

집행에 적극적으로 결합시켜내는 것임

- 이러한 전략의 예로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위상 제고, 의사전달의 참여의 확대, 기회부여, 교육훈련과 자기개발의 촉진 등을 들 수 있음
- 이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전략임

③ 공리적·기술적 전략

- 관련자들의 이익침해를 방지 또는 보상하고 정책추진과정의 기술적 요인들을 조정함으로써 갈등을 극복하거나 회피하는 전략임
- 공리적·기술적 전략의 예로는 불이익 방지 보장계획의 제시, 시기의 조정, 정책 추진 방식과 기술의 수정, 정책의 편익과 비용의 실증 등이 있음
- 이 전략은 신속한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갈등의 본질적인 극복이 아니라 갈등당사자의 목표를 수정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일방 수용형 전략이라 할 수 있음

2) 사회위험의 유형

- 오늘날 산업사회와 후기산업사회의 제도와 구조는 상호공존하고 상호 침투하는 가운데 사회적 위험은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음
- 사회적 위험의 대상을 고려함에 있어 학자들은 다양하게 사회적 위험의 유형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음
- Heitzmann 등은 위험의 근원을 중심으로 자연적 위험(홍수, 태풍 등), 거낭위험(질병 장애, 사고 등), 생애주기위험(노령, 가족해체, 사망 등), 사회적 위험(가족폭력, 범죄 등), 경제적 위험(실업, 재정위기 등) 그리고 정치적 위험(성·인종차별, 정치적 불안 등), 환경위험(지구온난화, 오염, 핵재앙 등)으로 나눔(Heitzman, 2002)

- 이들은 위험을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위험과 자연에서 오는 외적인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거시적으로 위험을 지구적 생태위험, 자연적 재해위험, 국가적 안보위험, 건강의 위험, 경제적 생계위험, 기술적 재난위험, 사회적 해체위험으로 나누기도 함(이재열 외, 2005)
- 그런데 모든 위험은 본질적으로 기술, 사회적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위험 등의 전통적 범주들은 더 이상 분석적으로 동떨어진 것으로 이해되지 않음
- 위험들은 일정부분 상호 중첩되고 함께 작용하여 혼성위험(hybrid hazards)을 낳게 되며, 이것은 유사한 위험과 위험관리 문제들이 상이한 종류의 촉발기제에 의해 야기된 사건, 사고, 재해들로부터 생겨날 수 있음을 의미함(심상완, 2003)
- Neubour와 Weigand는 사회적 위험을 보편적 위험, 생애주기위험, 범주적 위험으로 나누고 있음
 - 첫째, 보편적 위험은 노동시장에서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거나 막는 사건을 포함하는 위험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정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은 사건에 포함될 수 있으나 사회에서 몇몇 집단은 다른 사람들보다 사고 당하기 쉬움
 - 둘째, 생애주기 위험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나 특정 나이 또는 생애과정에서 특정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노령기의 치매 등을 들 수 있음
 - 셋째, 범주적 위험(계급 또는 집단 위험)으로 사회 내 특정집단에서 야기되는 위험으로 특히 근로빈민 또는 여성 집단을 들 수 있음
- Esping Andersen은 사회적 위험은 계급위험, 생애주기위험, 세대간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음
 - 첫째, 계급위험은 사회적 위험의 가능성이 사회적 계층들 사이에 불균등하게 분배된다는 것을 함축함. 광부들은 IT 종사자들보다 직업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미숙련노동자들은 저소득과 실업에 취약하고, 여성가구주는 빈곤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음
 - 둘째, 생애주기위험은 생애기간에 걸쳐서도 불균등하게 배분되며, 산업사회에서는

빈곤이 아동기와 노령기에 집중될 수 있고, 가족은 전통적으로 생애주기위험을 분산화하기 위한 핵심적 공간이라 할 수 있음

- 셋째, 세대 간 위험은 계급 위험과 연관되는 것으로 이러한 위험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더라도 한다면 세대간 위험 전승의 문제가 발생함. 상속과 시장은 보통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에 있으며, 직업적, 교육적 성취가 여전히 강력하게 사회적 출신에 의해 과잉 결정된다는 사실임

3. 지역사회위험 및 갈등관리에 대한 접근방법

1) 지역갈등에 대한 관점의 다양성

- 현대사회는 다원화되고 복잡한 사회로 지역갈등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갈등에 관한 연구도 폭넓게 진행되고 있음
- 지역갈등을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중앙정부 혹은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갈등을 비교적 잘 알려진 갈등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그러나 기초 자치단체 수준의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다룬 연구들은 다소 부족한 편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소지역단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지역 단위에서 발생하는 갈등사례의 발굴과 연구가 보다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지역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갈등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사회적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받는 동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갈등을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변수들에 의해 갈등의 결과도 상이해지게 됨
- Minnery(1995)는 규제제도의 틀(The regulatory framework), 상호작용의 초점(focus of interaction), 갈등에 대한 인식(awareness), 지속성(continuity)정도,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유무, 갈등해소 수단(means used), 목표의 초점(locus of the goals), 목표와 자원의 가용성(availability of goals and resources), 주관성과 객관성(subjectivity and objectivity), 갈등당사자의 특성(the nature of the parties), 갈등대표자(representation), 갈등 환경(the environment of the conflict) 등 다양한 변수를 제시하고 있음
- 또한 Sandole(2003)은 갈등의 구성요소를 갈등당사자(parties: 개인, 집단, 조직, 사회, 지역(region), 국가), 갈등이슈(Issues: 갈등당사자가 갈등과정에서 제기하는 문제의 원인), 갈등의 목표(objectives), 수단(means), 그리고 갈등을 다루는 양상(conflict-handling

orientations: 경쟁 또는 협력), 갈등환경(conflict environment: 내재적 환경과 외재적 환경) 등으로 구분하였음

-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갈등의 변수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크게 갈등당사자, 갈등과정, 갈등구조적인 측면 등에서 갈등을 설명하는 변수들을 설정하고 있음
- 결국 지역갈등은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최근에 갈등 현상에 대한 분석틀로서 갈등의 조건 및 원인 분석에 유용한 근거이론과 프레임 이론, 갈등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규칙이론과 판단분석, 그리고 갈등과정에서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협상이론, 로컬 거버넌스 등이 있음

2) 지역갈등에 대한 접근방법

(1) 근거이론(grounded theory)

- 근거이론은 체계적인 질적 연구의 한 방식으로 사회학자인 Glaser와 Strauss(1988)에 의해 구체화된 연구방법론임
- 근거이론 방법은 면접 등을 통해 얻는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대상에 관한 가설적 관계를 추출한다는 점에서 귀납적 연구방법론의 하나임
- 근거이론은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데, ‘현상’이란 해당 연구 분야에 있어 핵심이 되는 중심대상을 말함
- 즉 어떠한 연구 분야에 있어 ‘정말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현상’이며, ‘현상’은 연구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 혹은 행동의 패턴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발견하게 됨(Strauss & orbin, 1998)
- 근거이론을 통한 갈등사례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탄강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최홍석 외, 2004)을 근거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가 있음

(2) 프레임이론(frame theory)

- 일반적으로 프레임(frame)은 정보에 대한 선별과 조직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 해석적 준거로서 사회의 복잡한 실체를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도구로 간주됨(Shon & Rein, 1994)
- 즉, 같은 사건이라도 이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투사될 수 있으며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표출되는 사건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프레임임
- 이러한 프레임은 갈등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와 기능을 갖게 됨. 즉, 갈등 당사자간 프레임 부조화(mismatches)는 갈등의 근원이 되며, 갈등 당사자가 구축하고 있는 부정적 특성 프레임(negative characterization frame)의 강화는 상대방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초래하고 구체적 성과에만 집착하도록 함으로써 갈등의 전개양상을 파괴적으로 유도함
- 결국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은 이들의 가치, 개인적 속성, 권한, 배경 그리고 각 당사자들이 위치한 사회적 맥락이 서로 다르기 때문임
- 프레임 이론을 통한 갈등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탄강 댐 건설을 둘러싼 건설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의 프레임을 분석한 연구(주경일 외, 2003) 등이 있음

(3) 규칙이론(rule theory)

- 공공정책이나 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공식적·비공식적 제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규칙(rule)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임
- 규칙에 대한 논의는 그 수준이나 접근에 따라 다양한데, 갈등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합리주의적 관점에서의 규칙임
- 규칙은 이익을 추구하는 참여자들 사이의 타협을 통하여 합의·형성된다는 점과 개별적인 행위자들은 규칙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강조됨
- 갈등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합리성에 바탕을 둔 자율규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공유재의 경우 자율규칙은 공유재를 사용하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스스로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공유재를 이용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자율규칙은 공유재의 이용자들이 외부의 개입 없이도 공유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제도주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 규칙이론은 비록 공유재를 둘러싼 갈등상황에서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공공사업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문제의 예방과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응용할 수 있는 유익한 분석도구라고 할 수 있음

(4) 판단분석(judgment analysis)

- 공공정책과정은 갈등적인 견해와 주장들을 조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임(Lindblom & Woodhouse, 1993)
- 판단분석(judgment analysis)은 이러한 관점에서 복잡한 정책문제에 직면한 정책 행위자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정책행위자들의 인지적 판단과 의사결정과정을 외연화하고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모형화하는데 기여를 하였음(Harmond, et.al, 1992)
- 판단분석은 렌즈모델(Lense Model)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렌즈모델은 인간의 인지과정과 의사결정 환경과의 관계에 초점을 둠(Harmond, et.al, 1992)
- 렌즈모델에 의하면 인간의 판단은 환경으로부터 인식되는 불완전한 정보를 마치 볼록렌즈를 통해 투사된 것처럼 재결합하는 과정으로 간주함
-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분석적 대안형성을 돕기 위해 판단분석이 활용되었는데, 특히영역별로 보면 환경, 치안, 지역개발, 분권과, 자원배분, 교육, 노사문제 등이 대표적인 분야임
- 예를 들어, 콜로라도주 볼더시의 공용지 획득 사례에서 나타난 판단분석의 적용절차를 살펴보면, ① 각각의 위원들로 하여금 공용지 획득 기준들에 관해 자신들의 판단정책을 기술하게 하고, ② 각 위원들이 자신의 판단정책을 수정할 기회를 갖게 하여, ③ 최종의 타협안을 마련하고, ④ 마지막으로 이 대안을 정책으로 채택하였다는 것을 보여줌(Steinmann et. al, 1977)

(5) 협상이론(negotiation theory)

- 최근에 갈등현상을 협상론의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이선우 외, 2001; 하혜수, 2004)
- 협상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희소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해 동의를 이루어가는 의사결정과정으로, 3개의 주요한 개념인 판단(judgment), 상호의존(interdependence), 그리고 협력(cooperation)으로 구성된다(Raiffa, 1982). 협상의 분석에서는 당사자, 이슈, 대안, 이해(interest)와 입장(position), 협상과정, 협상결과 요소들을 포함함
- 협상에 대한 연구의 대표적인 접근은 협상전략에 대한 연구와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있음
- 협상과정에서 협상당사자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당사자들이 바라는 바를 서로 조화시켜나가는 문제해결전략, 자신이 선호하는 전략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경쟁전략, 자신의 요구보다 하위의 목표나 가치를 수용하는 양보전략, 협상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회피전략 등이 제시되고 있음
- 협상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협상의 변수를 구조적 맥락변수, 협상당사자의 행태, 협상당사자들의 상호의존, 사회적 영향력의 활용을 제시한 연구(Rubin & Brown, 1975)와 협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권력(Power), 시간(time), 정보(information)를 제시한 연구 등이 있음

(6) 로컬 거버넌스

- 지역갈등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접근방법들은 나름대로 갈등연구에 유용성을 지니고 있음
- 예를 들면 근거이론은 갈등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갈등의 원인을 규명 하는데 유용한 분석도구이며, 프레임 이론은 갈등 당사자들의 내면에 숨어 있는 갈등 현상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갈등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분석도구임

- 또한 규칙이론은 갈등의 전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비공식적 규칙을 도출함으로써 갈등을 협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도구임
- 판단분석은 정책행위자들의 인지적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갈등의 근원을 파악하고 갈등의 과정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유용함
- 그리고 협상이론은 갈등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하여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반면에 위에서 제시한 갈등 분석 도구들은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어떻게 상호 협력하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로컬 거버넌스 모형은 특정 현안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인식하고, 갈등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해 가는 갈등의 구조와 과정을 규명하는데 유용함
- 결국 로컬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보면 갈등은 구조적 산물이자 과정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갈등의 과정에서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갈등관리를 통하여 갈등을 초기에 해소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일반적으로 로컬 거버넌스는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행위 주체들이 상호 협력과 참여를 통하여 지방의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의 주요 문제를 다양한 지역사회의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기제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를 통한 갈등의 분석은 협력적이고 성공적인 로컬 거버넌스를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자원, 행위자의 특성, 행위자간 관계, 사회적 자본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 정보 및 전략의 공유방식, 행위자들의 역할 및 책임의 설정, 의사결정방식, 권한위임방식 등 거버넌스의 구성요인, 그리고 거버넌스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내부의 운영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됨
- 현대사회의 사회적 분화와 상호의존성의 증대는 갈등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갈등은 다양한 차원, 다양한 원인, 다양한 형식과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를 통한 갈등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함

4. 사회위험 및 갈등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현황

1) 갈등관리의 이론연구

- 공공사업의 갈등원인과 갈등관리방안을 모색한 박형서(2005)의 연구
 - 공공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즉 정책추진 과정상 나타나는 한계, 합리적 협상토론의 부족, 제3자 개입의 개방성, 갈등이슈의 복잡성, 갈등대상의 불명확 등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설명함
 - 공공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적 갈등예방과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 대안적 갈등해소방안의 공공분야 도입, 갈등관리교육의 강화, 시민과 사회단체의 책임성 공유 등을 제시하였음
- 기존 갈등관리 법제의 문제점 개선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을 도출한 전재경(2005)의 연구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환경분쟁조정법, 행정절차법 등 분쟁해결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갈등관리 법제가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갈등기본법(안)이 출범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근원적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사회교육을 강화하여야 함을 피력한 김광구(2005)의 연구
 - 갈등은 창조적이고 협력적이며 합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주장하고 보다 시급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 인식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 설명함
 - 문화적 인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 갈등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대학 및 대학원의 전문 갈등교육프로그램의 도입, 일반시민과 시민단체들의 갈등교육, 공무원의 갈등교육, 갈등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전문가 양성, 정부차원의 갈등관리 위원회의 개설 등을 제시하였음

- 갈등의 사전적·사후적 관리방안을 제시한 안성민(1999)의 연구
 - 공동생산, 공동소비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내 의사결정규칙을 설정하는 사전적 관리와 협상, 제3자의 개입, 설득 등 사후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
- 갈등관리를 위한 당사자와 제3자 수단을 제시한 오광록(1996)의 연구
 - 당사자 수단을 적극적 행동, 협력적 목표설정, 열린 마음 등의 규범적 수단과 회피, 협력, 제지 및 징벌, 강요, 유화, 타협 등의 기술적 수단으로 누군가 제3자의 수단으로 조정, 중재, 회유, 협의를 제시하였음
 - 가장 효율적인 갈등관리 수단은 회유와 협의임을 주장함

2) 갈등관리의 사례연구

(1) 수자원관리 분야

- ‘영월댐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정책결정참여자간의 갈등을 다룬 안재영(1999)의 연구
 - 갈등의 원인을 i) 목표의 문제, ii) 의사소통의 문제, iii) 상호의존성의 문제, iv) 보상의 문제, v) 자원의 문제 등으로 보고, 분석의 틀을 i) 정책결정참여자의 변수로 목표와 퍼스넬리티, ii) 정책결정참여자간의 변수로 의사소통의 문제, iii) 외부환경변수로 정치적 상황, 지역적 특성, 언론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영월댐 건설을 둘러싸고 집단갈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검토한 오부영(2000)의 연구
 - 영월댐 건설 갈등의 당사자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민, 환경단체로 규정하면서 정책결정지연 분석과 집단갈등의 전개양상과 사례분석(건교부와 반대집단: 주민·환경단체·수물지역 주민, 지자체와 주민: 댐건설반대주민·수물예정 지역주민)

하면서 집단갈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검토함

- 영월댐 사례를 정부와 비정부조직의 정책경쟁 관점에서 분석한 홍성만(2000)의 연구
 - ‘댐개발 정책문제와 조직간 정책경쟁요인’으로 댐개발 문제의 논쟁적 성격으로 개발과 보존, 안전망과 위험으로 구분하고 ‘댐 경쟁정책에서 조직간 경쟁요인’으로 이념·이해의 정책문제의 상충성, 조직의 효능성, 정책참여구조 등을 설명함
 - 사례분석을 시계열별로 관료 쟁점화된 정책경쟁기, 사회 쟁점화된 정책결정기, 정치 쟁점화된 정책경쟁기로 단계를 구분하여 분석함
 - 정책의 수용성 증대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대상 집단 외에 ‘일반국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 강조함
 - ‘사회 제 집단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강조함
 -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시민단체 및 언론의 역할’이 막대함을 제시함
- 영월댐 건설사업과 새만금 간척사업의 비교연구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정책갈등을 분석한 최승태(2002)의 연구
 - ‘갈등의 변수’로 i) 정책결정 참여자 변수(목표), ii) 정책결정참여자간 변수(의사소통 문제와 전략), iii) 외부 환경변수(정치적 상황, 지역적 특성, 언론)로 구분하여 검토함
- 영월댐 건설사업과 새만금 간척사업을 비교하면서 정책변동요인 관점에서 연구한 김준현(2002)의 연구
 - 정책변동과정을 추진단계에 따라 i) 정책결정단계, 정책결정이후 갈등단계, ii) 정책종결여부 결정단계로 구분하여 정책결정과정·외부요인·지지연합간 상호학습을 비교하면서 ‘사업 착공여부(매몰비용과 경제적 의사결정, 기 집행된 사업비용과 정책의 경제성 평가, 기 집행된 사업비용이 사업재개 여부결정에 미친 영향), ‘사업에 대

한 사업지역 여론과 대통령의 지지여부(사업지역 주민의 여론, 정책종결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 ‘사업의 정치적 비중(해당사업이 주관부서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당사업이 갖는 정치적 비중)’, ‘공동조사단의 구성 및 결론 도출여부의 차이(공동조사단의 인적구성, 공동조사단내 결론도달 여부)’ 등을 비교·분석함

○ 영월댐 건설 사업과 새만금 간척사업을 비교·분석한 김종술(2002)의 연구

- 분석의 틀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하고 독립변수로는 ‘정책참여자의 변수’, ‘정책결정 참여자간의 변수’, ‘외부환경변수’로 세분하고, 종속변수로는 갈등당사자간 협상의 결과물 또는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제3자의 중재로 이루어진 결과물일 수 있음을 제시함
- 정책결정참여자인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식참여자인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비 공식참여자인 이익집단, 지역주민 등이 될 수 있으며, 정책참여자의 변수는 문제의 인지, 목표, 퍼스낼리티 등이 될 수 있음
- 정책결정참여자간의 변수로는 의사소통, 전략 등으로 구체화하고, 외부환경변수로는 정치적 상황, 지역적 특성, 언론 등을 제시함

○ 영월댐 건설사례를 시계열별로 제시한 정희성(2005)의 연구

- 시계열별로 i) 1·2차 폭발, ii) 갈등확산기, iii) 갈등잠복기, iv) 갈등재연의 전조기, v) 갈등재연기로 구분하고 갈등의 발생원인과 구조의 분석을 ‘주요 갈등 당사자와 입장’, ‘핵심이슈별 쟁점분석’, ‘갈등발생당시의 정치·경제·사회와 영향’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함
- 갈등해결노력의 적절성 분석에서는 갈등중재 노력에 대한 검토, 지역 및 중앙언론·환경운동연합·종교단체·중앙정부·국회·인터넷, 관련 정부기관의 입장과 역할로 구체화하여 분석함

(2) 도로·철도건설 분야

-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 사례를 분석·검토하면서 갈등의 전개과정을 다룬 정희성(2005)의 연구
 - 갈등의 전개과정을 i) 발아기(기본계획 및 설계단계), ii) 증폭기(환경영향평가), iii) 갈등기(공사중지 및 노선갈등), iv) 교착기(노선재검토 시기), v) 해소단계로 구분하고 분석의 틀을 갈등의 발생원인과 구조의 부족은 주요 갈등당사자의 입장, 핵심이슈별 쟁점분석, 갈등발생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적 영향으로 구체화함
 - 갈등해결 노력의 적절성 분석은 갈등중재 노력에 대한 검토, 제3자의 개입여부, 관련 정부기관의 입장과 역할로 세분화하여 분석함
 - 동 사례는 대통령과 불교계의 최종 합의로 갈등이 최종적으로 해소되었지만, 공공사업추진에 있어서 입지선정에 대한 합의형성과정의 중요성 인식, 주민과 전문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확대의 중요성 제시함
-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구간 공사사례를 분석한 김병섭(2006)의 연구
 - 정책추진 개요를 정족산과 천성산의 습지 등 생태현황, 보전연합과 개발연합의 형성 및 갈등양상, 공사의 중단과 재개, 대법원 판결과 그 이후로 구분하여 설명함
 - 정책단계를 정책형성단계, 정책홍보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환류 단계로 구분하여 영향요인 분석

(3) 환경·생태관리 분야

- 새만금 간척사업의 사례를 갈등의 전개과정을 통해 다룬 정희성(2005)의 연구
 - 갈등의 전개과정을 i) 새만금 간척사업의 시작, ii) 갈등의 잠재기, 갈등의 고조기, iii) 갈등의 절정기(민관 공동조사단 활동과 갈등 조정 실패), iv) 갈등의 지속기

(갈등의 장기화)로 구분하고 분석의 틀을 새만금간척사업 갈등구조의 분석, 주요 쟁점별 갈등당사자의 입장, 제3자 개입(민관공동조사단 활동)으로 구성함

- 주요 갈등당사자는 농림부, 한국농촌공사(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 전북출신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전북 토목업자 및 상공인과 일부 공무원, 전북지역기독교단체 등 개발 측 주체와 녹색연합·환경연합 등 환경단체, 불교·천주교 등 종교계, 민주노동·가톨릭 농민회 등 노동농민단체, 일부 지역주민, 세계자연보호기금 등 국제연대 등 환경보전측 주체로 구성됨

(4) 폐기물시설 등 비선호 시설 입지선정 분야

- 안면도 주민의 핵폐기물처분장 건설의 정책관여 과정과 동양화학 TDI공장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군산 시민의 정책관여과정 사례를 분석한 이승철(1993)의 연구
 - 분석의 틀은 정책대상 집단의 정책관여변수로서 정책자체의 변수(소망성, 정책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집행기관과 중간매개집단의 변수(집행기관에 대한 신뢰성, 집행기관에 순응확보수단, 정보의 공개성), 정책대상 집단의 변수(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배경, 정책대상 집단의 조직화, 정책대상 집단의 개인적 이해), 환경변수(대중매체, 관련 집단과의 연계, 정치체제의 특성), 정책관여 변수(태도, 행위, 행위정도)로 구분하여 분석함
- 서울시 노원구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사례를 분석한 한재원(1994)의 연구
 - 협상의 효과로서 협상의제의 타결범위, 협상목표의 달성, 결하이익 유무, 협상소요기간, 협상결과의 분배를 들고, 협상의 변수로서 협상주체의 대표성·자율성 변수, 협상목표 변수, 영향력 변수, 마감시간 변수를 분석함
- 공공정책결정과 주민저항에 관한 허석(1995)의 연구
 - 분석틀의 주요변수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주민저항의 원인으로 정부와

기업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주민의 피해, 정부의 주민에 대한 정보의 전달, 절차와 분배의 공정성, 기술의 적합성, 소극적인 정부협상태도, 주민의 이익, 외부단체의 역할을 설명하고, 소각장 운영의 적합성, 정부의 보상방법, 관료중심의 정부대응 모형(이해관계자, 정부의 대응)을 분석함

○ 핵폐기물 처분장의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대상 집단의 정책수용과 저항에 관한 김길수(1995)의 연구

- 안면도 전기·안면도 후기·청하·울산지역·굴업도 지역 입지선정 과정을 분석함
- 지역주민의 수용과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특성요인, 정책집행요인, 정책대상 집단요인, 정책환경 요인을 분석함
- 정책집행기관의 신뢰성, 경제적 보상제도, 홍보 및 참여제도, 정책의 일관성, 정책 대상 집단의 규모와 응집성·학습효과, 언론 및 환경단체 등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 강조함

○ 울진사례를 중심으로 한 핵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과 주민갈등사례에 관한 이종열 (1995)의 연구

- 저항운동의 주된 요인으로 심리적 피해의식, 지역적 운동조직이 형성되어 피해에 따르는 보상과 부정적 영향의 지역적 편중현상, 정치적 기회구조 등을 들면서 분석의 틀로 운동조직(리더십, 조직력, 응집성은 일종의 동원화 요인으로 운동조직의 강도에 주된 영향, 이슈의 성격 및 정당성은 운동가치 및 전략을 규정하고 운동조직 강도 규정)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기회구조(체제접근의 개방성, 정치적 제후의 안정성, 동맹과 지지집단)는 운동조직이 운동을 유발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주민저항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인)로 이해됨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 정책평가 용역에 대한 산업자원부 원전 사업기술단(2005)의 연구
 - 방사성폐기물입지선정 정공요인으로 유연성, 자율성, 유대감, 리더십을 갖춘 원전 사업기획단의 조직문화 역할을 강조함
 - 사업 1단계 성공의 정책요인으로 유연성, 적합성, 투명성, 실현가능성, 시의 적절성, 힘, 정당성, 일관성 등으로 분석함

(5) 기 타

- 충청남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사례를 탐색하고 유형화하여 향후 체계적인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한 충남발전연구원(2007)의 연구
 - 충청남도의 지방정부간 갈등이 발생, 증폭, 지속을 조장하는 원인을 도출하고 각 사례 유형별 갈등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함
 - 연구결과를 통해 충남의 갈등관리 비전과 과제 및 전략 포함하여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 비선호 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사례를 도출할 수 있는 갈등관리방안을 제시한 전주상(2000)의 연구
 - 사례연구를 통해 입지 갈등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경제적 요인, 위험관련 요인, 절차적 요인 등을 살펴볼 수 있음을 말함
 - 각각의 요인들은 보완 요소를 가지는데, 경제적 요인의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보상제도가 구비되어야 하고 위험관련 요인의 경우 안전규제가 확보되어야 하고 절차적 요인의 경우 주민 참여방안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설명함

- 비선호시설과 선호시설 사례를 분석하여 각각에 대한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한 김용철(1998)의 연구
 - 기피시설인 영광원전 5·6호기와 선호시설인 전남도청의 입지에 따른 갈등관계와 성격 등을 비교하여 각각에 대한 적절한 갈등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기피시설 경우에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 보상적 접근 방식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선호시설의 경우 긍정적 외부효과의 내재화를 위해 수혜자 부담적 접근방식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음

-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여 발생한 공공계획에 대한 국민의 신뢰상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대변화의 패러다임을 수용해야 함을 설명한 이왕건(2005)의 연구
 - 우리와 유사한 갈등문제에 직면하였던 캐나다 메이플리지 시의 사례연구를 통해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찰함
 - 캐나다 메이플리지 시에서는 계획 수립의 초기단계부터 이해당사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프로세스 중심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도 이러한 패러다임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서울시 버스개혁을 통해 나타난 갈등관리 전략을 분석한 송석휘(2005)의 연구
 -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서울버스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별다른 갈등의 표출 없이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던 배경을 연구하였음
 - 사례분석의 결과 이해당사자들을 아우르는 정책협의기구의 구성과 민주적, 공개적 운영, 직접협상 전략의 활용, 실질적이고 형평성의 보장, 홍보, 설득과 정책적 대결, 조정, 정책결정자의 리더십, 담당공무원들의 의지 및 열정 등이 갈등해결에 중요한 요소였음을 주장하였음

- 참여정부의 주요 환경갈등 사례의 분석을 통해 갈등의 해소와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및 기본방향을 도출한 김종호·이창훈·신창현(2004)의 연구
 - 경인운하, 새만금, 서울외곽 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구간,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한탄강 댐 등 참여정부가 선정한 주요 환경갈등 사례를 갈등의 원인에 따라 가치관 갈등, 이해관계 갈등, 사실관계 갈등, 구조적 갈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분석결과 위의 환경갈등 사례들은 가치관 갈등, 이해관계 갈등, 사실관계 갈등, 구조적 갈등이 혼재되어 있음을 설명함
-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갈등관리 요인을 찾아 분석한 박명현(2004)의 연구
 - 청계천 복원사업을 둘러싼 갈등관리 과정을 분석한 결과, 협상에 기반을 둔 갈등관리, 절차적 합리성과 사회적 정당성의 확보,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책임의 공유, 사전적인 갈등관리 등이 갈등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인임을 결과로 도출하였음
- 공공갈등 사례를 분석하여 갈등관리의 제도적인 접근을 모색한 나태준(2005)의 연구
 - 사례를 국내사례, 해외사례로 크게 나누고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하여 해외에서 이용된 사례의 도입과 현행제도의 개선 등을 살펴보았음
 - 현행제도의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 중 협상, 조정, 중재, 조정적 중재, 사실 확인, 조정촉진 등의 도입과 여러 프로그램, 참여적 갈등예방 기반인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시나리오 워크숍, 규제협상 등의 도입을 제안하였음
 - 이를 통해 갈등관리는 정책의 정부주도 방식 지양,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갈등지원법률의 확립,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위한 제도의 개선, 갈등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의 개발, 민간부문의 전문연구기관 육성,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종합적인 관점에서 갈등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연구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4)의 연구
 - 갈등을 지역갈등, 계층갈등, 노사갈등, 환경갈등 등으로 나누어 제도적·프로그램적 차원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여러 사례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음
 - 갈등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문화적 측면에서 시민사회 중심의 기반조성,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역간 불균형 해소, 정치체도의 변경 등을 제안하였고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갈등관리 관련 조직의 정비, 법령의 정비 등을 제안하였으며 프로그램적 차원에서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가, 일반인, 공무원 등의 교육 강화를 주로 제안하였음

- 다양한 접근을 통한 갈등관리방안을 제안한 McGregor(2002)의 연구
 - 다양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이러한 전략적 마인드의 방법으로 정치적 압박이나 유인 등을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접근, 경제적 보상 등의 경제적 접근, 이해관계자들의 목표, 위험요소, 비용 등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 접근을 설명하였음

- 갈등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분쟁 당사자간 의사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협상을 강조한 장영두(2001)의 연구
 - 비선호 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환경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안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제도화가 행정 분야에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함
 - 구미시와 춘천시의 소각시설 갈등을 사례로 하여 대안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협상에 기초한 환경갈등해결 법규와 조례의 제·개정 필요, 협상문화의 정착, 조직의 수평화, 정보공개, 사후운영관리방안의 도입, 전문 인력의 확보, 홍보, 모형의 개발 등이 요구됨을 주장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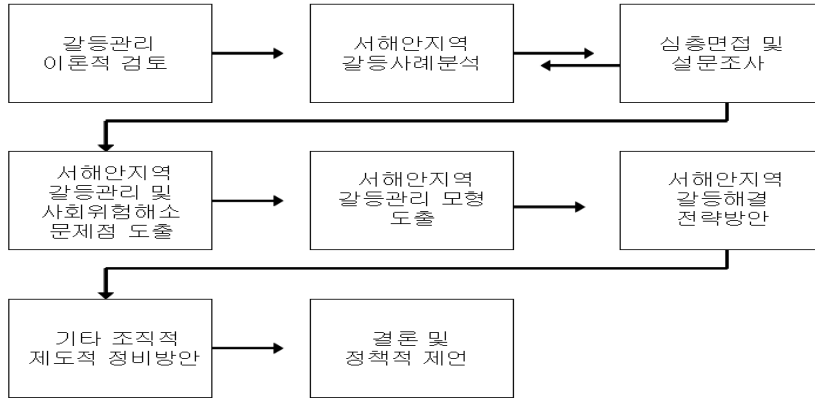
- 지역간 환경분쟁 사례를 분야별로 분석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한 정희성(1997)의 연구
 - 지역간 환경분쟁에 대한 이론의 정립과 제도의 분석을 통해 환경분쟁의 예방과 조정 방법을 살펴보고 사례를 수질 및 수자원, 비선호 시설, 자연환경보전지역, 환경협상에 의한 분쟁조정 등의 분야로 나누어 폭넓게 분석하였음
 - 이를 통해 지역간 환경분쟁 예방 및 해결의 기본방향은 국민의 불신해소, 정부간 역할 분담체계의 재정비,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환경관리재원의 조달과 배분원칙의 확립, 환경정보의 대중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고려 등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
 - 이를 바탕으로 환경분쟁 예방과 해소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혁, 환경관련 국고지원체계의 개혁, 주민참여의 촉진, 환경피해 보상제도의 강화, 협상을 통한 환경분쟁의 해결 촉진, 환경협상 유인책의 창출 등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외국의 환경갈등 사례의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나성란·김용건(1997)의 연구
 - 외국의 분쟁사례를 사법적, 협상, 중재에 의한 해결 사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갈등관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환경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개발하고 정형화해야 하며 분쟁 해결방법은 협상, 중재, 사법적 해결의 순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주장함

3) 선행연구의 시사점

- 국내의 갈등관리연구에 있어 선행이론연구는 서구중심의 갈등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여건 등이 상이하고 우리나라처럼 타협과 조정, 협상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는 실정에 잘 맞지 않거나 갈등이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구이론에 대한 의미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론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기존의 사례중심 연구도 단순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상 사례도 영월댐 건설사업,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선정, 새만금간척사업 등 특정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어 연구의 내용에 있어서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다양하지 못한 실정임
- 기존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지선정, 환경 등에 따른 갈등을 주로 연구한 기존의 선행연구사례를 통해서는 지난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와 같은 재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갈등요인과 관리전략을 이해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
- 그리고 기존의 대부분의 사례 연구는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 과정에 관한 갈등 등으로 공공사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 상황 역시 여건과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어 유사한 갈등사례라 하더라도 갈등의 양상과 관리전략이 상황에 따라 달라 이를 분석하여 일반화된 이론으로 정립하거나 갈등관리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갈등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갈등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갈등의 해결을 위한 대안 또는 정책적 대안 제시에 머무르고 있어 갈등의 확산이 사회 위험으로까지 연결하는 거시적 관점이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타 선행 공공사업의 갈등관리와는 다른 갈등요인과 갈등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해안 유류 유출 사고를 둘러싼 갈등요인과 갈등관리전략 및 갈등관리수단 분석을 통해 본 사건의 갈등관리 특징을 도출하여 향후 서해안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된 갈등 해결의 실마리 및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갈등과 갈등의 사회위험으로의 확장성까지 염두하여 갈등관리 및 사회위험 해소에 대해 예비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외적인 갈등 및 사회위험 실태를 분석하여 서해안 지역 갈등관리 및 사회위험해소 사례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충남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5. 연구의 분석틀



〈그림 2-1〉 충남지역 갈등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의 분석틀

- 지난 90년대 이후로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화하는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정보화를 통한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권리의식이 고양되어 갈등이 복잡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허베이 스프리트호 사고로 서해안 지역 산업,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지역 내 주민과 주민 간 또는 마을과 마을 간의 갈등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음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지역을 비롯 충남 지역의 갈등 및 사회위험 사례의 실태의 파악·분석을 통해 갈등관리의 기본방향을 도출하고 서해안 지역 및 충남 지역의 갈등관리를 위한 모형 구상 및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와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경험적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해안지역 갈등사례를 분석하고,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병행하고자 함
- 그리고 서해안지역 갈등관리 및 사회위험해소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해안지역 갈등관리 모형을 도출, 갈등해결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조직적·제도적 정비 방안을 강구함

제3장 국내의 갈등 및 사회위험 실태 분석

1. 국내의 갈등 및 사회위험 실태 분석

1) 동강댐 건설 갈등사례

(1) 사건 개요

① 내 용

- 1990년 9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남한강 지역의 심각한 홍수재해는 남한강 상류 동강지역에 다목적댐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됨
- 9월 10일에서 12일까지 3일간에 걸친 집중호우는 남한강 중하류 지역인 영월과 단양의 침수는 물론, 이 지역에서만 1만 3천명의 이재민, 618정보의 농경지 침수, 그리고 689억 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킴
- 정부는 이러한 남한강 유역의 홍수피해 원인을 남한강의 홍수 조절능력의 한계로 이해함. 즉 북한강의 유역면적은 10,899km²로 남한강의 12,929km²보다 좁은 데도 한강유역의 산업화 과정에서 개발된 화천댐과 소양강댐 등 7개의 댐이 있어 북한강의 홍수 조절능력은 9억 8천 톤인데 비하여, 유역이 넓어 홍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한강의 경우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댐이 충주댐 하나로, 홍수 조절능력이 북한강 유역의 63%인 6억 2천 톤에 불과해 홍수기 홍수 조절에 한계를 나타냄으로써 영월, 영천, 단양 등 남한강 중하류 지역들이 매년 홍수피해를 경험하여왔고, 1990년 홍수재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임
- 홍수피해에 대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는 1990년 11월 한강수계에 있어 항구적인 재해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남한강 상류인 동강에 다목적댐의 건설

을, 대통령의 인가를 바탕으로 하여 제시하게 됨

- 이런 정부의 동강댐 건설 사업은 1990년대 초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 당위성을 얻게 됨
- 정부는 산업활동의 세계화(industrial globalization) 현상에 대비하여 수도권에 영종도 신공항과 아산항만 건설 등 전국의 7개 광역지역에 새로운 공항, 항만, 그리고 산업단지 등의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계획하였는데, 이런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증가는 새로운 용수 수요를 야기하여 2000년 초 용수 부족 문제가 제기됨
- 한강권역의 경우 2001년에는 3억 톤, 2006년에는 5억 톤, 그리고 2011년에는 11억 톤의 용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함
- 그러므로 정부는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용수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적 수자원 개발을 위해 동강댐을 비롯한 11개의 새로운 댐 건설을 1991년 제3차 수자원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게 됨
- 정부에게 동강댐 건설은 남한강 중류지역인 영월, 단양, 충주, 여주와 수도권 지역의 홍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임과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최상의 수단임
- 그러므로 정부에 의하면, 동강댐이 건설되지 못하면 한강유역의 시민과 생명과 재산이 홍수재해에 위협을 받으며, 수도권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나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어렵고, 2005년 이후에는 제한적 급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② 연 혁

- 1920년 조선의 하천조사사업에 의거하여 수력발전용 댐 건설의 후보지로 남한강 상류 동강의 댐 건설이 처음 제기된 이후, 동강댐 건설은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이한 필요성에 의해 제기됨
- 1970년대 이전에는 전력생산을 위한 수력발전용 댐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57년과 1958년, 그리고 1964년 전력공사, 스미스 한치만 그릴스(주), 국토건설청에 의한 전원개발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각각 행하여졌고, 1970년대와 1980년대

엔 유류과동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에 의거하여 건교부, 현대건설(주), 그리고 전력공사에 의해 댐 건설 계획들이 마련됨

- 하지만 이러한 동강지역의 댐 건설 계획들은 1970년대 소양강댐과 안동댐 건설로 인한 정부재정의 어려움과 1980년대 중반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백룡동굴의 수몰과 관련된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갈등 등의 이유로 보류됨
- 1990년 홍수재해를 계기로 동강지역에 댐 건설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어 1990년 12월부터 1992년 7월까지 동강댐 건설과 관련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는 1993년 동강댐 건설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처음 발표하였는데, 사업의 내용은 1997년 환경영향평가가 초안의 발표 후 댐 높이 등에서 약간 수정되었음. 동강댐 건설 사업을 위해서 정부는 동강유역 22.7km²에 1997년 9월 22일 공식적으로 댐 건설 예정지를 지정·고시함

③ 사업 기대 효과

-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계획에 의하면, 동강댐의 용수공급량은 연간 367백만 톤으로 한강수계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을 4,692백만 톤에서 5,059백만 톤으로 증가시킴으로써 2000년대 수도권의 용수부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2억 톤의 홍수 조절기능으로 인해 홍수시 한강인도교 지점의 수위를 약 21cm정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한강의 홍수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으며, 연간 126백만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연간 41억원의 유류대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제시함
- 더욱이 동강댐 건설 지점의 평균 유하량은 5.2m³/s이나 댐의 건설로 인하여 유하량이 32.26m³/s로 증가하여 하천 하류의 수질개선과 친수환경 조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동강댐 건설사업 자체는 연인원 65만 명이 투입되어 신규고용의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공헌할 것이라고 기대함

(2) 갈등 발생기

① 중앙정부 (건설교통부)

- 1990년 홍수피해 후, 건교부는 남한강의 홍수 조절능력의 한계를 이유로 동강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 댐이 남한강의 중하류 지역(특히, 영월과 단양 지역)의 홍수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함
- 정선 주민의 역류 우려에 대해, 건교부는 동강댐의 홍수시 만수위는 289.6m이고, 이로 인한 역류는 295.6m 지역까지 도달하나 이 지점은 정선군청 지역에서 4.7km떨어진 지점으로 정선군엔 피해가 없다고 대응함
- 건교부는 댐 높이를 103m에서 98m로, 홍수시 만수위를 289.6m에서 287.3m로 조정함. 이런 조정에 대해 정선 주민들은 홍수시 만수위의 조정은 실제 설계의 변화가 아니라, 댐 건설 후 조작시 고려한다는 것이고, 비록 2.3m를 줄였지만 역류피해는 정선병원 즉 정선의 도청소재지까지 미친다고 주장함
- 역류와 별도로, 건교부의 환경영향평가초안(1996)은 댐 안정성과 관련된 건교부와 영월 주민간의 새로운 갈등을 야기 시킴. 댐 예정지의 지질학적 조건으로 인하여, 영월 주민들은 댐의 누수와 붕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음
- 이런 우려에 대해 건교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단지 댐 기반에 대한 지반강화와 그라우팅에 의한 차수대책만이 언급되었으며, 이에 주민들은 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고, 댐 지역에서 지진활동이 빈번함으로 이로 인한 댐의 붕괴가능성을 제시함
- 이에 건교부는 댐의 기반은 석회암이 아니라 사암 등 댐을 지탱할 만한 견고한 토질이기에 댐의 붕괴 가능성은 없으며, 조사에 의하면 누수의 가능성은 없으나, 만약 발견시 그라우팅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누수의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고 설명함
- 또한 지진과 관련, 댐 설계시 높은 방진기준을 적용하고,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댐 형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함

② 지역주민

■ 정선·영월주민

- 이런 건교부의 논리에 대해 정선 주민들은 1990년 홍수피해의 원인은 남한강의 홍수 조절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충주댐의 수문조작 실패로 인한 수위조절의 실패에 있으며, 더욱이 동강댐 건설은 정선지역의 홍수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역류로 인해 도리어 홍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함
- 정선 주민에 의하면, 1990년 홍수시 충주댐의 계획홍수위보다 9m 높은 영월, 영천, 단양 지점이 침수하였으며, 또한 강원도가 발행한 한강관리 기본계획(1990)에 의하면, 295.6m 지점은 정선군청에서 4.7km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선 제1교 지점으로 정선군이 바로 피해를 입는다는 것임

■ 수몰 예정지의 주민

- 정선과 영월의 주민들과 달리, 수몰 예정지의 주민들은 댐 건설과 관련된 보상에 대비하여 자구책의 일환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작물과 유실수를 식목함
- 하지만 동강댐 지역의 보상에 앞서, 건교부는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1997)을 통하여, 지난 3년간 실제 수확을 가져온 작물과 유실수만 보상이 가능토록 함
- 이에 주민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1991년부터 시작된 정부지원 중단에 기인한 것이며, 유실수 등의 식목은 자신들의 삶의 안정성을 찾기 위한 자구노력이기에, 시행령의 개정은 개악이라고 주장함

(3) 갈등 확대기

① 중앙 환경 단체들의 참여

- 동강댐 건설과 관련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과 별개로, 1993~1995년간의 자연재해를 계기로 건교부는 1996년 제3차 수자원 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하였는데, 이 개

정 계획에 의하면, 국민의 삶의 질,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으로 2000년대 초에는 전국적으로 극심한 물 부족이 예상되고, 또한 엘니뇨나 라리냐 등의 이상기후 현상의 증가로 빈번한 홍수피해가 예상되기에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6개의 댐 외에 28개의 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제시함

- 이러한 댐 건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비 증가, 수몰민의 반발, 지역 이기주의로 댐 건설이 지체된다고 판단한 건교부는 댐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목적 댐 법을 대체할 댐건설촉진법을 국회에 제출함
- 이 같은 건교부의 물 관리능력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건교부가 국민 삶의 질과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물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댐을 통한 수자원의 개발과 공급에 진력하고 있지만, 경제적 수준이 높은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우리보다 물 사용량이 적은 것에 비추어 건교부의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건교부의 용수 예측 또한 계속적인 댐 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다계산으로 평가함
- 특히, 환경운동연합에 의하면, 2011년에 예상되는 5.1억 톤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건교부는 324개의 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1억 톤의 물은 수요 관리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고 2.5억 톤은 건교부의 과다한 수요 예측 이라고 주장함
- 환경단체들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문제는 이런 잘못된 가정과 용수 수요의 과다 예측으로 인한 불필요한 댐의 건설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 환경이 수장된다는 것임. 더욱이 이들 단체들은 댐 건설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 중인 댐건설촉진법이 댐의 건설로 인해 생태계,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댐 건설과정에 지자체, 지역주민, 그리고 환경단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생태계 파괴뿐만이 아니라 참여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며, 지자체의 자치권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러한 이유들로,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건교부의 댐 건설계획들은 백지화 되어야 하고, 댐건설촉진법의 제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물 관리방식은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요구함

② 지역주민 - 환경단체 연합의 형성

- 동강댐 건설과 관련된 정책 결정과정에 중앙 환경단체의 참여는 이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영월)간 그들의 상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합을 가능케 하고, 상이한 쟁점들의 통합을 가져왔으며, 특히 동강댐을 둘러싼 갈등의 성격을 생존권을 둘러싼 지역적 갈등에서 물관리 방식의 전환을 통한 환경생태계의 보전이라는 시민운동으로 전환시킴
- 건교부와 환경단체·지역주민연합(coalition)간엔 댐의 안정성, 생태보호, 그리고 물관리 방식을 둘러싸고 대립적 관계가 형성됨
- 댐의 안정성과 댐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관련 환경단체·지역주민연합은 건교부의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적합성과 불성실성을 비판하고, 이 영향평가서를 제작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이를 감독한 수자원공사 사장의 해임을 요구함
- 댐의 안정성과 관련, 건교부는 비록 44개의 동굴과 지하터널이 댐 예정지에 존재하지만 동굴은 댐의 담수 수위보다 높는데 위치하고, 지하터널은 세일이나 사암 등의 불투수층으로 둘러싸여 누후의 위험이 없다고 설명함
- 지진과 관련해서는 국제 대담 위원회에선 진도 6.5이하의 지진은 댐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나, 건교부는 동강댐 건설시 보다 강화된 방진기준을 도입하여 댐을 설계할 예정이라고 대응함
- 댐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관련하여 건교부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는 개발활동의 기여가 아니라 환경과 조화된 개발이며, 동강댐 건설은 이런 지속가능한 개발의 일환이라고 강조함
- 건교부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댐 건설로 인한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댐 건설 예정지에 서식하는 중요 동식물의 이전을 추진할 것이고, 댐의 건설 후 건기에 매 초 32톤의 물을 방류하여 하류의 생태계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수질을 보전하며, 더욱이 댐으로 인해 담수호가 생겨 댐 주변은 하천과 호수를 동시에 가짐으로써 동식물의 다양성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 주장함
- 1998년의 한강유역의 홍수피해는 건교부와 환경단체·지역주민연합 간의 물 관리 방식에 관한 본격적 논쟁을 야기 시킴

- 건교부는 안양천과 중랑천 유역에서의 홍수피해는 이들 유역에 위치하는 도시들에서 물을 한강의 지천들로 제때 배수하지 못한 데 기인하며, 이런 배수의 어려움은 홍수시 이들 지천들과 한강 본류의 수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또한 하류에 위치한 도시들에서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선 강 상류의 댐들이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을 통제하여, 하류 지천들의 수위를 조절하여야 하나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엔 댐의 숫자가 너무 적다고 지적함
- 이런 건교부의 해석에 환경단체·지역주민연합은 홍수피해의 원인은 댐의 유무가 아니라 지천에 내린 게릴라성 강우와 인천만의 만수에 기인한다고 반발하며, 홍수피해의 경감을 위해선 대형 다목적댐이 아닌 소형 홍수방지용 단일목적의 댐으로 홍수 상류의 물을 조정하고, 중하류에선 논이나 초지의 저수능력을 이용해 강의 수위를 조절하고, 도시 내에선 저류탱크를 이용하여 물을 통제하면 된다고 제안함
- 이런 대안적 방법들에 대해 건교부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대응하였는데, 예를 들어 동강댐 규모의 홍수조절 능력을 위해선 1,000만 톤 규모의 홍수조절용 댐이 70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적지도 없으며 이를 건설, 운영하는 데 동강댐보다 많은 인력과 자본이 필요하다고 논박함
- 이런 홍수관리에 관한 논쟁은 자연히 용수관리로 이어졌는데, 건교부에 의하면 인구 1인당 1일 물 사용량, 공단의 증가로 인하여 현재의 물공급 능력으로는 2000년 초반의 물 부족을 감당할 수 없기에 28개 새로운 댐의 건설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 이에 환경단체·지역주민연합은 건교부의 용수 수요 예측 자체가 과다 산정되었다고 반발함
- 즉 산업용수의 경우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1994년까지 8.8% 증가하였고, 이 증가율을 바탕으로 2011년의 산업용수 수요를 예측하면 3억 1천만 톤인데 건교부의 경우 4억 5천만 톤으로 계산 되었으며, 생활용수의 경우 1994년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을 408리터로 계산하여 2011년에는 480리터로 증가한다고 하는데 실제 1994년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206리터였다는 것임
- 환경단체·지역주민연합의 기본적 주장은 물 부족은 수요관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임. 즉, 1996년 현재 생산된 수돗물의 16.2%가 1975년 이전에 설치된 수도관을 통하여 누수 되는데, 수도관을 교체하여 누수율을 10%로 낮추면 600만

톤의 물이 절약되고, 원가에 못 미치는 수도요금을 25%정도 증가시키면 1억 3천 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임

-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금까지 1인당 1일 예측 물 사용량과 실제 사용량은 거의 일치하여왔고, 1980년 이래 1인당 1일 물 사용량은 매해 3.4%씩 증가하였으나 2011년의 1일 물 사용량의 계산에는 최저 증가율인 0.8%를 대입하였기에 용수 수요가 과다 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물 관리 대체수단들에 대해서, 실제 전국적으로 생산된 수돗물의 14.8%가 누수되고 있으며, 누수율을 10%로 낮추면 280만 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4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런 자금을 투입하고도 물 부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 또한 물의 사용은 가격 보다는 소득과의 탄력성이 높기에 물 가격이 10%증가하면 물 소비는 80%증가하며, 즉 가격에 의한 물 절약은 제한적 효과를 가져 올 뿐이라는 것임. 따라서 건교부의 근본적 주장은 수요관리를 통해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임

(4) 갈등 완화기

- 갈등 완화기에 들어서 갈등쟁점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출현하게 됨
- 동강댐의 건설과 관련 건교부와 댐 건설 반대론자 간의 댐 안정성, 환경파괴, 그리고 물 관리 방식에 관한 논쟁은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대신 이들의 주장을 지켜보던 댐 건설 관련부처, 정책연구소, 사회단체, 국제 환경단체, 언론 매체, 여론 등의 그들 주장에 대한 평가를 불러옴
- 동강댐의 건설과 관련된 댐의 안정성, 동강의 생태파괴, 그리고 물 관리 방식에 대한 건교부와 환경단체·지역주민 간의 논쟁에서 지배적 여론이 환경단체·지역주민연합의 견해를 인정하고 이를 공유하였기에 건교부와 동강댐 반대론자 간의 대립적 사회관계가 형성됨
- 더욱이 환경단체·지역주민의 견해가 지배적 여론이 됨으로써 동강댐 건설과 관련된 문제가 수자원 개발과 홍수예방에서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생존권(댐의 안정성)으로 확대되어, 동강댐 건설 결정과 관련된 권한이 건교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전됨

① 환경부

- 환경부는 건교부의 환경영향평가가서가 동굴을 통한 누수 등 댐의 안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고, 수달과 비오리 등의 누락 등 동강의 생태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건교부의 용수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서의 재제출을 요구함
- 특히 동강댐 건설로 인한 개발이익과 생태파괴 등의 비용을 계량적으로 비교한 연구를 포함하도록 요구함

② 환경포럼(국회의원으로 구성)

- 국회의원 50명으로 구성된 환경포럼은 댐의 안정성, 동강의 생태, 그리고 물 관리 방식에 관한 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국회에 건의하고, 문화재국과 임업연구소는 댐 건설 대신 동강지역을 원시림 보호수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함

③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내재된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수자원 연구의 연구는 누수 가능성을, 방재연구소의 연구 자료는 지진으로 인한 댐 붕괴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시함

④ 사회단체

- 각종 사회단체들(207명의 소설가와 시인들, 라디오와 텔레비전 PD연합, 교사협의회, 천주교와 불교 등 종교단체 등)도 자신들의 동강댐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의 의견은 동강의 자연미와 생태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댐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됨

⑤ 환경단체

- 또한 지구의 벗들(Friends of Earth)등 국제 환경단체들도 동강이 람살 조약에 의해 규정된 보전해야 할 중요 습지의 조건을 충족하기에 댐 건설을 제고할 것을 제의해옴

⑥ 언론매체

- 이런 사회 분위기에 맞추어 신문이나 TV등의 언론매체들도 댐의 안정성 문제, 동강의 생태계 파괴, 기존 물관리 방식의 문제점 등을 보도하면서 동강댐 건설의 제고를 촉구함
- 『한국일보』(1999. 3. 14), 『하이텔』(1999. 5. 8~11), 그리고 『넷츠고』(1999. 5. 10~15)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0%, 82%, 그리고 91%가 동강댐 건설에 반대하고, 『한국일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5%가 댐 건설을 결정할 때 물 부족이나 홍수예방보다 댐의 안정성과 생태계의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⑦ 지방자치단체

- 동강댐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인식한 지자체들은 행정적 노력을 댐의 건설로 인한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댐 건설에 따르는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어내는 데 전력하였는데, 중앙에서의 동강댐 건설에 대한 지배적 사회여론이 반대로 기울자 지자체도 기존의 태도를 바꿈
- 영월군과 정선군은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동강댐 건설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고, 강원도는 동강댐 건설이 지역에 이익보다는 피해를 주는 중앙정부의 파벌정책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분명히 하였음
- 특히 강원도지사의 반대표명은 강원도 내 사회단체와 시·군이 잇달아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계기로 작용함

2) 서울시 청계천 복원 및 개발사례

(1) 사건의 개요

- 청계천복원 논의의 본격적인 시작은 2000년 ‘청계천살리기 연구회’가 결성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음¹⁾. 그 후 청계천살리기 연구회(청계천연구회)는 2002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청계천 복원의 필요성을 알려왔고 복원의 내용과 의미를 심화시킴
- 청계천연구회의 청계천복원논의는 단계를 거듭 할 수록 논의 대상을 단순히 청계천 복원 그 자체에서 주변부 개발과 서울시 전체의 문제로까지 확대시켜가는 한편, 연구자들의 확대 조직화와 함께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와 교류하면서 복원사업의 실현을 구체화시킴
-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명박 후보는 연구회를 통해 선거공약으로서 청계천복원사업을 채택하면서 이의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함
- 청계천연구회에서도 본격적인 이슈화가 시작된 2002년 4월 30일부터 청계천 복원에 대한 정당성을 언론 매체를 통해 다각도로 알렸으며, 이들의 이러한 역할은 사업의 실현까지 지속됨
- 청계천복원논의의 확산에 또 다른 영향을 끼친 것은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임
- 『한겨레』는 2002년 3월 28일~29일 실시한 청계천 복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4월 9일자 지면을 통해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서울시민 중 74.6%가 이것을 지지하고 있고, 청계천 주변과 그렇지 않은 지역 모두에서 고른 찬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임
- 또한 대안사회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연합’은 청계천 복원에 ‘도시미소상’을 수여함으로써 ‘청계천복원’에 환경적인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함(강정훈, 2003)
- 한겨레 여론조사와 녹색연합의 시상은 청계천복원사업이 초기단계에서의 논의과정과 준비과정에서 별다른 사회적 논란 없이 진행되게 된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음

1) 「청계천살리기연구회」는 연세대 노수홍 교수와 소설가 박경리씨가 초기 논의를 시작하고 황기연 연구원(시정개발연구원), 정동양 교수(한국 교원대), 이무춘 교수(환경계획) 등이 중심으로 결성하였음.

(2) 갈등 발생기

- 청계천 복원 및 개발과정에서 초기의 청계천 복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집단간 갈등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울시와 주변 상인 및 노점상과의 이주 및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 역사 및 문화 복원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민단체간의 갈등 등 다양한 쟁점을 사이에 두고 갈등이 전개됨
- 또한 이러한 갈등의 과정에서 서울시, 시민단체, 상인 및 노점상,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등 각종 전문위원회, 그리고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과 협력과정이 전개됨
- 청계천복원사업에 있어서의 갈등은 2002년 6월 서울시장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청계천 복원의 실현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에서부터 시작되어 2003년 2월 12일 기본계획발표 이후 벌어진 환경복원 논쟁과 상인·노점상 대책 논쟁, 그리고 2003년 7월 1일 착공을 앞두고 벌어진 착공시기의 타당성 논쟁과 착공 이후의 역사복원 원칙에 관한 논쟁 등으로 이어짐
- 청계천 고가 철거에 따른 교통대란 논쟁을 둘러싼 갈등은 그 본질상 교통문제 자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복원사업의 찬반여부와 복원공사 착공시기 문제를 둘러싸고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강함
- 이명박 후보가 청계천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에는 청계천 고가도로와 청계천 복개도로를 철거하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청계천을 복원해서는 안 된다는 복원불가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로, 그리고 서울시에서 청계천복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03년 7월 1일 철거공사에 착공하겠다고 하였을 때에는 공사 착공을 연기해야 한다는 시기조절론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제시된 것으로 서울시의 대책이 미흡하여 엄청난 교통 혼잡, 즉 교통대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함

① 청계천 주변 상인들

- 청계천주변상인 대책을 둘러싼 갈등은 청계천주변상인들과 서울시 사이의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과정을 보여 주는데, 상인문제의 해결이 첫 출발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결코 아니었음

- 청계천 상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청계천복원사업이 서울시장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되고 서울시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그저 먼발치로 지켜보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듣는데 만족해야 했을 뿐 실제 정책의 제로 채택되는 과정에는 참여하지도, 의견을 반영하지도 못하였으며, 더구나 당시에는 언론도 시민단체들도 상인들의 문제에는 큰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으며, 그 이후 서울시에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도 상인들은 특수이익을 대변하거나 상인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할 수 없었음
- 사업초기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상인들은 공식적 만남과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인간적 신뢰를 쌓아가는 한편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함께 상인대책을 만들어가고 마침내 합의에 이르게 됨
- 노점상들은 청계천복원공사 착공연기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나 민주노동당등과 연계하여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며 공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은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착공을 하루 앞둔 6월 30일 전국노점상총연합과 서울노점상연합은 “풍물시장을 만들거나 전업을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을 믿고 공사 반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됨

② 서울시

- 청계천주변 노점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노점상도 상인이기는 하지만 공공의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상인들과는 판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애초부터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노점상 대표들은 “노점상에 대해 불법이니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가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철거방침을 발표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경고를 반복함
- 마지막으로 역사복원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은 당초 가장 쉽게 일반원칙에 합의하고 또한 가장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을 문제가 갈등으로 발전되고 그 갈등이 악화되어 참여자들의 감정대립까지도 비화된 것이 역사복원문제임

③ 시민단체 · 역사학자

- 역사복원을 둘러싼 갈등은 현실론을 주장하는 서울시와 이상론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역사학자들 간의 '목표의 기대수준'에 대한 갈등이었으며, 역사복원을 둘러싼 갈등은 청계천복원공사 전에 역사복원의 원칙과 기준이 합의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함
- 서울시나 시민위원회 역사분과위원들 간에 복원의 기준과 대상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디까지 복원할지 충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 참여자 그룹 간에 목표와 기대를 달리한 채 복원공사가 시작되다 보니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현실론이 최대한 원형 원위치 복원을 주장하는 역사분과위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고, 서울시는 역사복원을 할 의사조차 없다는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이러한 불신은 복원정책 전반과 이명박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됨

(3) 갈등 확대기

- 지역주민과 서울시간 청계천 복원 및 개발을 둘러싼 갈등사례에서는 개발과 보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상충성, 지역 주민 및 주변 상인들에 대한 보상 문제, 그리고 문화재 복원을 둘러싼 찬성집단과 반대집단간의 의견차이가 주요 갈등 원인으로 나타남
- 이러한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지적할 수 있음
- 청계천 복원사업은 경제적 이해관계 이외에도 환경복원 관련 논쟁 및 역사복원의 원칙과 관련된 논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문화재 복원과 관련된 갈등은 문화재의 복원시기, 복원범위 등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시민단체, 시민위원회, 문화재청 등 다양한 조직들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함
-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갈등의 성격을 보면 먼저 청계천 복원 사업은 지역 개발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지역개발의 내용이나 방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이해관계의 차이는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음. 또한 청계천 복원사업은 개발이 완료될 경우 개발의 이익이나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책추진집단과 지역주민간의 갈등 보다는 지역주민과 복원사업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주변상인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즉 청계천 복원사업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긍정적 외부효과로 인식하는 집단과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식하는 집단이 모두 나타나게 됨
- 따라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갈등은 서울시, 상인 및 노점상, 지역주민, 시민단체, 시민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쟁점별로 상충되면서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됨

① 청계천 주변 상인들

- 청계천 주변의 상인들은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비용이나 위협이 청계천 복원 이후의 이익보다 높다고 판단하여 청계천 복원반대 운동을 전개함
- 청계천 상인들과의 갈등은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상인들의 이익축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청계천 노점상과의 갈등은 상권을 사수하려는 노점상들과 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위해 노점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대립되었기 때문임
- 청계천 상인들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은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원천으로 작용하였으며, 청계천 추진본부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정책회의를 통하여 복원사업에 관한 내부의 의견조정과 정책의 추진일정을 점검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려고 함

■ 청계천 주변 주민·상인협의회

-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 민원사항 처리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 청계천 주변 상인대표와 지역주민, 시·구의회 의원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청계천 주변 주민·상인협의회를 구성함

- 또한 청계천 복원사업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청계천 상인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
-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청계천복원본부가 구성된 이래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항으로 공청회, 시민위원회, 주민·상인협의회, 정책협의회, 사업설명회, 현장민원상담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수행됨

② 위원회

-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그리고 청계천 문화재의 복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계천 역사복원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청계천 문화재 시굴조사 지도위원회, 청계천 문화재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청계천 문화재 보존 전문가위원회, 그리고 문화재청 소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함
- 즉 청계천 사례의 문제해결과정을 보면 갈등의 쟁점별 이해당사자들의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당사자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

- 먼저 서울시는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 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를 구성함
- 시민위원회는 조사연구와 심의권을 가진 의결기구로 사업추진에 대한 전문성 보완과 비판기능, 시민사회와 정부 조직간의 연계를 통한 갈등 완화에 기여하였으며, 청계천 복원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함

■ 전문가위원회

- 또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서울시는 문화재 복원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기 위하여 청계천 역사복원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함

■ 청계천문화재보존 전문가위원회 · 문화재청소년위원회

- 그리고 문화재 복원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청계천문화재 보존 전문가위원회와 문화재청소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함. 또한 지역주민 및 상인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계천 지역주민·상인협의회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지역주변상인협의회

- 지역주민상인협의회는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인근 4개구의 지역주민, 주변상인,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계천 복원사업의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구성하였으며, 지역주민 및 상인의 의견수렴, 시민통행 및 영업 불편 최소화 방안, 복원에 반대하는 상인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대화채널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주대책, 재개발방안, 상권 활성화 등에 대하여 논의함

■ 정책협의회

- 정책협의회에서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보상문제, 합의안 도출, 사후 운영관리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익과 직접 관련된 문제를 논의해 나감

(4) 갈등 완화기

① 서울시

-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청계천 상인들의 불안 및 반대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함
- 홍보 전략을 보면 1단계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가능성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홍보와 의견수렴 및 충분한 사전검토,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홍보를 하였고, 2단계에서는 복원방법, 시공방법 등에 대한 공학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홍보와 생태하천 복원의 가능성 검증을 통한 홍보, 그리고 주변 생태공원, 문화 공간 등 이미지 창출을 통한 홍보를 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복원 이후 서울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21세기 선진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을 통하여 홍보함
- 또한 안전과 인간 중심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활용하여 복원 후의 쾌적한 청계천의 모습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유도하였음
- 그리고 홈페이지, 시청사, 지하철 광고, 팸플렛, 반회보 등에 시각적인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도시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문화와 역사가 되살아나는 청계천, 자연이 숨 쉬는 청계천, 강남·북 균형개발과 동북아의 허브 형성 등의 슬로건을 통해 시민들에게 청계천 복원의 정당성을 호소함
- 그리고 청계천 투어를 통해 청계천 복원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며, 교통방송을 통하여 청계천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청계천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서울시는 청계천 상인 대표들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함
- 즉 청계천 지역주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22회 개최하여 복원사업의 안내 및 이해관계자의 건의사항, 의견을 청취함
-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의 과정을 보면 청계천 복원 추진조직 및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역할을 명확히 부여함

■ 청계천 추진본부

- 먼저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계천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 복원행정기획단은 복원의 기본계획, 복원, 그리고 교통대책 업무를 관장하도록 역할을 부여함
 - 복원사업추진단은 청계고가 및 도로철거, 하천수 유입 및 생태복원, 그리고 도시계획 및 건설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부여함

■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 또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을 설치하여 청계천 복원의 기본방향, 사업계획, 문화계획, 복원계획, 교통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시민홍보, 그리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부여함
-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조사·연구 및 심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본 위원회 산하에 6개 (전문)분과위원회²⁾를 둠
- 이와 같이, 각 이해당사자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역할을 선정하였으며, 문제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위원회가 수행할 역할을 분담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감
- 결국 청계천 복원 사업은 추진본부, 복원연구단, 시민위원회가 각각 집행, 연구, 심의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결국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의 과정을 보면 문제해결과정에서 다양한 문제해결 기구를 만들고, 각각의 조직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분담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감
- 결국 청계천 복원사업을 위하여 서울시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절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감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음

2) 상세한 내용은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참조.

- 서울시는 일반시민과 주변상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함
- 시민을 위한 보상 대책으로는 도로의 철거로 인한 교통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일방통행 확대, 중앙차로제 확대, 승용차 자율 5부제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함
- 청계천 주변상인에 대한 교통대책 마련, 영업권과 관련된 문제 및 노점상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감
- 청계천 철거 과정에서의 상가 이용객 감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서울시는 주변상인들과 관련된 교통대책으로 청계천 노선버스의 변경, 셔틀버스 무료 운행, 청계천 상가 고객을 위한 무료주차 등 교통대책을 추진함
-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주변상인들의 영업손실 보상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보상 대신 영업 불편 최소화, 재개발을 통한 상권 활성화, 새로운 이주 지원책의 마련 등의 간접적인 보상지원책을 마련함
- 그리고 복원사업에 따른 노점상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설득과 함께 동대문 운동장에 대한 한시적인 상설 벵루시장 제공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함

3)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갈등사례

(1) 사건 개요

- 서울외곽순환도로 사업은 1989년 서울시에서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시작되었음
- 이 사업은 도로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으며, 2001년 6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음
- 그러나 공사의 착공 이후에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건설반대운동으로 2001년 11월 29일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2003년 12월에 노무현 대통령의 불교계 대표 면담 이후에 공사가 재개되었음
- 서울 외곽순환도로는 수도권의 교통난 완화와 지역 간의 이동성을 제고시키기 위

한 경기지역의 종합교통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며, 총연장 127km중 1단계로 퇴계원~판교~안양~일산 구간의 91.0km는 1993~2001년에 개통하였음

- 2단계인 일산~퇴계원 36.0km는 1996~2006년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으나, 사패산 구간의 건설에 따른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민원이 발생하였음
- 사패산 통과구간은 2단계 일산~퇴계원의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산 국립공원의 북쪽 끝부분에 위치한 사패산을 통과하는 노선으로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BOT(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건설하여 준공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고 민자회사에서 30년간 운영하는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음
- 사패산이 포함된 2단계 구간은 1989~1991년 동안 기본설계와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996년 4월~1998년 6월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으며, 2001년 6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음
- 이 구간의 사업은 불교계 및 환경단체의 반대로 2001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공사가 중단되면서 사업의 준공시기도 2008년으로 연기되었음

(2) 갈등 발생기

- 사패산 구간의 구체적인 경유지역이 결정되는 과정인 실시설계 기간 중인 1997년 11월~1998년 9월 동안 개인 및 시민환경단체인 북한산 도로저지·시민연대(우이령 보존회 외 23개 단체)에 의하여 5차례에 걸친 민원에 의하여 북한산국립공원 구간의 통과노선을 의정부 구간으로 우회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 1998년 4월 16일에 개최된 공청회에 의하여 설계노선을 최적노선으로 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공청회 개최 때 공청회 좌장의 중립 측 인사선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측이 불참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결과(1개월 이내의 공청회 개최)에 의거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 한편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단체의 노선변경 요구활동과 관련하

여 2001년 5월부터 6월까지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환경단체(우이정보존회 등 6개 단체)합동으로 현장조사 및 협의를 추진하여 대안노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실시설계 노선이 최적대안임을 인정하고, 2001년 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회신하였음

(3) 갈등 확대기

- 사패산 터널 갈등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사업시행으로 사찰의 이전 또는 주변의 환경변화로 인한 인근 사찰의 불교수행자, 국립공원의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환경단체, 사패산 구간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는 의정부 및 수도권 고속도로 이용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의정부 권역의 주민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① 쟁점에 대한 이해 관계자별 입장

- 사패산 터널에 대한 쟁점은 최적노선대안, 환경적인 영향, 불교 수행환경의 훼손과, 사업추진 인허가 절차, 풍수 지리적 측면, 설계기준적용의 부적절성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쟁점별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이러한 쟁점들은 상호 연계되어 있어 각각의 대안이 이해관계자별로 영향을 미치게 됨
- 최적노선대안에 대하여는 터널을 통과하는 노선과 국립공원 외곽노선, 의정부 외곽노선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사업 시행자 측은 국립공원 외곽노선과 의정부 외곽 노선의 경우 공사비가 약 6천억 원에서 1.1조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반면, 이용거리가 1.5~10.0km나 증가하여 이용차량의 통행거리가 증가하고 교통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됨
- 불교수행자와 환경단체의 입장에서는 기존 노선이 시공되면 13개의 사찰 중 일부 사찰이 철거되고, 또한 주변지역을 통과함으로써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환경단체의 경우 국립공원 통과를 저지하게 되는 목적을 달성함

② 연합과 동맹 관계

- 이해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와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와, 사업의 반대 측인 불교계와 환경단체, 그리고 사업의 시행으로 접근성이 향상되는 의정부 시민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이들 중 연합을 이루고 있는 단체 조직은 사업시행을 반대하는 불교환경연대(www.budaeco.org)와 우이령 보존회(www.uircc.or.kr)와,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의사모(의정부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http://uisamo.info>)가 있음
- 불교 환경연대는 2000년 6월에 지리산 살리기 댐 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로 출범하여 2001년 4월에 불교환경연대 창립준비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같은 해 8월부터 북한산 국립공원 살리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음
- 그 이후 10월에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를 출범시켰고, 11월에는 북한산 송추계곡에 천막농성장을 설치, 운영하였음
- 2002년 6월에는 북한산 살리기 범불교도 대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100만 인 서명운동 추진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반대활동을 조직적으로 확대하였음
- 우이령 보존회는 1994년에 발족하여 북한산과 도봉산을 이어주는 우이령길 확장 사업을 백지화시키면서 자연환경 보호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996년 8월에는 북한산국립공원 보존방안 세미나 개최, 1997년 3월에는 북한산 지키기 산신제, 1997년 4월에는 북한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100인 선언 등과 함께 1998년 10월에 서울외곽순환도로 반대를 위한 범시민 등반대회로 사패산 터널공사의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들어갔음
- 사패산 터널의 공사착공 이후인 2001년 11월에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

순환도로 건설저지를 위한 사회각계 인사 213인 선언식, 2001년 11월에는 사패산 터널부근에 위치한 회룡사에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산사 음학회 개최와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공사현장의 농성 시작과 2002년 1월에는 백운대에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암벽배너시위 주도 등 불교환경연대와 함께 사패산 터널 건설의 저지를 주도하였음

- 이들 사업반대 측 단체는 2003년 10월에 북한산국립공원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연합 단체를 결성하였고, 「북한산국립공원 관통터널과 천성산 금정산 관통 경부고속전철 문제점 바로 알기」와 「대안노선의 제시」라는 홍보자료를 발간하여 북한산국립공원에 터널을 뚫어서는 안 되는 10가지 이유와 북한산국립공원의 우회노선을 제시하였음

(4) 갈등 완화기

① 노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북한산국립공원 통과 여부로 인한 환경, 불교단체와 정부, 사업시행자 간의 법적, 물리적인 분쟁과 충돌 등 상호 대립하는 상황을 종결하고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2002년 8월 14일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음
- 합의내용은 북한산국립공원 통과구간 공사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보류하고, 기도정진도량시설을 2002년 8월 말까지 자진 철거하며, 2002년 12월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였음
- 노선조사위원회는 불교계 측과 사업시행자 각 6인으로 구성되어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운영기간이 종료되었고, 사업시행자 측의 최종보고서가 건교부에 제출되었음
- 이 기간 중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노무현 후보는 선거공약으로 “2002년 12월 4일에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음

② 노선 재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2003년 4월 14일 불교계와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 노선 재검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 하였고, 위원은 교통, 도로, 경제, 환경·생태, 역사·문화 분야에서 5명씩 선출하였음
- 검토대상 노선은 기존 제시노선 이외에 의정부 외곽노선, 북한산국립공원 외곽 우회노선의 3개 노선으로 하였고, 인근의 수락산과 불암산 터널 구간의 공사를 4월 14일부터 중지하기로 하였고, 위원회는 2003년 6월 5일 까지 활동하였고, 6차례에 걸친 회의와 2003년 7월 1일에는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활동이 종료되었음

③ 공론조사 시행추진

- 노선조사위원회와 노선 재검토 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3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되 공론조사 방식을 총리실 주관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 공론조사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표성을 갖는 국민들이 참여하되 해당 이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심도 있게 토론한 후 참여자들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진정한 국민의사인 공론을 확인하는 조사 방식이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론조사 시행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시행되지는 못하였음

④ 기타 민원해결 관련활동

- 사업시행자 측은 사업시행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하여 홍보책자 700부, 홍보리플렛 3종 3만 5천부, 홍보 브로셔 2만부, 홍보 만화책자 3천부, 전단지 2종 20만부, 홍보 비디오 30개 등을 제작하여 지자체와 지역주민, 국회 등에 배포 하였

고 사패산 구간 건설사업 시행의 사회 이슈화에 대한 방송사 및 신문 등 언론기관 인터뷰가 24회 이루어졌음

- 갈등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언론기관에서 수차례의 여론조사가 시행되었으며, 인터넷 동아일보, KBS라디오, 주간 불교 인터넷 여론조사, 인터넷 법보조사 등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찬성은 70.3~88.0%, 반대는 12.0~29.7%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⑤ 대통령과 불교계 대표의 회동

- 2003년 12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조계종 종정인 법전 스님을 방문하여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 2003년 12월 24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당초 노선대로 공사의 재개를 발표함으로써 사패산 구간의 공사는 재개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고건 국무총리는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고, 종교문화 보존지구의 신설로 불교 역사문화 및 수행환경 보전을 강화하고, 전통사찰보존법 적용지구를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지역으로 추가하며, 도로건설계획에 불교계 전문가를 노선설계자문위원회에 참여를 보장하는 등 불교계의사 전 의견수렴과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음

2. 충남지역의 갈등 실태 분석

1) 천안시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설치 갈등

(1) 사례 개요

- 천안시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 설치갈등 사례는 공유재를 둘러싼 이익갈등, 동일한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간의 수평적 갈등임. 이 갈등은 지역대립의 표출, 상급자치 단체의 소극적 대응의 복잡한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음. 갈등은 천안시와 천안시주민간의 내부갈등에서 출발하여 천안시와 아산시의 외부갈등으로 변화하였고 제3자 조정애 의하여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전개됨
- 먼저, 내부갈등 단계를 살펴보면 천안시와 관내 백석동 주민들 간의 갈등관계로 파악할 수 있음. 천안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단순매립으로 처리하는데 따른 토양오염 및 절대 매립용량의 한계에 부딪히자 1994년 3월 천안시 백석동 531번지 일원에 종합위생처리장 및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공고함
 - 도시계획공고를 위한 사전 준비과정에서 천안시는 철저하게 주민들을 소외시키고 사업을 비밀리에 수행함
- 이에 주민들의 불신은 높아졌으며 강력하게 반발하였음. 그러나 시와 주민 모두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므로 서로 양보하여 매립장을 증설하는 수준으로 합의하였고 1995년 12월 매립장이 완공·운영될 수 있었음
- 그러나 천안시가 1996년 5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금강환경관리청과 충청남도 및 아산시에 제출함으로써 소각장 설치 재추진계획이 공개되자 주민들은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함³⁾
- 주민들은 주민대책위를 결성하여 공청회 개최요구와 관계기관(환경청)에 대한 진정 및 집회 그리고 쓰레기 반입 거부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대함

3) 「동양일보」(1996. 7. 6); 「대전일보」(1996. 7. 8)

- 쓰레기 반입 중단사태가 여러 차례 반복되던 중 1996년 7월에 쓰레기 반입을 반대 하던 지역주민과 반입 강행을 시도하던 천안시가 집단 충돌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 함. 이로 인해 갈등은 증폭되었으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확산되었음. 이 같은 갈등의제의 재구성은 당사자 간 합의가 난망하다는 것을 반증하였으며, 제3자의 개입을 요청하는 여론이 비등함
- 이에 따라 전국적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중재에 나섬으로서 갈등은 전환의 국면 을 맞이하기 시작하였음. 백석동 주민들이 소각시설 설치를 수용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보상 대책⁴⁾을 제시함으로써 천안시와 관내(백석동) 주민들 간 의 협상은 타결되기 시작함
- 갈등의 두 번째 단계는 천안시와 아산시의 외부적 갈등임. 이 단계는 소각장설치 가 천안시와 천안시 주민간의 합의로 해결되는 듯 했으나 소각시설예정지로부터 인 접해 있는 아산시 및 아산시 주민들과 갈등으로 전환되는 과정임. 천안시는 1999 년 2월 ‘폐기물처리시설축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폐촉법)’ 개정⁵⁾ 으로 아산시에 소각시설설치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아산시는 소각시 설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인접 아산시지역의 예상피해와 방지대책을 불명확하게 기 술하고 있고 소각시설인근의 주민대상 지원 사업에 아산시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를 요구하였으나 천안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면서 갈등 이 심화됨
- 세 번째는 갈등해결단계로 천안시와 아산시의 갈등이 제3자 조정⁶⁾에 의하여 갈등이 해소된 단계임

- 천안시는 아산시와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되자 일방적으로 소각시설 설치

4) 주민들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었음. 피해지역 상수도 무상시설 설치, 연세유업의 용수해 결, 백석로 확장공사, 농업용수 장기수질 검사, 피해지역 소로 포장, 피해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변경, 피해지역으로의 시청사 이전 등.

5) 「폐기물처리시설축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7항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를 선정함에 있 어 선정하고자 하는 입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당해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 km이내인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 당성조사결과와 당해 부지를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하여야 한다」.(1999. 2. 8 개정)

공사를 강행함

- 그리고 1998년 12월 상급자치단체인 충청남도에 양 지방정부의 의견을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1999년 4월 15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환조')에 조정을 신청함
- '중앙환조'에서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 지방정부에 제시하고 이를 수용토록 권고함
- 이에 아산시 '중앙환조'의 조정내용이 아산시의 요구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1999년 6월 '중앙환조' 조정안을 수용함
- 이를 근거로 충청남도지사는 1999년 8월 10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승인함. 또한 '폐촉법'에 근거하여 아산시 주민을 포함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지원사업의 규모나 지원액 등 산정함
- 이러한 결과로 2001년 천안시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시설은 준공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용함

(2) 갈등발생기

- 갈등의 발생 원인으로서 제도적 요인은 다른 요인에 비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지방자치실시이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무가 자치단체장의 사무로 위임되면서 폐기물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선 자치단체의 무리한 집행이 갈등을 유발함
- 또한 환경영향평가법과 폐기물처리 관리법 제 31조에 규정된 주민의견수렴절차가 무시되고 인접자치단체와 협의를 회피한 요인이 갈등을 발생시킨 주요한 요인임
- 천안시는 발생하는 폐기물을 단순매립으로 처리하고 있어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매립장 확보곤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94년 3월 14일 쓰레기소각장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을 공고함
- 이 계획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직후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제4조 1항에 의거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무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사무로 위임되고, 그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본연의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및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할 의무조항의 (최송규, 1999) 제정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게 된 것임

- 천안시는 소각장 부지선정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지구로 선정하였으므로 사전에 주민의사를 수렴해야 할 법적 제도적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었음. 그러므로 적법성과 공정성, 타당성 등에 문제가 없으므로 소각장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주장함
- 그러나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천안시민들은 첫째, 환경영향평가법과 폐기물처리관리법 제 31조에 규정된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완전히 배제된 행정편의주의이므로 반대함
- 둘째, 소각장은 경부고속철도역세권과 인접해 있고 생활거주지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적당하지 않음
- 셋째, 매립장과 소각장을 설치하면 지하수는 물론이고 농업용수 오염과 대기오염이 필연적임
- 넷째, 후보지 선정에 타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됨
- 다섯째, 후보지역은 지하수가 다량 용출되는 지역이라는 점과 온양관측소 기상 일지의 실제조사에서 확인된 대로 천안지역이 전반적으로 편서풍임을 감안할 때 쓰레기소각장을 도시의 서쪽에 세우는 것은 위험하기 하다며 설치를 반대함
- 아산시의 경우 천안시의 일방적인 시설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천안시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았음. 또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천안시 백석동 소각장 예정시설을 광역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가 많은 부분을 누락시켰으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재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함
- 이와 함께 소각장 주변 아산시 주민들에게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천안시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합의만을 통하여 설치를 강행하려했기 때문에 상호 호혜성의 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며 천안시의 갈등책임을 강조됨

① 지역주민

-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 의식과 소각시설의 입지결정에 있어서 관내 주민

과 아산시, 인접 아산시 주민의 참여와 협의의 회피가 갈등발생의 주요한 요인임. 이러한 천안시의 행정편의주의는 설치예정 지역주민과 아산시의 반발을 불러왔음

- 도시계획 공고를 통해 소각장 설치 사실을 인지하게 된 천안시 백석동 주민들은 이미 백석동 지역에는 공동묘지, 군부대, 예비군 훈련장, 농공단지, 공장오폐수 처리장,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혐오시설 등이 설치되어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결코 찬성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함
- 또한 이 시설의 입지 위치가 인접 자치단체인 아산시 음봉면·탕정면과 근접해 있어 아산시민들의 반대도 직면하게 되었음. 이에 아산시의 경우 천안시의 일방적인 시설설치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소각장설치예정지역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투명성, 공개화, 구체화 등을 통한 협의로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주민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일관하여 왔으며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임
- 또한 천안시에 대해서는 소각장이 설치될 경우 재산권 가치의 하락 등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협의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며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고 있었음
- 주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환경오염 측정판을 설치하여 기준치 이상이면 소각로 가동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제안함

② 천안시

- 이에 대해 천안시는 쓰레기 문제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자주민원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최우선인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며 또한 쓰레기 처리량과 관련하여 생활쓰레기의 감량화, 퇴비화, 분리수거 등이 정착되면 매립과 소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임. 기본적으로 백석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넘비현상에 기인한 무조건적인 반대의식이 팽배하여 나타난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았음

- 천안시의 소각장 설치 계획공고로 시작된 갈등은 소각장 주변의 천안시 주민, 아산시 주민들과의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설명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소각장 보다는 매립장 설치에 주민들이 동의가 이루어졌던 시기임
- 환경적 요인으로 갈등발생에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경제적인 요인이었음. 또한 환경영향평가결과도 영향권역 설정과 예방피해 상황조사와 이의 방지대책도 미흡함
- 아산시는 소각장설치 예정지역 주변 아산시 주민들에게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천안시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합의만을 통하여 설치를 강행하려한다면 상호 호혜성의 논란을 야기 시켜 천안시가 갈등을 더욱 조장한다고 봄
- 천안시는 소각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는 어느 곳이라도 민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후보지역인 백석동의 경우 구릉지를 이루고 있어서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음.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하자가 없고 다이옥신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소각로는 최첨단 시설로 공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③ 아산시

- 소각장 예정시설과 인접해 있는 아산시 탕정·음봉면 주민들은 아산시와 천안시 양 자치단체에 많은 불만을 제기하였음. 먼저 아산시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소각장설치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과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처사에 대하여 비판함
- 소각장설치가 꼭 필요하다면 천안시 백석동 소각장 예정시설을 광역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음.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가 많은 부분을 누락시켰으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재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함

(3) 갈등 확대기

- 비선호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참여의 제도적 보장은 갈등을 해소·완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함.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주변영향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체와 협의 하도록 하고 있었음

- 그러나 폐촉법 제9조에 정한 주민참여 등이 배제되고 절차적 정당성만을 내세워 강행처리하려는 천안시와의 주민간의 충돌이 갈등의 증폭의 1차적 원인임
- 두 번째로는 97년 12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 개정으로 소각시설 입지가 인접 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인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양 자치단체간의 갈등은 법 저촉 문제로 발전됨
- 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시기 갈등 당사자인 천안시와 아산시 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 등의 제도를 통한 문제의 공동처리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음. 그로 인해 갈등은 더욱 증폭됨
-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건설을 강행함으로써 천안시와 주민과의 갈등은 증폭되기에 이르렀음. 이에 천안시의회와 시민단체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를 전체시민의 의제로 변화시키면서 갈등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노력함

① 긴급 중재 모임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6년 7월 11일 환경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의 중재로 ‘천안쓰레기 매립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중재모임’을 구성하게 되었고 문제해결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함
 -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통합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통폐위)’를 주민, 시의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하여 천안시쓰레기 소각장 및 천안시 쓰레기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임

② 통합폐기물관리위원회

- ‘통합폐기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한 천안시에 의해 구성이 지연되고 있었음. 이에 천안의 15개 시민단체는 ‘천안쓰레기 시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통폐위’

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함

- 이에 1996년 12월 23일에 주민, 시의회, 시민단체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통폐위가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함
- 총 15회의 통폐위 활동을 통하여 천안시와 소각장 설치예정지역 대표들은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주민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최종안을 확정하였음. 1998년 1월 21일 천안시 사회 환경국장실에서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일 200백톤 규모의 소각장을 20년간 사용키로 하는 등의 26개항에 합의하고 합의서에 조인
 -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첫째, 다이옥신 및 유해배기가스는 배출농도 0.1 나노그램 이하로 운영함. 둘째, 오염물질 배출농도표시를 위한 옥외전광판의 설치, 셋째, 사후 영향평가는 1개월에 1회 실시함. 넷째, 소각장운영협의기구를 설치 운영, 다섯째, 주민회관설치, 도시가스시설, 종합복지관,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등 기타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함
- 이후 천안시는 98년 2월 17일 천안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소각시설)건설공사 현장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각장 건설 사업을 구체화함
- 우여곡절 끝에 '통폐위'가 96년 12월 23일 주민, 시의회, 시민단체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함
 - 총 15회의 '통폐위' 활동을 통하여 천안시와 소각장 설치예정지역 대표들은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주민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최종안을 확정함

③ 아산시

- 1997년 12월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접 2km 이내 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있었음. 이로 인하여 인접 자치단체인 아산시와 협의하지 않았던 천안시는 소각장시설에 대한 설치승인을 받지 못함
- 이에 천안시는 폐촉법에 의해 아산시에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아산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절함
- 아산시 주장의 논거는 첫째, 인접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

설 설치를 계획하고 건설하였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음. 둘째, 천안시가 소각장 시설예정지 주변 아산 주민들에게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천안시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합의만을 통해 설치를 강행하려하였기 때문에 상호호혜성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협의 할 수 없음. 셋째, 환경영향평가에 많은 부분들이 누락되어 되어있음. 그러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임

- 이후 천안시는 또다시 1998년 12월 2일에 2차 협의요청을 요구하였음. 이에 대해 아산시는 동의의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음. 그러자 천안시는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할 수 없으며 소각장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접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치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아산시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함
- 그러나 아산시는 쓰레기처리시설이 광역화가 되지 않은데도 동의할 경우 아산시를 상대로 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될 것을 염려하여 두 번째로 동의하지 않음

④ 지역 주민

- 쓰레기소각장 인접 주민들은 지역실정에 알맞은 쓰레기 처리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민공청회를 천안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미루어 오다가 94년 6월 10일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공청회를 실시함
 - 이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과 소각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함
- 이후 계속적으로 소각장시설에 대한 반대 결기문과 결의서를 채택하고 환경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음.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한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자 이들은 95년 12월에 준공되어 이용하고 있던 백석동 종합위생처리장(매립장)에 천안시가 쓰레기 반입을 시도하자 매립장 진입로에 바리케이드, 천막 등을 설치하고 반입을 저지하였으며 천안역, 천안시청, 매립장 등지에서 집단 시위와 항의를 함
- 소각장 설치예정 5개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 절대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시민단체(15개)는 '천안쓰레기시민대책위원

회'를 결성하고 '통폐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책임 있는 토론으로 쓰레기 처리문제를 빨리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음. 시민대책위는 통폐위가 조속한 시일안에 구성되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6년 11월 13일 천안시장의 면담을 요청함

- 소각장설치 예정지인 백석동은 그 동 매립장의 쓰레기 악취와 해충피해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어 왔던 주민들이 소각시설 설치문제와 연계해 천안시를 방문하여 민원과 피해우려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의식을 더욱 자극하게 됨
- 소각장 예정건설지는 인근주민 밀집되어 있는 00아파트 등보다 지형이 20~30m 높게 위치하고 8개 부락 4,000여 세대 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등 직접적인 영향권이었으나 천안시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영향권설정 및 예상피해에 대한 누락과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함
- 이 후 주민들은 시설백지화 내지는 상수도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면서 두 차례(96년 10월과 97년 1월)에 걸쳐 도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음. 이들은 “천안시는 자기구역이 아니라고 방관하고, 아산시는 변두리지역이라 무관심하고 있으니” 충남도에서 중재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함
- 주민들이 요구한 해결책으로는 해충구제 및 방제실시, 지하수 오염 우려가 심각하니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 시설계획수립, 천안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 해줄 것을 요구함

⑤ 천안시

- 이후 천안시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들과의 대화를 시작하였으며 시장과 마을주민 등과의 대화를 통한 협상을 시작하였음.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천안시는 소각시설설치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가동을 중단할 것을 문서로 보장하였으며 반대농성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부상자에 대한 위로와 사과를 하였으며 향후 쓰레기 반입시 반드시 주민들에게 사전 통보 할 것을 약속하였음. 또한 도로, 상수도 도시계획 등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보장함

- 이에 천안시의회와 시민단체는 중재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음. 또한 이 문제를 천안시민 전체의 의제로 변화시켰으며 전체시민들의 압력은 협상의 장으로 천안시, 소각장 주민대표 등을 유인하였으며 이에 96년 7월 11일 환경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의 중재로 마련된 '천안쓰레기 매립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중재모임'에서 96년 연말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토록 합의함
- 그리고 다음날인 7월 12일 녹색연합 사무총장인 장원 교수, 주민대표, 천안시장 이 협약서에 조인하였음. 그러나 주민대표에 아산시 주민 포함여부 및 시민단체 대표 선임문제 등을 이유로 천안시청이 이의를 제기하여 96년 12월 말까지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됨
- 그리고 시민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민대책위는 소각장건설을 위한 조건으로서 소각에 앞서 종합적인 쓰레기관리체계의 확립과, 매립장에 운반된 쓰레기를 분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의 자동화를 요구하였음. 또한 소각장 운영의 경제성과 효율성제고, 입지선정기준의 객관화, 매립장과 소각장 운영 실태를 감독할 수 있는 시설과 인원의 보장 등을 제시함
- 98년 1월 21일 천안시 사회 환경국장실에서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건설공사(소각장 설치)에 대한 소각장 인접 천안주민들과의 합의를 작성할 수 있었으며, 주민대책위의 26개 요구사항을 합의하여 타결됨

⑥ 충청남도

- 98년 2월 13일 통폐위 14차 회의에서는 천안시 소각장건설과 관련한 현장설명회를 가졌으며 15차 회의에서는 통합폐기물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합의서 제20조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였음. 여기에서 소각로의 건설방법과 실시설계에 대한 설명을 청취함
- 이후 천안시는 98년 2월 17일 천안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소각시설)건설공사 현장 설명회를 통하여 소각장 건설 사업을 구체화함
- 그러나 '폐촉법'에 개정으로 천안시가 설치승인을 받지 못하자 충청남도는 아산시에 승인을 받도록 종용하였음. 이에 천안시는 아산시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

의가 결렬되었고 양 자치단체는 상급자치단체인 충청남도에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음. 충청남도는 조정안을 양 자치단체에 제시하였으나 거부됨

- 그러나 이에 대해 충청남도에서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피해지역주민의 관할구역인 아산시는 여름철 악취 및 해충 발생시에 민원발생이 예상될 것을 우려하여 천안시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 중재를 건의함
 - 그 주요한 내용은 천안시 백석농공단지까지 설치되어있는 상수도 관로를 아산시까지 연결하는 비용을 천안시에 요구하였으나, 천안시는 “타 도 및 지역간의 접경지역과 피해지역에 보상을 하는 법률이 없는 상태”이므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더욱 갈등이 심화됨

(4) 갈등 완화기

① 천안시

- 충청남도의 조정이 결렬되고 아산시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99년 1월 22일 소각장 설치 공사를 강행함
- 또한 아산시에 통보 없이 99년 1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양 자치단체의 갈등이 첨예화 됨
- 충남도의 조정이 결렬되자 천안시는 99년 4월 15일 최종적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환경분쟁조정위는 충남도의 조정안을 토대로 조정안을 1999년 6월 14일에 양 자치단체에 송달하였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산시의 핵심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천안시의 경우는 그동안 인접지역이며 피해 해당지역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협의나 보상에서 소외시켰다는 점을 들어 조정안을 거부하고 공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함

② 충청남도

- 충청남도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전에 상급자치단체가 중재하도록 되어있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하여 중재안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그 내용은 아산시의 제안보다는 천안시의 제안에 가까운 조정안 제시함
 - 그 주요내용은 첫째 공동주택과 집단 마을상수도 공급, 둘째 소각로 운영요원 채용시 해당지역주민 우선채용, 셋째 아산시 음봉면과 탕정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쓰레기 반입책임처리, 넷째 소각처리능력범위 내에서 아산시 쓰레기 일부(일 50톤 이내)수탁처리, 단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절차는 별도 협약에 의한다는 조건이었음. 이와 더불어 아산시에는 소각장설치합의와 관련된 설명회 개최, 주민 지원체 참여, 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민원해소 등에 적극 협력 하라는 조정안이었음
- 충청남도 조정안을 가지고 아산시는 소각장예정지 인접 아산주민들을 설득하였음. 환경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건설될 수밖에 없으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주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해서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얻어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주민들을 설득함

③ 지역주민

- 주민들은 그동안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다가 조정안이 나오자 이를 바탕으로 설득하려는 아산시의 무관심과 소홀에 불만을 토로함

④ 아산시

- 아산시도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거부하였고 조정은 결렬되었음. 그러나 이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설득에 결국 조정안은 받아들여지게 되었음
- 아산시는 주민들과 접촉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천안시 백석동과 경계인 탕정면·음봉면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요구를 많이 반영하였으므로 수락

할 것을 설득함

- 주요 내용은 첫째, 천안시는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가로 아산시에 대해 음봉면 등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 1일 20톤의 범위 내에서 유료 반입함. 둘째, 1일 3천톤의 상수 공급 및 해당지역 상수도 시설을 설치한 후 양도함. 셋째,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 실시 등 상당한 반대 급부를 제공 한다는 것이었음. 또한 아산시에 대해서는 설명회 개최, 주민협의체 참여, 소각 시설건설에 따른 민원해소 등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을 요구함(중앙환조 99-2-1)
- 특히 주민협의체 구성시 인접 아산시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천안시민 수준만큼 인접 아산시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와 반대의 경우 유리할 것이 없다는 논리로 주민들을 설득하여 수락결정을 받아냄

⑤ 환경조정분쟁조정위원회

- 주민협의체 구성시 인접 아산시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천안시민 수준만큼 인접 아산시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와 반대의 경우 유리할 것이 없다는 논리로 주민들을 설득하여 수락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환경조정 분쟁조정위의 최종조정안이 만들어졌음. 이리하여 천안시의 백석동 매립장 부지에 쓰레기 소각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왔음

2) 호남고속철도 분기구간 갈등

(1) 사례 개요

- 1990년 4월에 철도청은 호남선 고속전철화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1990년 10월에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호남선 고속전철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음. 타당성 조사에서 서울~천안(경부고속공유), 천안~논산(신설), 논산~송정리(기존개량), 송정리~목포(기존선 복선개량) 안을 최적노선으로 검토함
- 1993년 대통령 임기중 호남고속철도를 추진할 것을 언급하였음. 1993년 8월에 교통부는 호남고속철도예정 3개 노선(안)을 발표함

- 1996년 6월에 경부·호남고속철도의분기점을 두고 청주·오송과 천안이 서로 유치하겠다고 나섬. 또한 1996년 6월 27일에는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등 4개 시·도가 노선 직선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혀 우회노선을 요구하는 대전과의 갈등이 표면화됨
- 한편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은 1996년 12월 2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 빌딩 아트홀에서 호남고속철도 노선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서울~천안~공주~익산~목포(제1안), 서울~천안~오송~익산~광주~목포(제2안), 서울~천안~대전~익산~광주~목포(제3안), 서울~천안~공주~전주~광주~목포(제4안) 등 4개의 노선을 후보노선으로 제시함
- 건교부에 이에 따라 1997년 중으로 최종노선을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사전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부터 우선 천안(오송, 대전)~광주 구간의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힘
- 1999년 12월에는 정부가 기점역을 충남 천안으로 고시한 것으로 밝혀지자 충청도의회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소속정당을 탈당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견을 표출함
- 2002년 4월 들어서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충남·북간의 삼파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됨
 - 분기점이 자기 지역에 들어서면 새로 생기는 중간역과 기존의 역 주위가 역세권으로 개발되고 교통망이 좋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었음
- 2002년 6월에는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충북, 충남, 대전)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으로 분기점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밝힘으로서 분기점 논쟁이 더욱 더 가열되게 됨.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분기점을 결정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었음
- 2003년 1월 대전시는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 정책세미나를 서울에서 열고 분기점을 주장하자 충남도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천안분기 지정을 강력 요구함
- 충북도는 2002년 10월 26일 국회의원, 민간단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고속철도 중간연구결과 토론회를 통해 철도건설 백지화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임
- 2003년 들어서도 건교부는 분기역을 결정하지 않고 2004년으로 논의를 미루는 행태를 보였으나 2004년에도 결론이 나지 않아 결국 2005년 6월 30일 국토연구원 주관아

래 분기역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논란을 거듭한 끝에 충북 오송역을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으로 결정됨

- 충남도와 대전시는 추진위원회의 결정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은 지속됨

■ 전라남도

- 기존선의 개량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전 구간 신설을 요구하고 있고, 광주광역시에서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용하는 역사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를 주장함

■ 충청남도

-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의 파급효과가 충남지역 전역에 광범위하게 미치기 위해서 충남의 장래 발전계획의 내용 및 방향과 일치하도록 추진되기를 희망하는바, 제1안(천안~논산 직결노선)을 주장하고 있음. 이 경우 서해안개발 및 백제문화권개발이 완료되고, 도청이 대전에서 내륙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2010년 이후에는 호남고속철도가 대전을 경유하는 것보다 수송수요가 많다는 점을 지적함
- 또한 호남고속철도의 기점 역으로 천안역을 선택할 경우 충남 서부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높일 수 있고, 천안 역세권의 개발로 고속철도의 투자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간 연결에 따른 통행시간의 단축을 예상할 수 있음. 아울러 호남고속철도를 별도의 노선으로 설치할 경우 경부선의 애로구간인 천안과 대전 사이의 교통량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임

■ 대전광역시

- 대전 서부지역에 새로이 입주하고 있는 서남부 신도시와 정부제3청사 등 고속철도 수요증가를 근거로 제2안(분기점, 공주·논산 경우 노선)을 제시하고 있음. 대전광역시의 주장 이유는 대전이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육상교통의 중심지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98년 정부 제3청사가 완공되면 11개 외청을 이용하는 호남권의 민원인은 1일 1500명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함
- 아울러 대전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 엑스포과학공원, 3군 본부(계룡대)등은 전국 차원을 넘어선 국제적 교류의 장이며, 행정·과학·안보의 요충지로서 호남고속 철

도는 반드시 대전권을 경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

(2) 갈등 발생기

- 1995년 9월 호남고속철도노선을 둘러싸고 충청도와 대전시 간 대립을 하게 됨

① 충청남도

- 충남도는 당초 건설교통부 계획안이 천안~공주~논산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고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된다는 점을 들어 건교부 안을 주장함

② 대전광역시

- 대전시는 97년 정부제3청사 입주를 계기로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 천안~대전~논산노선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대립함

③ 중앙정부

- 정부는 1995년 9월 23일 호남고속철도의 기본노선을 서울~천안~논산~익산~광주~목포로 정하고 1995년 안에 정차역과 세부노선을 확정기로 함. 1994년 9월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용역사업을 같은 교통개발연구원이 1993년 이후 검토해온 3개 노선(천안~논산 직결선, 대전을 거치는 노선, 천안~논산을 직결하되 신선으로 하는 노선)중 천안에서 대전을 거치지 않고 논산까지를 직접 연결하는 노선을 기본 틀로 마련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노선과 정차역을 결정기로 함
- 천안~논산 직결노선은 서울에서 호남까지 가장 빠른 노선인데다 대전은 경부고속철도 등의 혜택을 받는 반면, 천안~논산간 일대는 간선교통망이 없다는 점이 감안되었음. 하지만 대전을 경유하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음
- 건교부는 1996년 2월 6일 호남고속철도의 기본노선을 서울~천안~공주~익산~광

주~목포를 잇는 324km로 정하고, 1997년 중에 착공하기로 함. 교통개발연구원에 건설기본 계획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서울~천안에서 바로 공주시와 익산군(이리시 인근)을 거쳐 광주와 목포로 이어지는 노선이 지역개발효과와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안으로 결정됨

- 건교부는 6월까지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1997년 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들어감

④ 전북 시민운동연합

- 건교부의 기본노선 발표안 중에 전주를 경유하지 않는 안에 대하여 1995년 9월 24일 전북도민이 강력하게 반발하게 됨.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봉호 상임의장은 정부의 호남고속철도 기본노선 발표와 관련 “경부선에 비해 고속철도 효과가 의문시되는 기존철도 개량으로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북발전의 중심축인 전주경유를 무산시킨 점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며 이를 위해 시민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힘

⑤ 의 회

■ 전북도의회 및 전주시의회

-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의장단은 1995년 12월 26일 건교부를 방문해 현재 호남선을 개량해 고속철도 선로로 쓰면 고속철도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전 구간을 새로운 선로로 갈아줄 것을 요구함
- 전북도의회는 1995년 10월부터 이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5만 9천여 명의 서명까지 받아놓고 있었음

(3) 갈등확대기

① 호남고속철도 기산역 청주(오송)유치 위원회

- 1996년 6월 경부·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을 두고 청주·오송과 천안이 서로 유치 하겠다고 경쟁하면서 갈등이 심화됨. 대전과 충북도민으로 구성된 “호남고속철도 기산역 청주(오송)유치위원회”는 1996년 6월 7일 호남고속철도 노선대안 평가서를 통해 분기점을 오송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함
- 충북대 건설기술연구소가 작성한 평가서는 오송과 천안 두 지점을 전국 철도망과의 연계 및 경제성, 문화재 훼손 등 부작용의 최소화, 지역개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오송역을 분기점으로 하는 우회노선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름

② 중앙정부(건설교통부)

- 건설교통부는 “청주주변 인구가 1백만 명이 넘어서면 오송역 설치를 적극 검토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그러나 양쪽 주장 모두 장단점이 있어 1996년 7월 공청회와 9월 용역결과를 보고 다시한번 민원수렴 절차를 거쳐 1996년 말경에 노선과 시발역 종착역 중간역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③ 학계

- 1996년 6월 27일에는 충남·전북·광주·전남 등 4개 시·도가 노선 직선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혀 우회노선을 요구하는 대전과의 갈등이 표면화됨
- 충남 등 4개 시·도 관계공무원 학계인사는 전주 코아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범호남고속철도 대책협의회」를 구성, 공동으로 직선화 노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수용을 요구함
 - 이들은 호남고속철도가 대전시와 충북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오송역을 경유할 경우 시간과 경비 면에서 효율이 떨어져 고속철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2002년 7월 31일 교통개발연구원과 대한교통학회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발표에 따르면 천안, 오송, 대전 중에서 사업비와 고속철도의 속도향상을 위해서는 천안이 나머지 2곳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④ 교통개발연구원

- 한편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은 1996년 12월 2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 빌딩 아트홀에서 호남고속철도 노선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서울~천안~광주~익산~목포(제1안), 서울~천안~오송~익산~광주~목포(제2안), 서울~천안~대전~익산~광주~목포(제3안), 서울~천안~광주~전주~광주~목포(제4안) 등 4개의 노선을 후보노선으로 제시함
- 건교부에 이에 따라 1997년 중으로 최종노선을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사전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부터 우선 천안(오송, 대전)광주 구간의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힘
- 연구원측은 이 가운데 건설비용과 교통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힘
- 1997년 9월에 들어서 경부고속철도의 건설사업비가 17조 6천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3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사업비의 증액도 불가피한 것으로 고려되어 건설교통부는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의 경제성과 사업성 등을 전면 재검토 요구함
- 이로 인해서 그 동안 갈등을 빚었던 노선에 대한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음. 1998년 8월 건설교통부는 사업검토 작업을 미루어왔던 호남고속철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호남고속철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청에 1999년 예산 50억원을 신청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또 다시 보류됨

⑤ 의 회

- 1999년 12월에는 정부가 기점역을 충남 천안으로 고시한 것으로 밝혀지자 충북

도의회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소속정당을 탈당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견을 표출함

⑥ 충청남도

- 충남도는 천안역 분기점을 내세움. 경부고속철도 천안역에서 공주~논산을 거쳐 역시 익산으로 들어가는 길임. 천안에서 익산까지 모두 신설되며 길이는 98.5km로 27분여가 걸림
- 반면, 충남도 관계자는 “건교부가 분기점 등과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인데 집단행동으로 어찌 해보겠다는 것은 시·도간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며 대전과 충북의 유치활동을 꼬집었으며 심대평 충남지사는 2002년 3월 말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 천안역 분기의 타당성을 피력함
- 충남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천안분기 지정을 강력히 요구함

⑦ 충청북도

- 충북도는 오송역 분기를 주장함. 대전역과 천안역 중간에 있는 오송에서 갈라져 충남 공주 계룡산 북측과 논산을 경유, 익산으로 이어짐. 신설구간은 89.8km. 천안~오송간 30.8km를 합하면 길이는 모두 120.6km로 소요시간이 32분여 소요됨
- 충북도는 99년 시민단체와 교수 등으로 ‘오송역 유치위원회’를 구성, 중앙정부에 건의서를 내는 등 활동을 지속함
- 2002년 7월 31일 교통개발연구원과 대한교통학회의 연구용역 중간발표에서 천안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자, 충북도는 강력히 반발하고 건교부에 오송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함
- 충북도는 2002년 10월 26일 국회의원, 민간단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고속철도 중간연구결과 토론회를 통해 철도건설 백지화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⑧ 대전광역시

- 대전시는 대전역 분기의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교수와 관련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 '자문기획단'을 발족하여 교통과 환경·문화재·도시경제·지질 등을 연구, 대전역 분기의 타당성을 대전시에 제공하는 역할을 함. 시는 2002년 5월 각 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전역 분기를 위한 범시민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힘을 배가할 계획을 밝힘
- 2002년 연구용역 결과 천안이 가장 유리하게 떠오르자 대전시는 이의서 및 건의서를 제출하고 대전시장 지역단체장 등과 건교부를 방문함
- 2003년 1월 대전시는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 정책세미나를 서울에서 열고 분기점을 주장함

(4) 갈등 완화기

① 중앙정부(건설교통부)

- 2003년 들어서도 건교부는 분기역을 결정하지 않고 2004년으로 논의를 미루는 행태를 보였으나 2004년에도 결론이 나지 않아 결국 2005년으로 결정을 미루었음. 이에 따라서 지역간 갈등 및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임. 주관 부서인 건교부가 정책결정이 지역의 눈치를 보면서 연기되자 자원낭비는 물론이고 지역간 분쟁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임
-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는 2005년 6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추진위원회의 개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각 광역자치단체의 평가단원을 5명씩 추천받아 총 75명의 평가단원을 통하여 6월 27일~6월 30일 사이에 충북 충주시 건설경영연수원에서 분기역 선정평가를 하여 분기역을 결정한다고 통보함

② 의회

- 특히 2005년에 들어서면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결정은 대전과 충남·북이 막판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었음. 동년 2월에는 각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 분기역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었음. 대전시의회의 경우 호남지역 자치단체를 돌며 대전유치를 홍보하기 위한 자전거투어를 하였으며, 충북도의회는 '오송 분기역이 안되면 의원직을 총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쳤음

- 여기에 충남도의회가 천안 입지를 촉구하면서 광주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광주 구청장협의회에서는 '호남고속철 분기역을 충남 천안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다른 자치단체까지 분기역 경쟁에 합류함
- 또 충남도의회를 비롯 충남 및 호남권 국회의원들은 오송분기역 결정에 대해 호남고속철도 이용자들의 편익을 무시한 것으로, 정치적 나눠 먹기식으로 상당한 후폭풍이 호남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함

③ 정치권

- 이 갈등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쳐 동년 2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 지도부가 충북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분기역으로 오송역을 지지한다'고 밝히자 열린우리당 측에서 '분기역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정치권까지 갈등에 가세하는 형국이었음. 또한 이 과정에서 충북은 강원권 및 영남권과 공조체제를 이루고, 천안은 호남권과 연대를 하는 등 지역간세대결 양상까지 보임

④ 평가단

- 그러나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평가를 위해 6월 29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합숙중이던 광주와 전남, 전북평가단 15명과 충남평가단 5명 등 20명은 호남주민들이 이용하는 호남철도 분기역 선정과정에 왜 관계도 없는 영남권 및 강원도가 참여하느냐며 연수원을 퇴소함
- 그러나 건교부(국토연구원)는 남아있는 평가단 55명으로 평가일정을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 수용여부는 분기역 추진위원회가 판단한다고 결정하였음. 각 자치단체에서 추천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이미 평가 단원으로 위촉장 수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소한 것은 평가를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었음. 그

리고 6월 30일 호남권, 충남 평가단원을 제외한 55명의 평가단원들이 평가한 결과를 합산하여 오송을 분기역으로 확정 발표함

3) 천안 - 아산 행정구역 조정 갈등

(1) 사례 개요

- 천안권으로의 편입 및 행정구역 조정을 주장한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 휴대리, 장재리는 천안시 신방동, 불당동 등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생활권이 천안시와 가까운 지역임. 이 지역의 입지적 현황을 살펴보면 아산시(542.30km²) 배방면(47.27km²)에 위치해 있으며(10.47km²) 인구는 5,315명임. 이들 3개리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천안시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도 아산이 아닌 천안으로 통학하고 있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천안시가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의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신도시 인접지역에 택지개발을 실시함에 따라 시의 경계가 더욱 가까워지게 되면서 위 3개리 지역주민들은 천안시 편입을 강력히 요구함
 - 편입요구지역은 10.51km² 면적에, 800여 가구 2,900여명이 주거하는 지역임(지방행정연구원, 1999)
- 이 사례가 천안시와 아산시 자치단체간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 배경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괴리로 인한 해당 3개리 주민들의 소외감과 아산시 전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천안시로의 편입에 대한 반감 사이에 나타나는 다분히 내부적인 갈등구조임. 형식적 갈등주체는 아산시와 천안시 이지만 실질적 갈등주체는 장재리의 3개 지역 주민과 아산시임

(2) 갈등 발생기

① 지역주민 - 편입추진위원회

-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휴대리, 세교리는 지역주민들이 1985년부터 줄기차게 관 계당국에 천안시로의 편입을 요구하였던 곳임
- 천안시 편입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계기는 1994년 3개리 천안시 편입추진 위원회가 정부 민원실에 편입을 요청한 이후임. 천안시 편입을 주장하는 주민들 은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천안시 서남부지역과 연접해 있어 행정구역상으로는 아 산시이나 생활권으로는 천안시임. 특히 시장이용이나, 관혼상제, 학군, 통학, 경 제·금융활동 등을 모두 천안시에서 행하고 있다고 주장. 실제 지리상으로도 천 안시청이 이 지역에서 4km²인데 비해 아산시청은 12km²나 떨어져 있음

(3) 갈등 확대기

① 지역주민

- 편입 찬성지역(천안시편입추진위원회, 장재리·휴대리·세교리)
- 천안시편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의 3개 부락 주민들은 내무부, 충청남도, 천안시 등 관계기관에 천안시 편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수차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관 철되지 않았음
- 또한 1994년 2월 23일 천안시는 위 지역의 편입수용을 결정하고 아산시(1995년 도 농통합이전 아산군)에 의견을 조회하였음. 아산시는 절대불가 입장을 회신하였으 나, 1994년 4월 25일 천안시의회에서 편입 수용을 충청남도의회에 건의함으로써 갈등이 표출됨(지방행정연구원, 1999)
- 편입 반대지역
- 1995년 온양시와 아산군이 도농통합을 한 이후에는 일부지역을 타 자치단체에 편 입시키는 것은 명분이 서질 않는다면서 천안시의 변두리 보다는 아산시의 중심

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 지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이 지역과 인접해 있는 복수리, 갈매리(4개 부락)주민들도 천안시 편입반대 진정서를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아산시, 아산시 국회의원(황명수 의원)에게 제출함

② 아산시

- 그러나 아산시는 고속철도역 건립계획에 따라 이지역이 아산시 발전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게 되고 역세권 신도시가 개발되면 천안생활권은 무의미해 지고 오히려 천안시 인구의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아산시의회 주관으로 배방면 3개리지역의 천안시 편입 반대설명회를 개최하고 편입반대운동을 전개함
-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상급자치단체인 충청남도는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활권이 천안시 인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이 지역 행정관할구역을 현지의 생활권만을 기준으로 당장 조정하기는 어려움. 즉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아산신도시 개발계획 등 특수한 여건이 조성되는 지역으로서 현재 상태에서 판단보다는 장기적 상황을 예견하여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함

(4) 갈등 완화기

① 천안시 편입추진위원회

- 천안시 편입추진위원회에서는 공청회 등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에 걸친 집단시위를 통해 편입을 강행하였으나 1995년 제3차 행정구역 조정시에도 시·군간 경계조정이 유보됨

② 아산시

- 아산시는 이 지역이 아산신도시개발 등 지역개발의 중심지로 부각되는 곳으로서 시세확대의 거점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지역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소외감을 불식

- 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경부고속전철역사 조성 및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감에 따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성이 감소됨
- 2002년 9월 27일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휴대리, 세교리, 탕정면 매곡리 및 천안시 불당동, 신방동일대 3,538,000km² 가 아산신도시개발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공시되면서 천안권 행정구역 조정 요구가 중단됨
- 아산 신도시 개발로 인해 갈등이 해소됨

3. 사례분석의 시사점

- 환경보존과 개발이 이익을 쟁점으로 발생한 동강댐 건설사례의 경우, 이해당사자들 간의 사회관계가 갈등관리에서 중요한 영향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지역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중앙정부에서의 권위적 정책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형식적 설명회와 공청회, 지역의 지형적 그리고 지질학적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서,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추가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시행 주체의 사업 강행 표명 등은 정부의 책임성에 대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이러한 불신은 갈등관리과정에서 사업시행 주체가 제안한 사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역류, 댐의 안정성, 생태계 보전방안과 관련되어 제시한 여러 대안들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더 나아가 사업시행 주체가 제안한 합동평가단과 같은 쟁점에 대한 논의 과정에의 참여 거부와 합동평가단 활동 결과에 대한 회의를 불러옴
- 또한 공공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지위를 위한 투쟁이나 전략적 공론화 수단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갈등관리의 첫걸음은 해당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견해와 이해당사자들을 공공정책과정에 참여시켜 이들의 견해에 내재된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에 대해 공동조사와 논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의 정책현안에 대한 학습의 증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된 견해를 수정하고, 상대방의 견해와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적 숙의가 가능케 하여 공공정책에 대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설계로 인한 갈등해결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갈등 사례를 통해서도 사업의 추진단계별 국민참여

기회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지킴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며, 갈등발생시 중재·조정전문가의 적극적인 역할방안의 모색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정부중심, 행정우월적인 사업추진방식의 지양과 국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의지 제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천안시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 갈등 사례에서는 해당 지역주민들, 천안시, 인접한 아산시,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갈등 및 해결의 주체로 등장. 특히, 충청남도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갈등 중재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중재위원회의 노력이 갈등의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중재위원회의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중재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주도·행정 우위의 갈등 해결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임. 즉, 주민의 참여를 통한 합의의 도출이 중요함을 보여줌
- 천안과 아산의 행정구역 조정 갈등 사례에서는 천안에 인접한 아산시 3개 리 주민들이 천안으로의 편입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천안시로 편입하고자 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아산의 주변 지역과 아산시와의 갈등이 발생하였음. 이것은 지역 내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는 면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음
-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갈등 사례에서는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라는 4개의 자치단체에 걸쳐 갈등이 발생. 이를 둘러싸고, 중앙정부, 중앙정치권, 지방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주장하게 됨
-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갈등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갈등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 당사자, 즉, 갈등 주체들이 발생하게 되며, 결국 이들을 둘러싼 갈등이 바로 그 문제에서의 갈등이라 할 수 있음. 앞선 연구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갈등 주체들을 조정할 수 있는 중재기구의 필요성임.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역 내 주민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들의 공식적 대화의 채널,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는 중간의 조정기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갈등 주체들 간의 소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이것은 결국 지역 주민들이 되는 것이며, 갈등 속에 존재하는 이해당사자로서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정기제가 필요함
- 셋째, 갈등 주체들 중 정부·행정 주도의 갈등해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정부나 행정이 갈등 주체들 간의 충분한 대화를 겪지 않고, 무리수를 두어 강제적으로 갈등을 해결코자 할 때에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됨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무엇보다도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 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과 협력이 중요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사례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경제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 인식적 측면, 운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갈등의 원인을 살펴볼 때, 아래의 <표 3-1>과 같음
- 갈등의 주요한 원인을 살펴본다면, 소득감소, 재산가치 하락 등의 경제적 측면, 정부 정부 갈등관리 제도, 정책적 대안, 조정기구 미비 등의 법·제도적 측면, 주민간 또는 주민과 정부간 불신 등의 인식적 측면, 보상의 비합리적 배분, 부족 등의 운영적 측면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각 사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각 갈등의 원만한 조정·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갈등관리 조정기구의 존재유무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표 3-1〉 갈등 발생의 원인

구분	경제적 측면 (소득감소, 재산가치하락 등)	법·제도적 측면 (정부 갈등관리 제도, 정책적 대안, 조정기구 미비 등)	인식적 측면 (주민간 또는 주민과 정부간 불신 등)	운영적 측면 (보상의 비합리적 배분, 부족 등)
동감댐 건설	○	△	○	○
서울시 청계천 복원 및 개발	○	X	○	○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	△	○	X
천안시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	X	○	○
호남고속철도 분기 구간 조정	○	○	○	○
천안-아산 행정구역 조정	○	△	○	○

제4장 서해안지역 갈등관리 및 사회위험해소

실증 분석 및 문제점 도출

1. 사고 개요

- 2007년 12월 7일 07시 15분 경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예인선(삼성 T-5, 삼호 T-3)에 의해 예인 중이던 부선이 같은 해 12월 6일 19시 18분부터 정박 중이던 유조선과 충돌하여 유조선 화물이 파공되어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하였음
- 당초 유조선은 홍콩 국적의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로 좌현 탱크 5개소 중 3개소가 파공되어 원유 약 12,547kℓ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 보도되었으며, 이는 국내 최대 해양 유류유출사고임(소방방재청, 2008.2.5)
- 당초 소방방재청의 12월 11일 재난수습상황 보고에 따르면 피해 오염지역은 사고해역에서 남서방향으로 폭 1.8km까지 분포하였으며, 해안으로는 서산 가로리만으로부터 태안 남면 거아도 해안선까지 167km에 이름. 이로 인해 어장피해는 5개면(근흥, 소원, 원북, 이원, 남면) 약 2,562ha(추정)에 다다랐으며, 해수욕장 6개소(만리포, 천리포, 백리포, 신두리, 구름포, 학암포) 약 221ha(추정), 양식 품종으로 굴, 바지락, 전복, 해삼 등이 피해를 보았음
- 이후 2007년 2월 5일 소방방재청의 재난수습상황 일지에 따르면, 주 피해지역인 충남 태안군은 물론 도서지역으로 태안군, 보령시 등 4개 시군의 59개 오염도서와 부안, 신안 등 전남북지역의 42개 도서까지 3개 광역자치단체에 그 피해가 확산되어 환경 피해는 물론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남(소방방재청, 2008.2.5).
- 태안 유류유출사고 발생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 지방정부 차원, 그리고 비정부 조직으로서 지역주민과 관련 시민단체, 기업 등으로 구분. 중앙정부의 경우 사고 피해의 수습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 그리고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물론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이 관여하고 있음(소방방재청, 2008.2.5)

- 그러나 향후 장기화되는 사고 피해에 있어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주체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이 되며, 해양수산부의 경우 유류유출사고의 주무부서이며, 해양 오염에 따른 사고 수습과 피해주민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실질적 책임을 갖는 부서가 됨. 한편, 환경부와 행정자치부 또한 재난 상황의 수습은 물론 환경 생태계의 실무 부서로서 태안 유류유출사고 수습에 지속적인 관여를 해야 하는 입장임
-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피해지역인 충남도청, 전남도청, 전북도청이 피해에 따른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며, 광역자치단체 내 주요 피해 지역 기초자치단체들도 피해 복구 및 장기적 문제 해결책의 수립을 위해 참여가 필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고 중앙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는 입장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음
- 마지막으로 비정부조직 차원에서는 사고발생에 따른 실제 피해자로서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의 기업들이 관련되며, 환경 피해에 따른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태안 유류유출 사고에 관계됨. 특히, 지역주민과 기업들의 경우 현시점에서의 피해보상은 물론 향후 장기화될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자원 손해에 대한 문제 해결은 물론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안의 수립에 있어서 정당한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아울러, 시민단체들의 피해범위가 3개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며, 생태계 위기에 따른 발전적 해결 방안과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사고 해결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태안 유류유출사고 피해 지역인 충남 태안군은 물론 도서지역으로 태안군, 보령시 등 4개 시군의 59개 오염도서는 물론 인접 광역자치단체로서 부안, 신안 등 전남북지역의 42개 도서까지 3개 광역자치단체에 그 피해가 확산되어 있으며, 피해의 정도는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은 물론, 환경 복구까지 계속될 해양 자원의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특히, 경제·문화적 가치가 높아지는 해양 생태환경의 파괴는 관광 및 경제적 수단의 토대가 되는 자원의 손실로 그 피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며, 더욱이 생태환경의 복원까지 10년에서 20년 이상의 장기적 노력이 요구되는 점에 있어서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고해결의 장기적 노력이 필요함

2. 서해안지역 갈등관리 및 사회위험해소 실증 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소득, 직업은 아래와 같음
- 조사대상의 남녀분포는 남성이 81.0%, 여성이 19%임
- 조사대상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2.4%, 30대가 2.4%, 40대가 16.7%, 50대가 50.0%, 60대가 28.6%임
- 조사대상의 학력을 살펴보면 중졸이하가 38.1%, 고졸이 40.5%, 전문대졸이 7.1%, 대학교졸이 9.5%, 대학원 이상이 4.8% 임
- 조사대상의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가 16.7%, 101~200만원이 47.6%, 201~300만원이 23.8%, 301~400만원이 4.8%, 401만원 이상이 7.1%임
- 조사대상의 직업을 살펴보면 어업이 9.5%, 양식업이 16.7%, 농업이 31.0%, 숙박업(펜션 포함)이 7.1%, 맨손어업이 7.1%, 기타가 21.4%, 요식업이 7.1%임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특성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성별	남자	102	81.0	81.0
	여자	24	19.0	100.0
	합계	126	100.0	100.0
연령	20대	3	2.4	2.4
	30대	3	2.4	4.8
	40대	21	16.7	21.4
	50대	63	50.0	71.4
	60대 이상	36	28.6	100.0
	합계	126	100.0	100.0
학력	중졸 이하	48	38.1	38.1
	고졸	51	40.5	78.6
	전문대졸	9	7.1	85.7
	대학교졸	12	9.5	95.2
	대학원 이상	6	4.8	100.0
	합계	126	100.0	10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1	16.7	16.7
	101~200만원	60	47.6	64.3
	201~300만원	30	23.8	88.1
	301~400만원	6	4.8	92.9
	401만원 이상	9	7.1	100.0
	합계	126	100.0	100.0
직업	어업	12	9.5	9.5
	양식업	21	16.7	26.2
	농업	39	31.0	57.1
	숙박업(펜션 포함)	9	7.1	64.3
	맨손어업	9	7.1	71.4
	기타	27	21.4	92.9
	요식업	9	7.1	100.0
	합계	126	100.0	100.0

2) 갈등현황의 빈도분석

(1) 갈등의 정도

-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갈등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미미함이 4.8%, 대체로 미미함이 4.8%, 보통이 14.3%, 대체로 심각함이 38.1%, 매우 심각함이 38.1%로서 대체로 심각함과 매우 심각함이 전체의 76.2%를 차지해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2〉 갈등의 정도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미미함	6	4.8	4.8	4.8
대체로 미미함	6	4.8	4.8	9.5
보통	18	14.3	14.3	23.8
대체로 심각함	48	38.1	38.1	61.9
매우 심각함	48	38.1	38.1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0

(2) 갈등의 변화

-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갈등의 강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낮음이 4.8%, 낮음이 7.1%, 보통이 7.1%, 높음이 61.9%, 매우 높음이 19.0%로서 높음이 전체의 61.9%를 차지해 갈등의 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갈등의 횟수를 조사한 결과 매우 낮음이 2.4%, 낮음이 7.1%, 보통이 23.8%, 높음이 38.1%, 매우 높음이 28.6%로서 높음이 전체의 38.1%를 차지해 갈등의 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3〉 갈등의 변화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갈등 강도	매우 낮음	6	4.8	4.8	4.8
	낮음	9	7.1	7.1	11.9
	보통	9	7.1	7.1	19.0
	높음	78	61.9	61.9	81.0
	매우 높음	24	19.0	19.0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
갈등 횟수	매우 낮음	3	2.4	2.4	2.4
	낮음	9	7.1	7.1	9.5
	보통	30	23.8	23.8	33.3
	높음	48	38.1	38.1	71.4
	매우 높음	36	28.6	28.6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

(3) 갈등의 심각도

-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갈등의 심각도를 조사한 결과 주민과 주민간 갈등에서 낮음이 4.8%, 보통이 26.2%, 높음이 61.9%, 매우 높음이 7.1%로서 높음과 매우 높음이 전체의 69%를 차지해 주민과 주민간 갈등의 심각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마을과 마을간 갈등에서 낮음이 4.8%, 보통이 31.0%, 높음이 59.5%, 매우 높음이 4.8%로서 높음과 매우 높음이 전체의 %를 차지해 마을과 마을간 갈등의 심각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민(집단)과 기업간 갈등에서 매우 낮음이 2.4%, 낮음이 2.4%, 보통이 9.5%, 높음이 31.0%, 매우 높음이 59.5%로서 매우 높음이 전체의 59.5%를 차지해 주민(집단)과 기업간 갈등의 심각도를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민(집단)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간 갈등에서 보통이 9.5%, 높음이 66.7%, 매우 높음이 23.8%로서 높음이 전체의 66.7%를 차지해 주민(집단)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간 갈등의 심각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업(유류유출회사)와 정부(지방자치단체)간 갈등에서 낮음이 7.1%, 보통이 45.2%, 높음이 42.9%, 매우 높음이 7.1%로서 높음이 전체의 45.2%를 차지해 기업(유류유출회사)와 정부(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심각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정부(지방자치단체)간 갈등에서 매우 낮음이 4.8%, 보통이 45.2%, 높음이 42.9%, 매우 높음이 7.1%로서 보통이 전체의 45.2%를 차지해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정부(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심각도를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4〉 갈등의 심각도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주민과 주민간 갈등	낮음	6	4.8	4.8	4.8
	보통	33	26.2	26.2	31.0
	높음	78	61.9	61.9	92.9
	매우 높음	9	7.1	7.1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0
마을과 마을간	낮음	6	4.8	4.8	4.8
	보통	39	31.0	31.0	35.7
	높음	75	59.5	59.5	95.2
	매우 높음	6	4.8	4.8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0
주민(집단)과 기업간	매우 낮음	3	2.4	2.4	2.4
	낮음	3	2.4	2.4	4.8
	보통	12	9.5	9.5	14.3
	높음	39	31.0	31.0	45.2
	매우 높음	69	54.8	54.8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0
주민(집단)과 정부(지방 자치단체, 중앙정부)	보통	12	9.5	9.5	9.5
	높음	84	66.7	66.7	76.2
	매우 높음	30	23.8	23.8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0
기업(유류 유회사)와 정부(지방 자치단체)간	낮음	9	7.1	7.1	7.1
	보통	57	45.2	45.2	52.4
	높음	54	42.9	42.9	95.2
	매우 높음	6	4.8	4.8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0
정부(지방 자치단체)와 정부(지방 자치단체)	매우 낮음	6	4.8	4.8	4.8
	보통	57	45.2	45.2	50.0
	높음	54	42.9	42.9	92.9
	매우 높음	9	7.1	7.1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0

(4) 서해안 유류유출사고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주체

-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서해안 유류유출사고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주체를 조사한 결과 어업 종사자가 38.1%, 양식업 종사자가 40.5%, 숙박업(펜션 포함) 종사자가 11.9%, 맨손어업 종사자가 9.5%로서 대체로 어업 종사자와 양식업 종사자가 전체의 78.6%를 차지해 어업 종사자와 양식업 종사자가 서해안 유류유출사고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5〉 서해안 유류유출사고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주체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어업 종사자	48	38.1	38.1	38.1
양식업 종사자	51	40.5	40.5	78.6
숙박업(펜션 포함) 종사자	15	11.9	11.9	90.5
맨손어업 종사자	12	9.5	9.5	100.0
합계	126	100.0	100.0	

(5) 서해안 갈등의 주도 집단

-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서해안 갈등의 주도 집단을 조사한 결과 어업 종사자가 50.1%, 양식업 종사자가 7.1%, 맨손어업 종사자가 9.5%, 숙박업(펜션 포함) 종사자가 2.4%, 농업 종사자가 2.4%, 정부(지방자치단체)가 16.7%, 기타가 11.9%로서 어업 종사자가 전체의 50.1%를 차지해 어업 종사자가 서해안 갈등의 주도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6〉 서해안 갈등의 주도 집단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어업 종사자	63	50.0	50.0	50.0
양식업 종사자	9	7.1	7.1	57.1
맨손어업 종사자	12	9.5	9.5	66.7
숙박업(펜션 포함) 종사자	3	2.4	2.4	69.0
농업 종사자	3	2.4	2.4	71.4
정부(지방자치단체)	21	16.7	16.7	88.1
기타	15	11.9	11.9	100.0
합계	126	100.0	100.0	

(6) 갈등시 행동 유형

-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갈등시 행동유형을 조사한 결과 나 자신의 이익 보다는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한다가 7.1%,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한다가 7.1%, 서로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는 선에서 협상한다가 42.9%, 서로 원하는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상대와 협력한다가 38.1%, 정부(지방자치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한다가 4.8%로서 서로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는 선에서 협상한다가 42.9%를 차지해 서로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는 선에서 협상하려는 행동유형이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7〉 갈등시 행동 유형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나 자신의 이익 보다는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한다	9	7.1	7.1	7.1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9	7.1	7.1	14.2
서로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는 선에서 협상한다	54	42.9	42.9	57.1
서로 원하는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상대와 협력한다	48	38.1	38.1	95.2
정부(지방자치단체)에게 중재를 요청한다	6	4.8	4.8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0

(7)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의 경제적 책임

-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의 경제적 책임을 조사한 결과 스피리트호 사고 기업이 많은 부분을 책임 져야 한다가 57.1%, 중앙정부가 도의적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가 33.3%,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의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가 9.5%로서 스피리트호 사고 기업이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가 전체의 57.1%를 차지해 스피리트호 사고 기업이 경제적 책임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8〉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의 경제적 책임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스피리트호 사고 기업이 많은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72	57.1	57.1	57.1
중앙정부가 도의적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	42	33.3	33.3	90.5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의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	12	9.5	9.5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0

(8) 사회 위험의 정도

-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사회위험의 정도를 조사한 매우 미미함이 4.8%, 대체로 미미함이 31.0%, 보통이 35.7%, 대체로 심각함이 9.5%, 매우 심각함이 19.5%로서 대체로 미미함과 보통이 전체의 66.7%를 차지해 사회위험의 정도가 대체로 미미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9〉 사회위험의 정도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미미함	6	4.8	4.8	4.8
대체로 미미함	39	31.0	31.0	35.7
보통	45	35.7	35.7	71.4
대체로 심각함	12	9.5	9.5	81.0
매우 심각함	24	19.0	19.0	100.0
합계	126	100.0	100.0	

(9) 유형별 사회위험의 정도

- 태안 지역에서 유형별 사회위험의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태풍 및 폭우에서 매우 낮음이 7.1%, 낮음이 45.2%, 보통이 35.7%, 높음이 11.9%로서 낮음이 전체의 45.2%를 차지해 태풍 및 폭우가 사회위험의 정도에서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가뭄에서 매우 낮음이 14.3%, 낮음이 66.7%, 보통이 14.3%, 높음이 4.8%로서 낮음이 전체의 66.7%를 차지해 가뭄이 사회위험의 정도에서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가뭄에서 매우 낮음이 14.3%, 낮음이 66.7%, 보통이 14.3%, 높음이 4.8%로서 낮음이 전체의 66.7%를 차지해 가뭄이 사회위험의 정도에서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폭설에서 매우 낮음이 16.7%, 낮음이 57.1%, 보통이 21.4%, 높음이 4.8%로서 낮음이 전체의 57.1%를 차지해 폭설이 사회위험의 정도에서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진에서 매우 낮음이 16.7%, 낮음이 57.1%, 보통이 21.4%, 높음이 4.8%로서 낮음이 전체의 57.1%를 차지해 지진이 사회위험의 정도에서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화재사고에서 매우 낮음이 14.3%, 낮음이 57.1%, 보통이 23.8%, 높음이 4.8%로서 낮음이 전체의 57.1%를 차지해 화재사고가 사회위험의 정도에서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붕괴·폭발 및 사고에서 매우 낮음이 14.3%, 낮음이 57.1%, 보통이 21.4%, 높음이 7.1%로서 낮음이 전체의 57.1%를 차지해 붕괴·폭발 및 사고가 사회위험의 정도에서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교통사고에서 매우 낮음이 7.1%, 낮음이 16.7%, 보통이 61.9%, 높음이 14.3%로서 보통이 전체의 61.9%를 차지해 교통사고가 사회위험의 정도에서 보통으로 인식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환경오염사고에서 매우 낮음이 4.8%, 낮음이 7.1%, 보통이 35.7%, 높음이 47.6%, 매우 높음이 4.8%로서 높음이 전체의 47.6%를 차지해 환경오염사고가 사회위험의 정도에서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실업에서 매우 낮음이 7.1%, 낮음이 26.2%, 보통이 40.5%, 높음이 23.8%, 매우 높음이 2.4%로서 보통이 전체의 40.5%를 차지해 실업이 사회위험의 정도에서 보통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분쟁에서 매우 낮음이 9.5%, 낮음이 31.0%, 보통이 47.6%, 높음이 11.9%로서 보통이 전체의 47.6%를 차지해 분쟁이 사회위험의 정도에서 보통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파업에서 매우 낮음이 14.3%, 낮음이 40.5%, 보통이 42.9%, 높음이 2.4%로서 대체로 낮음과 보통이 전체의 83.4%를 차지해 파업이 사회위험의 정도에서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10〉 유형별 사회위험의 정도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태풍 및 호우	매우 낮음	9	7.1	7.1	7.1
	낮음	57	45.2	45.2	52.4
	보통	45	35.7	35.7	88.1
	높음	15	11.9	11.9	100.0
	매우 높음	0	0	0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0
가뭄	매우 낮음	18	14.3	14.3	14.3
	낮음	84	66.7	66.7	81.0
	보통	18	14.3	14.3	95.2
	높음	6	4.8	4.8	100.0
	매우 높음	0	0	0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0
폭설	매우 낮음	21	16.7	16.7	16.7
	낮음	72	57.1	57.1	73.8
	보통	27	21.4	21.4	95.2
	높음	6	4.8	4.8	100.0
	매우 높음	0	0	0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0
지진	매우 낮음	21	16.7	16.7	16.7
	낮음	72	57.1	57.1	73.8
	보통	27	21.4	21.4	95.2
	높음	6	4.8	4.8	100.0
	매우 높음	0	0	0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0
화재 사고	매우 낮음	18	14.3	14.3	14.3
	낮음	72	57.1	57.1	71.4
	보통	30	23.8	23.8	95.2
	높음	6	4.8	4.8	100.0
	매우 높음	0	0	0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0
붕괴 · 폭발사고	매우 낮음	18	14.3	14.3	14.3
	낮음	72	57.1	57.1	71.4
	보통	27	21.4	21.4	92.9
	높음	9	7.1	7.1	100.0
	매우 높음	0	0	0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교통사고	매우 낮음	9	7.1	7.1	7.1
	낮음	21	16.7	16.7	23.8
	보통	78	61.9	61.9	85.7
	높음	18	14.3	14.3	100.0
	매우 높음	0	0	0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0
환경오염사고	매우 낮음	6	4.8	4.8	4.8
	낮음	9	7.1	7.1	11.9
	보통	45	35.7	35.7	47.6
	높음	60	47.6	47.6	95.2
	매우 높음	6	4.8	4.8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0
실업	매우 낮음	9	7.1	7.1	7.1
	낮음	33	26.2	26.2	33.3
	보통	51	40.5	40.5	73.8
	높음	30	23.8	23.8	97.6
	매우 높음	3	2.4	2.4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0
분쟁	매우 낮음	12	9.5	9.5	9.5
	낮음	39	31.0	31.0	40.5
	보통	60	47.6	47.6	88.1
	높음	15	11.9	11.9	100.0
	매우 높음	0	0	0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0
파업	매우 낮음	18	14.3	14.3	14.3
	낮음	51	40.5	40.5	54.8
	보통	54	42.9	42.9	97.6
	높음	3	2.4	2.4	100.0
	매우 높음	0	0	0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0

(10) 서해안 지역 갈등의 원인

-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서해안 지역 갈등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측면(소득감소, 생계막막 등)이 52.4%, 지역기반적 측면(지역 커뮤니티 또는 공동체의 붕괴 등)이 2.4%, 법·제도적 측면(정부의 갈등관리제도 및 정책적 대안의 미흡 등)이 14.3%, 인식적 측면(주민간 또는 주민과 기업정부 간 불신 등)이 4.8%, 운영적 측면(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이 11.9%, 자원적 측면(정부 복구비의 턱없는 부족 등)이 11.9%, 심리적 측면(분노, 우울, 걱정 등)이 2.4%로서 경제적 측면(소득감소, 생계막막 등)이 전체의 54.4%를 차지해 서해안 지역갈등의 원인을 경제적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11〉 서해안 지역갈등의 원인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 퍼센트
경제적 측면(소득감소, 생계막막 등)	66	52.4	52.4	52.4
지역기반적 측면(지역 커뮤니티 또는 공동체의 붕괴 등)	3	2.4	2.4	54.8
법·제도적 측면(정부의 갈등관리 제도 및 정책적 대안의 미흡 등)	18	14.3	14.3	69.0
인식적 측면(주민간 또는 주민과 기업정부 간 불신 등)	6	4.8	4.8	73.8
운영적 측면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	15	11.9	11.9	85.7
자원적 측면 (정부 복구비의 턱없는 부족 등)	15	11.9	11.9	97.6
심리적 측면(분노, 우울, 걱정 등)	3	2.4	2.4	100.0
합계	126	100.0	100.0	

(11) 서해안 지역 불신원인

-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서해안 지역 불신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기주의(내 입장만 생각해서)가 35.7%, 정보 불투명(보상체계, 금액 등의)이 61.9%, 종사하는 직업이 달라서가 2.4%로서 정보불투명(보상체계, 금액등의)이 전체의 61.9%를 차지해 서해안 지역 불신원인을 정보불투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12〉 서해안 지역 불신원인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이기주의 (내 입장만 생각해서)	45	35.7	35.7	35.7
정보 불투명 (보상체계, 금액 등의)	78	61.9	61.9	97.6
종사하는 직업이 달라서	3	2.4	2.4	100.0
합계	126	100.0	100.0	

(12) 갈등원인별 심각도

-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갈등 원인별 심각도를 조사한 결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에서 낮음이 7.1%, 보통이 21.4%, 높음이 64.3%, 매우 높음이 7.1%로서 높음이 전체의 64.3%를 차지해 갈등 원인에서 지역 공동체의 붕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정부의 갈등관리 정책 부족에서 매우 낮음이 4.8%, 보통이 7.1%, 높음이 35.7%, 매우 높음이 52.4%로서 매우 높음이 전체의 52.4%를 차지해 갈등 원인에서 정부의 갈등관리 정책 부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민과 주민간 또는 주민과 정부간 불신에서 보통이 16.7%, 높음이 69.0%, 매우 높음이 14.3%로서 높음이 전체의 69.0%를 차지해 갈등 원인에서 주민과 주민간 또는 주민과 정부간 불신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에서 보통이 4.8%, 높음이 50.0%, 매우 높음이 45.2%로서 대체로 높음과 매우 높음이 전체의 95.2%를 차지해 갈등 원인에서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에서 보통이 2.4%, 높음이 40.5%, 매우 높음이 57.1%로서 대체로 높음과 매우 높음이 전체의 97.6%를 차지해 갈등 원인에서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복구 참여로 인한 건강 악화에서 낮음이 4.8%, 보통이 21.4%, 높음이 59.5%, 매우 높음이 14.3%로서 높음이 전체의 59.5%를 차지해 갈등 원인에서 복구 참여로 인한 건강 악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정부 복구비의 턱없는 부족에서 보통이 7.1%, 높음이 38.1%, 매우 높음이 54.8%로서 매우 높음이 전체의 54.8%를 차지해 갈등 원인에서 정부 복구비의 턱없는 부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13〉 갈등원인별 심각도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지역공동체의 붕괴	낮음	9	7.1	7.1	7.1
	보통	27	21.4	21.4	28.6
	높음	81	64.3	64.3	92.9
	매우 높음	9	7.1	7.1	100.0
	합계	126	100.0	100.0	
정부의 갈등관리 정책부족	매우 낮음	6	4.8	4.8	4.8
	보통	9	7.1	7.1	11.9
	높음	45	35.7	35.7	47.6
	매우 높음	66	52.4	52.4	100.0
	합계	126	100.0	100.0	
주민과 주민간 또는 주민과 정부간 불신	보통	21	16.7	16.7	16.7
	높음	87	69.0	69.0	85.7
	매우 높음	18	14.3	14.3	100.0
	합계	126	100.0	100.0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	보통	6	4.8	4.8	4.8
	높음	63	50.0	50.0	54.8
	매우 높음	57	45.2	45.2	100.0
	합계	126	100.0	100.0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	보통	3	2.4	2.4	2.4
	높음	51	40.5	40.5	42.9
	매우 높음	72	57.1	57.1	100.0
	합계	126	100.0	100.0	
복구참여로 인한 건강 악화	낮음	6	4.8	4.8	4.8
	보통	27	21.4	21.4	26.2
	높음	75	59.5	59.5	85.7
	매우 높음	18	14.3	14.3	100.0
	합계	126	100.0	100.0	
정부 복구비의 턱없는 부족	보통	9	7.1	7.1	7.1
	높음	48	38.1	38.1	45.2
	매우 높음	69	54.8	54.8	100.0
	합계	126	100.0	100.0	

(13) 갈등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갈등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조사한 결과 지역기반적 측면(지역 커뮤니티 또는 공동체의 재정립 등)이 2.4%, 법·제도적 측면(정부의 갈등관리 제도 및 정책적 대안의 마련 등)이 35.7%, 인식적 측면(주민 간 또는 주민과 기업, 정부간 신뢰 풍토 조성)이 45.2%, 운영적 측면(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지속적 노력 등)이 14.3%, 기타가 2.4%로서 인식적 측면이 전체의 45.2%를 차지해 인식적 측면을 갈등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14〉 갈등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지역기반적 측면	3	2.4	2.4	2.4
법·제도적 측면	45	35.7	35.7	38.1
인식적 측면	57	45.2	45.2	83.3
운영적 측면	18	14.3	14.3	97.6
기타	3	2.4	2.4	100.0
합계	126	100.0	100.0	

(14) 갈등해결을 위해 기초단체(태안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

-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갈등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조사한 결과 지역기반적 측면(지역 커뮤니티 또는 공동체의 재정립 등)이 19.0%, 법·제도적 측면(정부의 갈등관리 제도 및 정책적 대안의 마련 등)이 26.2%, 인식적 측면(주민 간 또는 주민과 기업, 정부간 신뢰 풍토 조성)이 42.9%, 운영적 측면(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지속적 노력 등)이 11.9%로서 인식적 측면이 전체의 42.9%를 차지해 인식적 측면을 갈등 해결을 위해 기초단체(태안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15〉 갈등해결을 위해 기초단체(태안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지역기반적 측면	24	19.0	19.0	19.0
법·제도적 측면	33	26.2	26.2	45.2
인식적 측면	54	42.9	42.9	88.1
운영적 측면	15	11.9	11.9	100.0
합계	126	100.0	100.0	

(15) 갈등해결을 위해 기초단체(충청남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

-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갈등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조사한 결과 지역기반적 측면(지역 커뮤니티 또는 공동체의 재정립 등)이 19.0%, 법·제도적 측면(정부의 갈등관리 제도 및 정책적 대안의 마련 등)이 50.0%, 인식적 측면(주민 간 또는 주민과 기업, 정부간 신뢰 풍토 조성)이 26.2%, 운영적 측면(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지속적 노력 등)이 4.8%로서 법·제도적 측면이 전체의 50.0%를 차지해 법·제도적 측면을 갈등 해결을 위해 기초단체(충청남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16〉 갈등해결을 위해 기초단체(충청남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지역기반적 측면	24	19.0	19.0	19.0
법·제도적 측면	63	50.0	50.0	69.0
인식적 측면	33	26.2	26.2	95.2
운영적 측면	6	4.8	4.8	100.0
합계	126	100.0	100.0	

(16) 갈등해결을 위해 기초단체(중앙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

-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갈등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조사한 결과 지역기반적 측면(지역 커뮤니티 또는 공동체의 재정립 등)이 11.9%, 법·제도적 측면(정부의 갈등관리 제도 및 정책적 대안의 마련 등)이 69.0%, 인식적 측면(주민 간 또는 주민과 기업, 정부간 신뢰 풍토 조성)이 19.0%로서 법제도적 측면이 전체의 69.0%를 차지해 법·제도적 측면을 갈등 해결을 위해 기초단체(중앙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17〉 갈등해결을 위해 기초단체(중앙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지역기반적 측면	15	11.9	11.9	11.9
법·제도적 측면	87	69.0	69.0	81.0
인식적 측면	24	19.0	19.0	100.0
합계	126	100.0	100.0	

(17)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

-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을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공동체 살리기 노력이 57.1%, 지역 자치기구(반상회 등)의 활성화가 7.1%,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및 여가 공간 마련이 4.8%, 지역 주민 자치센터의 활성화가 21.4%, 기타가 9.5%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 공동체 살리기 노력이 전체의 57.1%를 차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공동체 살리기 노력이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18〉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공동체 살리기 노력	72	57.1	57.1	57.1
지역 자치기구(반상회 등)의 활성화	9	7.1	7.1	64.3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및 여가 공간 마련	6	4.8	4.8	69.0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27	21.4	21.4	90.5
기타	12	9.5	9.5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0

(18)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의 법·제도적 측면에서 필요한 것

-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의 법·제도적 측면에서 필요한 것 을 조사한 결과 정보의 공개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11.9%, 대화 파트너로서의 시민 단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가 2.4%, 피해의 적절한 보상이 35.7%, 갈등관리 교육 및 홍보의 확대가 16.7%,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 시스템 정상가동이 21.4%, 전문가(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및 제3자(협상가, 상담가)의 적극 활용이 9.5%, 기타가 2.4%로서 피해의 적절한 보상이 전체의 35.7%를 차지해 피해의 적절한 보상이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의 법·제도적 측면에서 필요한 것 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19〉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의 법·제도적 측면에서 필요한 것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정보의 공개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	15	11.9	11.9	11.9
대 화 파트너로서의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3	2.4	2.4	14.3
피해의 적절한 보상	45	35.7	35.7	50.0
갈등관리 교육 및 홍보의 확대	21	16.7	16.7	66.7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 시스템 정상 가동	27	21.4	21.4	88.1
전문가(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및 제3자(협상가, 상담가)의 적극활용	12	9.5	9.5	97.6
기타	3	2.4	2.4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0

(19) 사회위험의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사회 위험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조사한 결과 법·제도적 측면이 69.0%, 인식적 측면이 23.8%, 운영적 측면이 4.8%, 기타가 2.4%로서 법·제도적 측면이 전체의 69.0%를 차지해 법·제도적 측면이 사회 위험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20〉 사회위험의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법·제도적 측면	87	69.0	69.0	69.0
인식적 측면	30	23.8	23.8	92.9
운영적 측면	6	4.8	4.8	97.6
기타	3	2.4	2.4	100.0
합계	126	100.0	100.0	100.0

3) 차이분석

(1) 학력에 따른 갈등강도의 차이

〈표 4-21〉 학력에 따른 갈등강도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F	유의 확률
갈등 강도	중졸 이하	48	3.5000	1.07188	.15471	2.612	0.039
	고졸	51	4.0000	.84853	.11882		
	전문대졸	9	4.3333	.50000	.16667		
	대학교졸	12	4.0000	1.04447	.30151		
	대학원 이상	6	4.0000	1.09545	.44721		
	합계	126	3.8333	.97775	.08711		

-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갈등강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39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졸이하는 3.5, 고졸은 4.0, 전문대졸은 4.3, 대졸은 4.0, 대학원 이상은 4.0으로 갈등의 강도를 인식하여 중졸이 상대적으로 갈등의 강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2) 학력에 따른 갈등횟수의 차이

〈표 4-22〉 학력에 따른 갈등횟수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 확률
갈등 횟수	중졸 이하	48	3.4375	1.12810	.16283	4.321	0.003
	고졸	51	4.0000	.77460	.10847		
	전문대졸	9	4.6667	.50000	.16667		
	대학교졸	12	4.0000	1.04447	.30151		
	대학원 이상	6	4.0000	1.09545	.44721		
	합계	126	3.8333	1.00200	.08927		

-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갈등횟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3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졸이하는 3.4, 고졸은 4.0, 전문대졸은 4.6, 대졸은 4.0, 대학원 이상은 4.0으로 갈등의 횟수를 인식하여 중졸이 상대적으로 갈등의 횟수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3) 학력에 따른 주민과 주민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23〉 학력에 따른 주민과 주민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주민과 주민간 갈등	중졸 이하	48	3.8125	.53221	.07682	17.083	0.000
	고졸	51	3.8824	.47527	.06655		
	전문대졸	9	3.6667	.50000	.16667		
	대학교졸	12	2.5000	.52223	.15076		
	대학원 이상	6	4.0000	1.09545	.44721		
	합계	126	3.7143	.66762	.05948		

-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주민과 주민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졸이하는 3.8, 고졸은 3.8, 전문대졸은 3.6, 대졸은 2.5, 대학원 이상은 4.0으로 주민과 주민간 갈등의 심각도의 차이를 인식하여 대졸이 상대적으로 주민과 주민간 갈등의 심각도의 차이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4) 학력에 따른 마을과 마을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24〉 학력에 따른 마을과 마을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마을과 마을간	중졸 이하	48	3.4375	.61562	.08886	9.642	0.000
	고졸	51	3.9412	.64535	.09037		
	전문대졸	9	4.0000	.00000	.00000		
	대학교졸	12	3.0000	.00000	.00000		
	대학원 이상	6	3.5000	.54772	.22361		
	합계	126	3.6429	.65071	.05797		

-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마을과 마을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졸이하는 3.4, 고졸은 3.9, 전문대졸은 4.0, 대졸은 3.0, 대학원 이상은 3.5으로 마을과 마을간 갈등의 심각도의 차이를 인식하여 대졸이 상대적으로 마을과 마을간 갈등의 심각도의 차이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5) 학력에 따른 주민(집단)과 기업(유류유출회사)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25〉 학력에 따른 주민(집단)과 기업(유류유출회사)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 확률
주민 (집단)과 기업 (유류 유출 회사)간	중졸 이하	48	4.1250	.86603	.12500	4.174	0.003
	고졸	51	4.6471	.97619	.13669		
	전문대졸	9	4.6667	.50000	.16667		
	대학교졸	12	3.7500	.45227	.13056		
	대학원 이상	6	4.0000	1.09545	.44721		
	합계	126	4.3333	.92087	.08204		

-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주민(집단)과 기업(유류유출회사)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3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졸이하는 4.1, 고졸은 4.6, 전문대졸은 4.6, 대졸은 3.7, 대학원 이상은 4.0으로 주민(집단)과 기업(유류유출회사)간 갈등의 심각도의 차이를 인식하여 대졸이 상대적으로 주민(집단)과 기업(유류유출회사)간 갈등의 심각도의 차이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6) 학력에 따른 주민(집단)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27〉 학력에 따른 주민과 정부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주민과 정부간	중졸 이하	48	4.0000	.50529	.07293	4.936	0.001
	고졸	51	4.3529	.48264	.06758		
	전문대졸	9	4.3333	.50000	.16667		
	대학교졸	12	3.7500	.45227	.13056		
	대학원 이상	6	4.0000	1.09545	.44721		
	합계	126	4.1429	.56163	.05003		

-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주민(집단)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간 갈등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1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졸이하는 4.0, 고졸은 4.3, 전문대졸은 4.3, 대졸은 3.7, 대학원 이상은 4.0으로 주민(집단)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간 심각도의 차이를 인식하여 대졸이 상대적으로 주민(집단)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간 심각도의 차이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7) 학력에 따른 사회위험 인식의 차이

〈표 4-28〉 학력에 따른 사회위험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 확률
사회 위험	중졸 이하	48	2.6250	1.06441	.15364	6.455	0.000
	고졸	51	3.3529	1.14584	.16045		
	전문대졸	9	4.3333	1.00000	.33333		
	대학교졸	12	3.0000	1.04447	.30151		
	대학원 이상	6	2.5000	.54772	.22361		
	합계	126	3.0714	1.16741	.10400		

-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사회위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졸이하는 2.6, 고졸은 3.3, 전문대졸은 4.3, 대졸은 3.0, 대학원 이상은 2.5로 사회위험을 인식하여 대학원 이상이 상대적으로 사회위험을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8) 학력에 따른 태풍 및 호우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29〉 학력에 따른 태풍 및 호우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F	유의 확률
태풍 및 호우	중졸 이하	48	2.1250	.78889	.11387	16.087	0.000
	고졸	51	2.5882	.49705	.06960		
	전문대졸	9	2.3333	.50000	.16667		
	대학교졸	12	3.7500	.45227	.13056		
	대학원 이상	6	3.0000	1.09545	.44721		
	합계	126	2.5238	.79714	.07101		

-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태풍 및 호우의 사회 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졸이하는 2.1, 고졸은 2.5, 전문대졸은 2.3, 대졸은 3.7, 대학원 이상은 3.0으로 태풍 및 호우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대졸이 상대적으로 태풍 및 호우에 대한 심각도를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9) 학력에 따른 가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30〉 학력에 따른 가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 확률
가뭄	중졸 이하	48	1.8125	.53221	.07682	26.932	0.000
	고졸	51	2.0588	.54449	.07624		
	전문대졸	9	2.0000	.00000	.00000		
	대학교졸	12	3.5000	.52223	.15076		
	대학원 이상	6	2.0000	.00000	.00000		
	합계	126	2.0952	.68619	.06113		

-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가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졸이하는 1.8, 고졸은 2.0, 전문대졸은 2.0, 대졸은 3.5, 대학원 이상은 2.0으로 가뭄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중졸이 상대적으로 가뭄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10) 학력에 따른 폭설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31〉 학력에 따른 폭설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폭설	중졸 이하	48	2.0000	.71459	.10314	16.421	0.000
	고졸	51	2.0000	.60000	.08402		
	전문대졸	9	2.0000	.00000	.00000		
	대학교졸	12	3.5000	.52223	.15076		
	대학원 이상	6	2.0000	.00000	.00000		
	합계	126	2.1429	.74527	.06639		

-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폭설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졸이하는 2.0, 고졸은 2.0, 전문대졸은 2.0, 대졸은 3.5, 대학원 이상은 2.0으로 폭설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대졸이 상대적으로 폭설에 대한 심각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11) 학력에 따른 지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32〉 학력에 따른 지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지진	중졸 이하	48	2.0625	.75530	.10902	10.621	0.000
	고졸	51	1.9412	.54449	.07624		
	전문대졸	9	2.0000	.00000	.00000		
	대학교졸	12	3.2500	.86603	.25000		
	대학원 이상	6	2.5000	.54772	.22361		
	합계	126	2.1429	.74527	.06639		

-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지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졸이하는 2.0, 고졸은 1.9, 전문대졸은 2.0, 대졸은 3.2, 대학원 이상은 2.5로 지진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고졸이 상대적으로 지진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12) 학력에 따른 화재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33〉 학력에 따른 화재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화재 사고	중졸 이하	48	2.0000	.71459	.10314	11.240	0.000
	고졸	51	2.1765	.51791	.07252		
	전문대졸	9	2.3333	.50000	.16667		
	대학교졸	12	3.2500	.86603	.25000		
	대학원 이상	6	1.5000	.54772	.22361		
	합계	126	2.1905	.73446	.06543		

-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화재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졸이하는 2.0, 고졸은 2.1, 전문대졸은 2.3, 대졸은 3.2, 대학원 이상은 1.5로 화재사고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대학원 이상이 상대적으로 화재사고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13) 학력에 따른 붕괴·폭발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34〉 학력에 따른 붕괴·폭발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 확률
붕괴 · 폭발사고	중졸 이하	48	2.1250	.86603	.12500	8.780	0.000
	고졸	51	2.1176	.47527	.06655		
	전문대졸	9	2.3333	.50000	.16667		
	대학교졸	12	3.2500	.86603	.25000		
	대학원 이상	6	1.5000	.54772	.22361		
	합계	126	2.2143	.77570	.06911		

-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붕괴·폭발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졸이하는 2.1, 고졸은 2.1, 전문대졸은 2.3, 대졸은 3.2, 대학원 이상은 1.5로 붕괴·폭발사고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대학원 이상이 상대적으로 붕괴·폭발사고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14) 학력에 따른 교통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35〉 학력에 따른 교통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 확률
교통사고	중졸 이하	48	2.5625	.79643	.11496	6.036	0.000
	고졸	51	2.8824	.68256	.09558		
	전문대졸	9	3.3333	.50000	.16667		
	대학교졸	12	3.5000	.52223	.15076		
	대학원 이상	6	2.5000	.54772	.22361		
	합계	126	2.8333	.75631	.06738		

-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교통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졸이하는 2.5, 고졸은 2.8, 전문대졸은 3.3, 대졸은 3.5, 대학원 이상은 2.5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대학원 이상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15) 학력에 따른 실업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36〉 학력에 따른 실업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실업	중졸 이하	48	2.3750	.93683	.13522	7.167	0.000
	고졸	51	3.1176	.90878	.12725		
	전문대졸	9	3.3333	.50000	.16667		
	대학교졸	12	3.2500	.45227	.13056		
	대학원 이상	6	3.5000	.54772	.22361		
	합계	126	2.8810	.93473	.08327		

-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실업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졸이하는 2.3, 고졸은 3.1, 전문대졸은 3.3, 대졸은 3.2, 대학원 이상은 3.5로 실업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중졸이 상대적으로 실업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16) 학력에 따른 분쟁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37〉 학력에 따른 분쟁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분쟁	중졸 이하	48	2.0000	.71459	.10314	19.823	0.000
	고졸	51	3.0588	.64535	.09037		
	전문대졸	9	2.6667	.50000	.16667		
	대학교졸	12	2.7500	.45227	.13056		
	대학원 이상	6	3.5000	.54772	.22361		
	합계	126	2.6190	.81836	.07291		

-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분쟁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졸이하는 2.0, 고졸은 3.0, 전문대졸은 2.6, 대졸은 2.7, 대학원 이상은 3.5로 분쟁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중졸이 상대적으로 분쟁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17) 학력에 따른 파업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38〉 학력에 따른 파업의 사회위험 심각도의 인식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파업	중졸 이하	48	2.0000	.71459	.10314	9.406	0.000
	고졸	51	2.3529	.68771	.09630		
	전문대졸	9	2.6667	.50000	.16667		
	대학교졸	12	2.7500	.45227	.13056		
	대학원 이상	6	3.5000	.54772	.22361		
	합계	126	2.3333	.74833	.06667		

-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파업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졸이하는 2.0, 고졸은 2.3, 전문대졸은 2.6, 대졸은 2.7, 대학원 이상은 3.5로 파업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중졸이 상대적으로 파업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18) 학력에 따른 주민과 주민간 또는 주민과 정부간 불신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39〉 학력에 따른 주민과 주민간 또는 주민과 정부간 불신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 확률
주민과 주민간 또는 주민과 정부간 불신	중졸 이하	48	4.0625	.56139	.08103	4.247	0.003
	고졸	51	3.9412	.54449	.07624		
	전문대졸	9	4.0000	.00000	.00000		
	대학교졸	12	3.5000	.52223	.15076		
	대학원 이상	6	4.5000	.54772	.22361		
	합계	126	3.9762	.55806	.04972		

-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주민과 주민간 또는 주민과 정부간 불신에 대한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3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졸이하는 4.0, 고졸은 3.9, 전문대졸은 4.0, 대졸은 3.5, 대학원 이상은 4.5로 주민과 주민간 또는 주민과 정부간 불신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대졸이상대적으로 주민과 주민간 또는 주민과 정부간 불신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19) 학력에 따른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40〉 학력에 따른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복구비의 합리적 이지 못한 배분	중졸 이하	48	4.5000	.50529	.07293	4.897	0.001
	고졸	51	4.4706	.61165	.08565		
	전문대졸	9	4.3333	.50000	.16667		
	대학교졸	12	3.7500	.45227	.13056		
	대학원 이상	6	4.5000	.54772	.22361		
	합계	126	4.4048	.58211	.05186		

-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에 대한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1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졸이하는 4.5, 고졸은 4.4, 전문대졸은 4.3, 대졸은 3.7, 대학원 이상은 4.5로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대졸이 상대적으로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20)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41〉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 문제의 심각성	중졸 이하	48	4.6250	.60582	.08744	3.757	0.006
	고졸	51	4.5882	.49705	.06960		
	전문대졸	9	4.6667	.50000	.16667		
	대학교졸	12	4.0000	.00000	.00000		
	대학원 이상	6	4.5000	.54772	.22361		
	합계	126	4.5476	.54563	.04861		

-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6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졸이하는 4.6, 고졸은 4.5, 전문대졸은 4.6, 대졸은 4.0, 대학원 이상은 4.5로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대졸이 상대적으로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21) 학력에 따른 복구 참여로 인한 건강 악화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42〉 학력에 따른 복구 참여로 인한 건강 악화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복구 참여로 인한 건강 악화	중졸 이하	48	3.9375	.56139	.08103	2.852	0.027
	고졸	51	3.8824	.84017	.11765		
	전문대졸	9	4.0000	.00000	.00000		
	대학교졸	12	3.2500	.86603	.25000		
	대학원 이상	6	3.5000	.54772	.22361		
	합계	126	3.8333	.72388	.06449		

-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복구 참여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27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졸이하는 3.9, 고졸은 3.8, 전문대졸은 4.0, 대졸은 3.2, 대학원 이상은 3.5로 복구 참여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대졸이 상대적으로 복구 참여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22) 학력에 따른 정부 복구비의 턱없는 부족 인식의 차이

〈표 4-43〉 학력에 따른 정부 복구비의 턱없는 부족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 확률
정부 복구비의 턱없는 부족	중졸 이하	48	4.5625	.61562	.08886	5.422	0.000
	고졸	51	4.5882	.60585	.08484		
	전문대졸	9	4.3333	.50000	.16667		
	대학교졸	12	3.7500	.45227	.13056		
	대학원 이상	6	4.5000	.54772	.22361		
	합계	126	4.4762	.62883	.05602		

- 학력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정부 복구비의 턱없는 부족에 대한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졸이하는 4.5, 고졸은 4.5, 전문대졸은 4.3, 대졸은 3.7, 대학원 이상은 4.5로 정부 복구비의 턱없는 부족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대졸이 상대적으로 정부 복구비의 턱없는 부족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23) 소득에 따른 갈등강도의 차이

〈표 4-44〉 소득에 따른 갈등강도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F	유의 확률
갈등 강도	100만원 이하	21	2.7143	1.18924	.25951	11.236	0.000
	101~200만원	60	4.0500	.87188	.11256		
	201~300만원	30	4.0000	.45486	.08305		
	301~400만원	6	4.0000	.00000	.00000		
	401만원 이상	9	4.3333	1.00000	.33333		
	합계	126	3.8333	.97775	.08711		

- 소득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갈등강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100만원 이하는 2.7, 101~200만원은 4.0, 201~300만원은 4.0, 301~400만원은 4.0, 401만원 이상은 4.3으로 갈등의 강도를 인식하여 100만원 이하가 상대적으로 갈등의 강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24) 소득에 따른 갈등횟수의 차이

〈표 4-45〉 소득에 따른 갈등횟수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F	유의 확률
갈등 횟수	100만원 이하	21	3.1429	.85356	.18626	3.838	0.006
	101~200만원	60	4.0000	1.10469	.14261		
	201~300만원	30	3.8000	.76112	.13896		
	301~400만원	6	4.0000	.00000	.00000		
	401만원 이상	9	4.3333	1.00000	.33333		
	합계	126	3.8333	1.00200	.08927		

- 소득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갈등횟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6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100만원 이하는 3.14, 101~200만원은 4.0, 201~300만원은 3.8, 301~400만원은 4.0, 401만원 이상은 4.3으로 갈등의 횟수를 인식하여 100만원 이하가 상대적으로 갈등횟수를 적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25) 소득에 따른 주민과 주민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46〉 소득에 따른 주민과 주민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 확률
주민과 주민간 갈등	100만원 이하	21	3.5714	.50709	.11066	3.768	0.006
	101~200만원	60	3.8000	.68396	.08830		
	201~300만원	30	3.8000	.76112	.13896		
	301~400만원	6	4.0000	.00000	.00000		
	401만원 이상	9	3.0000	.00000	.00000		
	합계	126	3.7143	.66762	.05948		

- 소득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주민과 주민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6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는 3.5, 101~200만원은 3.8, 201~300만원은 3.8, 301~400만원은 4.0, 401만원 이상은 3.0으로 주민과 주민간 갈등의 심각도의 차이를 인식하여 401만원 이상이 상대적으로 주민과 주민간 갈등의 심각도의 차이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26) 소득에 따른 마을과 마을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47〉 소득에 따른 마을과 마을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마을과 마을간	100만원 이하	21	3.2857	.90238	.19691	7.524	0.000
	101~200만원	60	3.9000	.43957	.05675		
	201~300만원	30	3.6000	.67466	.12318		
	301~400만원	6	3.5000	.54772	.22361		
	401만원 이상	9	3.0000	.00000	.00000		
	합계	126	3.6429	.65071	.05797		

- 소득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마을과 마을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는 3.2, 101~200만원은 3.9, 201~300만원은 3.6, 301~400만원은 3.5, 401만원 이상은 3.0으로 마을과 마을간 갈등의 심각도의 차이를 인식하여 401만원 이상이 상대적으로 마을과 마을간 갈등의 심각도의 차이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27) 소득에 따른 주민(집단)과 기업(유류유출회사)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48〉 소득에 따른 주민(집단)과 기업(유류유출회사)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주민 (집단)과 기업 (유류 유출 회사)간	100만원 이하	21	3.5714	1.32557	.28926	7.610	0.000
	101~200만원	60	4.5500	.81146	.10476		
	201~300만원	30	4.6000	.49827	.09097		
	301~400만원	6	4.5000	.54772	.22361		
	401만원 이상	9	3.6667	.50000	.16667		
	합계	126	4.3333	.92087	.08204		

- 소득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주민(집단)과 기업(유류유출회사)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는 3.5, 101~200만원은 4.5, 201~300만원은 4.6, 301~400만원은 4.5, 401만원 이상은 3.6으로 주민(집단)과 기업(유류유출회사)간 갈등의 심각도의 차이를 인식하여 100만원 이하가 상대적으로 주민(집단)과 기업(유류유출회사)간 갈등의 심각도의 차이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28) 소득에 따른 주민(집단)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49〉 소득에 따른 주민과 정부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 확률
주민 (집단)과 정부 (지방자치 단체, 중앙정부) 간	100만원 이하	21	3.7143	.46291	.10102	7.996	0.000
	101 ~ 200만원	60	4.3000	.46212	.05966		
	201 ~ 300만원	30	4.3000	.65126	.11890		
	301 ~ 400만원	6	4.0000	.00000	.00000		
	401만원 이상	9	3.6667	.50000	.16667		
	합계	126	4.1429	.56163	.05003		

- 소득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주민(집단)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간 갈등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는 3.7, 101~200만원은 4.3, 201~300만원은 4.3, 301~400만원은 4.0, 401만원 이상은 3.6으로 주민(집단)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간 심각도의 차이를 인식하여 401만원 이상이 상대적으로 주민(집단)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간 심각도의 차이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29) 소득에 따른 태풍 및 호우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50〉 소득에 따른 태풍 및 호우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태풍 및 호우	100만원 이하	21	2.1429	.85356	.18626	12.909	0.000
	101~200만원	60	2.4000	.66892	.08636		
	201~300만원	30	2.6000	.67466	.12318		
	301~400만원	6	2.5000	.54772	.22361		
	401만원 이상	9	4.0000	.00000	.00000		
	합계	126	2.5238	.79714	.07101		

- 소득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태풍 및 호우의 사회 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는 2.1, 101~200만원은 2.4, 201~300만원은 2.6, 301~400만원은 2.5, 401만원 이상은 4.0으로 태풍 및 호우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100만원 이하가 상대적으로 태풍 및 호우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남

(30) 소득에 따른 가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51〉 소득에 따른 가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가뭄	100만원 이하	21	1.7143	.71714	.15649	12.461	0.000
	101~200만원	60	2.1000	.54306	.07011		
	201~300만원	30	2.0000	.45486	.08305		
	301~400만원	6	2.0000	.00000	.00000		
	401만원 이상	9	3.3333	1.00000	.33333		
	합계	126	2.0952	.68619	.06113		

- 소득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가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는 1.7, 101~200만원은 2.1, 201~300만원은 2.0, 301~400만원은 2.0, 401만원 이상은 3.3으로 가뭄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401만원 이상이 상대적으로 가뭄에 대한 심각도를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31) 소득에 따른 폭설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52〉 소득에 따른 폭설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폭설	100만원 이하	21	1.8571	.85356	.18626	10.753	0.000
	101~200만원	60	2.0500	.50169	.06477		
	201~300만원	30	2.3000	.65126	.11890		
	301~400만원	6	1.5000	.54772	.22361		
	401만원 이상	9	3.3333	1.00000	.33333		
	합계	126	2.1429	.74527	.06639		

- 소득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폭설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는 1.8, 101~200만원은 2.0, 201~300만원은 2.3, 301~400만원은 1.5, 401만원 이상은 3.3으로 폭설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301~400만원이 상대적으로 폭설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32) 소득에 따른 지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53〉 소득에 따른 지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지진	100만원 이하	21	1.8571	.85356	.18626	12.375	0.000
	101~200만원	60	2.0000	.45099	.05822		
	201~300만원	30	2.4000	.67466	.12318		
	301~400만원	6	1.5000	.54772	.22361		
	401만원 이상	9	3.3333	1.00000	.33333		
	합계	126	2.1429	.74527	.06639		

- 소득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지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는 1.8, 101~200만원은 2.0, 201~300만원은 2.4, 301~400만원은 1.5, 401만원 이상은 3.3으로 지진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301~400만원이 상대적으로 지진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33) 소득에 따른 화재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54〉 소득에 따른 화재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화재 사고	100만원 이하	21	2.0000	.77460	.16903	8.127	0.000
	101~200만원	60	2.0500	.59447	.07675		
	201~300만원	30	2.2000	.61026	.11142		
	301~400만원	6	2.5000	.54772	.22361		
	401만원 이상	9	3.3333	1.00000	.33333		
	합계	126	2.1905	.73446	.06543		

- 소득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화재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100만원 이하는 2.0, 101~200만원은 2.0, 201~300만원은 2.2, 301~400만원은 2.5, 401만원 이상은 3.3으로 화재사고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100만원 이하가 상대적으로 화재사고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34) 소득에 따른 붕괴·폭발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55〉 소득에 따른 붕괴·폭발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붕괴 · 폭발사고	100만원이하	21	2.0000	.77460	.16903	7.264	0.000
	101~200만원	60	2.0500	.67460	.08709		
	201~300만원	30	2.3000	.65126	.11890		
	301~400만원	6	2.5000	.54772	.22361		
	401만원이상	9	3.3333	1.00000	.33333		
	합계	126	2.2143	.77570	.06911		

- 소득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붕괴·폭발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는 2.0, 101~200만원은 2.0, 201~300만원은 2.3, 301~400만원은 2.5, 401만원 이상은 3.3으로 붕괴·폭발사고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100만원 이하가 상대적으로 붕괴·폭발사고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35) 소득에 따른 교통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56〉 소득에 따른 교통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교통사고	100만원 이하	21	2.5714	1.20712	.26342	4.031	0.004
	101~200만원	60	2.7500	.62775	.08104		
	201~300만원	30	2.9000	.54772	.10000		
	301~400만원	6	3.0000	.00000	.00000		
	401만원 이상	9	3.6667	.50000	.16667		
	합계	126	2.8333	.75631	.06738		

- 소득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교통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4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는 2.5, 101~200만원은 2.7, 201~300만원은 2.9, 301~400만원은 3.0, 401만원 이상은 3.6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100만원 이하가 상대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36) 소득에 따른 환경오염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57〉 소득에 따른 환경오염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환경오염 사고	100만원 이하	21	2.8571	1.27615	.27848	8.295	0.000
	101~200만원	60	3.5500	.59447	.07675		
	201~300만원	30	3.1000	.84486	.15425		
	301~400만원	6	4.5000	.54772	.22361		
	401만원 이상	9	4.0000	.00000	.00000		
	합계	126	3.4048	.87798	.07822		

- 소득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사고의 사회 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100만원 이하는 2.8, 101~200만원은 3.5, 201~300만원은 3.1, 301~400 만원은 4.5, 401만원 이상은 4.0으로 가뭄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100만원 이하가 상대적으로 가뭄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37) 소득에 따른 실업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58〉 소득에 따른 실업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실업	100만원 이하	21	2.2857	1.05560	.23035	5.014	0.001
	101 ~ 200만원	60	2.9000	.89632	.11571		
	201 ~ 300만원	30	3.0000	.78784	.14384		
	301 ~ 400만원	6	4.0000	1.09545	.44721		
	401만원 이상	9	3.0000	.00000	.00000		
	합계	126	2.8810	.93473	.08327		

- 소득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실업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0.001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는 2.2, 101~200만원은 2.9, 201~300만원은 3.0, 301~400만원은 4.0, 401만원 이상은 3.0으로 실업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100만원 이하가 상대적으로 실업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38) 소득에 따른 분쟁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59〉 소득에 따른 분쟁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분쟁	100만원 이하	21	2.1429	.85356	.18626	5.132	0.001
	101~200만원	60	2.5000	.81303	.10496		
	201~300만원	30	3.0000	.78784	.14384		
	301~400만원	6	3.0000	.00000	.00000		
	401만원 이상	9	3.0000	.00000	.00000		
	합계	126	2.6190	.81836	.07291		

- 소득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분쟁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0.001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는 2.1, 101~200만원은 2.5, 201~300만원은 3.0, 301~400만원은 3.0, 401만원 이상은 3.0으로 분쟁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100만원 이하가 상대적으로 분쟁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39) 소득에 따른 파업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60〉 소득에 따른 파업의 사회위험 심각도의 인식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파업	100만원이하	21	2.0000	.77460	.16903	8.639	0.000
	101~200만원	60	2.1500	.65935	.08512		
	201~300만원	30	2.8000	.61026	.11142		
	301~400만원	6	2.0000	1.09545	.44721		
	401만원 이상	9	3.0000	.00000	.00000		
	합계	126	2.3333	.74833	.06667		

- 소득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파업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는 2.0, 101~200만원은 2.1, 201~300만원은 2.8, 301~400만원은 2.0, 401만원 이상은 3.0으로 파업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100만원 이하와 301-400만원이 상대적으로 파업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40) 소득에 따른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61〉 소득에 따른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	100만원 이하	21	4.1429	.65465	.14286	3.361	0.012
	101~200만원	60	4.5500	.59447	.07675		
	201~300만원	30	4.4000	.49827	.09097		
	301~400만원	6	4.5000	.54772	.22361		
	401만원 이상	9	4.0000	.00000	.00000		
	합계	126	4.4048	.58211	.05186		

- 소득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에 대한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12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는 4.1, 101~200만원은 4.5, 201~300만원은 4.4, 301~400만원은 4.5, 401만원 이상은 4.0으로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401만원 이상이 상대적으로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41) 소득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62〉 소득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	100만원 이하	21	4.4286	.50709	.11066	4.131	0.004
	101~200만원	60	4.7000	.46212	.05966		
	201~300만원	30	4.5000	.68229	.12457		
	301~400만원	6	4.5000	.54772	.22361		
	401만원 이상	9	4.0000	.00000	.00000		
	합계	126	4.5476	.54563	.04861		

- 소득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4으로서 차이가 없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는 4.4, 101~200만원은 4.7, 201~300만원은 4.5, 301~400만원은 4.5, 401만원 이상은 4.0으로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401만원 이상이 상대적으로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42) 직업에 따른 갈등강도의 차이

〈표 4-63〉 직업에 따른 갈등강도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갈등 강도	어업	12	4.2500	.45227	.13056	5.759	0.000
	양식업	21	4.0000	.00000	.00000		
	농업	39	3.5385	1.29465	.20731		
	숙박업(펜션 포함)	9	4.6667	.50000	.16667		
	맨손어업	9	4.3333	.50000	.16667		
	기타	27	3.8889	.75107	.14454		
	요식업	9	2.6667	1.00000	.33333		
	합계	126	3.8333	.97775	.08711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갈등강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4.2, 양식업은 4.0, 농업은 3.5, 숙박업(펜션 포함)은 4.6, 맨손어업은 4.3, 기타는 3.8, 요식업은 2.6으로 갈등의 강도를 인식하여 요식업이 상대적으로 갈등의 강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43) 직업에 따른 갈등횟수의 차이

〈표 4-64〉 직업에 따른 갈등횟수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갈등 횟수	어업	12	4.7500	.45227	.13056	5.409	0.000
	양식업	21	4.0000	.77460	.16903		
	농업	39	3.4615	1.02202	.16365		
	숙박업(펜션 포함)	9	4.6667	.50000	.16667		
	맨손어업	9	3.3333	1.80278	.60093		
	기타	27	3.8889	.75107	.14454		
	요식업	9	3.3333	.50000	.16667		
	합계	126	3.8333	1.00200	.08927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갈등횟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4.7, 양식업은 4.0, 농업은 3.4, 숙박업(펜션 포함)은 4.6, 맨손어업은 3.3, 기타는 3.8, 요식업은 3.3으로 갈등의 횟수를 인식하여 맨손어업과 요식업이 상대적으로 갈등의 횟수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44) 직업에 따른 주민과 주민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65〉 직업에 따른 주민과 주민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주민과 주민간 갈등	어업	12	3.7500	.45227	.13056	11.576	0.000
	양식업	21	4.1429	.35857	.07825		
	농업	39	3.5385	.50504	.08087		
	숙박업(펜션 포함)	9	4.6667	.50000	.16667		
	맨손어업	9	4.0000	.00000	.00000		
	기타	27	3.2222	.80064	.15408		
	요식업	9	3.6667	.50000	.16667		
	합계	126	3.7143	.66762	.05948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주민과 주민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3.7, 양식업은 4.1, 농업은 3.5, 숙박업(펜션 포함)은 4.6, 맨손어업은 4.0, 기타는 3.2, 요식업은 3.6으로 주민과 주민간 갈등의 심각도의 차이를 인식하여 양식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주민과 주민간 갈등의 심각도의 차이를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45) 직업에 따른 마을과 마을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66〉 직업에 따른 마을과 마을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마을과 마을간	어업	12	4.0000	.00000	.00000	4.619	0.000
	양식업	21	3.8571	.35857	.07825		
	농업	39	3.4615	.64262	.10290		
	숙박업(펜션 포함)	9	4.0000	.86603	.28868		
	맨손어업	9	4.0000	.00000	.00000		
	기타	27	3.5556	.69798	.13433		
	요식업	9	3.0000	.86603	.28868		
	합계	126	3.6429	.65071	.05797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마을과 마을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4.0, 양식업은 3.8, 농업은 3.4, 숙박업(펜션 포함)은 4.0, 맨손어업은 4.0, 기타는 3.5, 요식업은 3.0으로 마을과 마을간 갈등의 심각도의 차이를 인식하여 숙박업자와 맨손어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마을과 마을간 갈등의 심각도의 차이를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46) 직업에 따른 주민(집단)과 기업(유류유출회사)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67〉 직업에 따른 주민과 기업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 확률
주민(집단)과 기업(유류 유출회사)간	어업	12	5.0000	.00000	.00000	5.803	0.000
	양식업	21	4.8571	.35857	.07825		
	농업	39	3.9231	1.15587	.18509		
	숙박업(펜션 포함)	9	4.6667	.50000	.16667		
	맨손어업	9	4.6667	.50000	.16667		
	기타	27	4.2222	.80064	.15408		
	요식업	9	3.6667	1.00000	.33333		
	합계	126	4.3333	.92087	.08204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주민(집단)과 기업(유류유출회사)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5.0, 양식업은 4.8, 농업은 3.9, 숙박업(펜션 포함)은 4.6, 맨손어업은 4.6, 기타는 4.2, 요식업은 3.6으로 주민(집단)과 기업(유류유출회사)간 갈등의 심각도의 차이를 인식하여 양식업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주민(집단)과 기업(유류유출회사)간 갈등의 심각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47) 직업에 따른 주민(집단)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68〉 직업에 따른 주민과 정부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주민(집단)과 정부(지방 자치단체, 중앙정부)간	어업	12	4.7500	.45227	.13056	12.375	0.000
	양식업	21	4.2857	.46291	.10102		
	농업	39	4.1538	.36552	.05853		
	숙박업(펜션 포함)	9	4.6667	.50000	.16667		
	맨손어업	9	4.0000	.00000	.00000		
	기타	27	3.8889	.57735	.11111		
	요식업	9	3.3333	.50000	.16667		
	합계	126	4.1429	.56163	.05003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주민(집단)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간 갈등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4.7, 양식업은 4.2, 농업은 4.1, 숙박업(펜션 포함)은 4.6, 맨손어업은 4.0, 기타는 3.8, 요식업은 3.3으로 주민(집단)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간 심각도의 차이를 인식하여 어업에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주민(집단)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간 심각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48) 직업에 따른 기업(유류유출회사)과 정부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69〉 직업에 따른 기업(유류유출회사)과 정부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 확률
기업(유류 유출회사)와 정부(지방 자치단체)간	어업	12	3.5000	.52223	.15076	3.045	0.008
	양식업	21	3.5714	.50709	.11066		
	농업	39	3.2308	.70567	.11300		
	숙박업(펜션 포함)	9	4.0000	.86603	.28868		
	맨손어업	9	4.0000	.86603	.28868		
	기타	27	3.3333	.67937	.13074		
	요식업	9	3.3333	.50000	.16667		
	합계	126	3.4524	.69980	.06234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기업(유류유출회사)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8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3.5, 양식업은 3.5 농업은 3.2, 숙박업(펜션 포함)은 4.0, 맨손어업은 4.0, 기타는 3.3, 요식업은 3.3으로 기업(유류유출회사)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심각도의 차이를 인식하여 숙박업자들과 맨손어업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기업(유류유출회사)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심각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49) 직업에 따른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정부(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70〉 직업에 따른 정부와 정부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정부(지방자치단체)간	어업	12	3.5000	.52223	.15076	2.738	0.016
	양식업	21	3.4286	.50709	.11066		
	농업	39	3.2308	1.13466	.18169		
	숙박업(펜션 포함)	9	4.3333	1.00000	.33333		
	맨손어업	9	3.3333	.50000	.16667		
	기타	27	3.6667	.48038	.09245		
	요식업	9	3.3333	.50000	.16667		
	합계	126	3.4762	.82670	.07365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정부(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16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3.5, 양식업은 3.4, 농업은 3.2, 숙박업(펜션 포함)은 4.3, 맨손어업은 3.3, 기타는 3.6, 요식업은 3.3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정부(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심각도의 차이를 인식하여 숙박업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정부(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심각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50) 직업에 따른 사회위험 인식의 차이

〈표 4-71〉 직업에 따른 사회위험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사회위험	어업	12	3.0000	.73855	.21320	2.363	0.034
	양식업	21	3.4286	1.07571	.23474		
	농업	39	2.8462	1.36764	.21900		
	숙박업(펜션 포함)	9	3.3333	.50000	.16667		
	맨손어업	9	2.3333	.50000	.16667		
	기타	27	3.0000	1.07417	.20672		
	요식업	9	4.0000	1.50000	.50000		
	합계	126	3.0714	1.16741	.10400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사회위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34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3.0, 양식업은 3.4, 농업은 2.8, 숙박업(펜션 포함)은 3.3, 맨손어업은 2.3, 기타는 3.0, 요식업은 4.0으로 사회위험을 인식하여 요식업 운영자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위험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51) 직업에 따른 태풍 및 호우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72〉 직업에 따른 태풍 및 호우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태풍 및 호우	어업	12	2.5000	.52223	.15076	18.385	0.000
	양식업	21	2.4286	.50709	.11066		
	농업	39	2.1538	.53991	.08645		
	숙박업(펜션 포함)	9	2.6667	.50000	.16667		
	맨손어업	9	3.0000	.86603	.28868		
	기타	27	3.3333	.67937	.13074		
	요식업	9	1.3333	.50000	.16667		
	합계	126	2.5238	.79714	.07101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태풍 및 호우의 사회 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2.5, 양식업은 2.4, 농업은 2.1, 숙박업(펜션 포함)은 2.6, 맨손어업 은 3.0, 기타는 3.3, 요식업은 1.3으로 태풍 및 호우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요식 업이 상대적으로 태풍 및 호우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52) 직업에 따른 가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73〉 직업에 따른 가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가뭄	어업	12	2.2500	.45227	.13056	7.796	0.000
	양식업	21	2.0000	.00000	.00000		
	농업	39	2.0000	.39736	.06363		
	숙박업(펜션 포함)	9	1.6667	.50000	.16667		
	맨손어업	9	2.0000	.86603	.28868		
	기타	27	2.6667	.96077	.18490		
	요식업	9	1.3333	.50000	.16667		
	합계	126	2.0952	.68619	.06113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가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2.2, 양식업은 2.0, 농업은 2.0, 숙박업(펜션 포함)은 1.6, 맨손어업은 2.0, 기타는 2.6, 요식업은 1.3으로 가뭄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요식업이 상대적으로 가뭄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53) 직업에 따른 폭설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74〉 직업에 따른 폭설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폭설	어업	12	2.0000	.00000	.00000	9.159	0.000
	양식업	21	2.1429	.35857	.07825		
	농업	39	2.2308	.58316	.09338		
	숙박업(펜션 포함)	9	1.6667	.50000	.16667		
	맨손어업	9	2.0000	.86603	.28868		
	기타	27	2.6667	.96077	.18490		
	요식업	9	1.0000	.00000	.00000		
	합계	126	2.1429	.74527	.06639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폭설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2.0, 양식업은 2.1, 농업은 2.2, 숙박업(펜션 포함)은 1.6, 맨손어업은 2.0, 기타는 2.6, 요식업은 1.0으로 폭설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요식업이 상대적으로 폭설에 대한 심각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54) 직업에 따른 지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75〉 직업에 따른 지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지진	어업	12	2.0000	.00000	.00000	6.488	0.000
	양식업	21	2.1429	.35857	.07825		
	농업	39	2.1538	.67037	.10734		
	숙박업(펜션 포함)	9	2.0000	.86603	.28868		
	맨손어업	9	2.3333	.50000	.16667		
	기타	27	2.5556	.97402	.18745		
	요식업	9	1.0000	.00000	.00000		
	합계	126	2.1429	.74527	.06639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지진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2.0, 양식업은 2.1, 농업은 2.1, 숙박업(펜션 포함)은 2.0, 맨손어업은 2.3, 기타는 2.5, 요식업은 1.0로 지진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요식업이 상대적으로 지진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55) 직업에 따른 화재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76〉 직업에 따른 화재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화재 사고	어업	12	2.0000	.00000	.00000	9.529	0.000
	양식업	21	1.8571	.35857	.07825		
	농업	39	2.3077	.61361	.09826		
	숙박업(펜션 포함)	9	1.3333	.50000	.16667		
	맨손어업	9	2.3333	.50000	.16667		
	기타	27	2.7778	.80064	.15408		
	요식업	9	1.6667	1.00000	.33333		
	합계	126	2.1905	.73446	.06543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화재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2.0, 양식업은 1.8, 농업은 2.3, 숙박업(펜션 포함)은 1.3, 맨손어업은 2.3, 기타는 2.7, 요식업은 1.6으로 화재사고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요식업이 상대적으로 화재사고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56) 직업에 따른 붕괴·폭발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77〉 직업에 따른 붕괴·폭발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붕괴 폭발 사고	어업	12	2.0000	.00000	.00000	7.893	0.000
	양식업	21	1.8571	.35857	.07825		
	농업	39	2.3846	.63310	.10138		
	숙박업(펜션 포함)	9	1.3333	.50000	.16667		
	맨손어업	9	2.6667	1.00000	.33333		
	기타	27	2.6667	.83205	.16013		
	요식업	9	1.6667	1.00000	.33333		
	합계	126	2.2143	.77570	.06911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붕괴·폭발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2.0, 양식업은 1.8, 농업은 2.3, 숙박업(펜션 포함)은 1.3, 맨손어업은 2.6, 기타는 2.6, 요식업은 1.6으로 붕괴·폭발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숙박업(펜션 포함)이 상대적으로 붕괴·폭발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57) 직업에 따른 교통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78〉 직업에 따른 교통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교통사고	어업	12	2.7500	.45227	.13056	12.913	0.000
	양식업	21	2.7143	.46291	.10102		
	농업	39	3.0769	.48038	.07692		
	숙박업(펜션 포함)	9	2.0000	.86603	.28868		
	맨손어업	9	2.6667	.50000	.16667		
	기타	27	3.3333	.67937	.13074		
	요식업	9	1.6667	1.00000	.33333		
	합계	126	2.8333	.75631	.06738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교통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2.7, 양식업은 2.7, 농업은 3.0, 숙박업(펜션 포함)은 2.0, 맨손어업은 2.6, 기타는 3.3, 요식업은 1.6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요식업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58) 직업에 따른 환경오염사고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79〉 직업에 따른 환경오염사고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환경오염 사고	어업	12	3.5000	.52223	.15076	4.836	0.000
	양식업	21	3.1429	.65465	.14286		
	농업	39	3.3846	.74747	.11969		
	숙박업(펜션 포함)	9	4.0000	.00000	.00000		
	맨손어업	9	4.0000	.00000	.00000		
	기타	27	3.5556	.69798	.13433		
	요식업	9	2.3333	2.00000	.66667		
	합계	126	3.4048	.87798	.07822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사고의 사회 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3.5, 양식업은 3.1, 농업은 3.3, 숙박업(펜션 포함)은 4.0, 맨손어업은 4.0, 기타는 3.5, 요식업은 2.3으로 가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전반적으로 가뭄에 대한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숙박업과 맨손어업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가뭄에 대한 심각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59) 직업에 따른 실업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80〉 직업에 따른 실업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실업	어업	12	2.2500	.45227	.13056	3.249	0.005
	양식업	21	3.0000	.77460	.16903		
	농업	39	2.7692	.80986	.12968		
	숙박업(펜션 포함)	9	3.6667	.50000	.16667		
	맨손어업	9	3.0000	.86603	.28868		
	기타	27	3.1111	.75107	.14454		
	요식업	9	2.3333	2.00000	.66667		
	합계	126	2.8810	.93473	.08327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실업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5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2.2, 양식업은 3.0, 농업은 2.7, 숙박업(펜션 포함)은 3.6, 맨손어업은 3.0, 기타는 3.1, 요식업은 2.3로 실업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어업이 상대적으로 실업에 대한 심각도를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60) 직업에 따른 분쟁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81〉 직업에 따른 분쟁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분쟁	어업	12	3.2500	.86603	.25000	6.565	0.000
	양식업	21	2.7143	.71714	.15649		
	농업	39	2.4615	.64262	.10290		
	숙박업(펜션 포함)	9	3.0000	.86603	.28868		
	맨손어업	9	2.0000	.86603	.28868		
	기타	27	2.8889	.57735	.11111		
	요식업	9	1.6667	1.00000	.33333		
	합계	126	2.6190	.81836	.07291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분쟁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3.2, 양식업은 2.7, 농업은 2.4, 숙박업(펜션 포함)은 3.0, 맨손어업은 2.0, 기타는 2.8, 요식업은 1.6으로 분쟁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어업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분쟁에 대한 심각도를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유류유출 사고로 인하여 분쟁에 대한 심각성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주체들이 어업 종사자들이라는 것도 유추해볼 수 있음

(61) 직업에 따른 파업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82〉 직업에 따른 파업의 사회위험 심각도의 인식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파업	어업	12	2.2500	.45227	.13056	8.719	0.000
	양식업	21	2.4286	.50709	.11066		
	농업	39	2.3846	.63310	.10138		
	숙박업(펜션 포함)	9	2.6667	1.32288	.44096		
	맨손어업	9	2.0000	.86603	.28868		
	기타	27	2.6667	.48038	.09245		
	요식업	9	1.0000	.00000	.00000		
	합계	126	2.3333	.74833	.06667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파업의 사회위험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2.2, 양식업은 2.4, 농업은 2.3, 숙박업(펜션 포함)은 2.6, 맨손어업은 2.0, 기타는 2.6, 요식업은 1.0로 파업에 대한 심각도를 인식하여 대체로 파업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특히 요식업이 상대적으로 파업에 대한 심각성을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62) 직업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83〉 직업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지역 공동체의 붕괴	어업	12	3.7500	.45227	.13056	6.428	0.000
	양식업	21	4.0000	.00000	.00000		
	농업	39	3.4615	.85367	.13670		
	숙박업(펜션 포함)	9	4.6667	.50000	.16667		
	맨손어업	9	4.0000	.00000	.00000		
	기타	27	3.4444	.69798	.13433		
	요식업	9	3.6667	.50000	.16667		
	합계	126	3.7143	.70265	.06260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붕괴에 대한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3.7, 양식업은 4.0, 농업은 3.4, 숙박업(펜션 포함)은 4.6, 맨손어업은 4.0, 기타는 3.4, 요식업은 3.6으로 대체로 지역 공동체의 붕괴에 대한 심각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업과 맨손어업자들이 지역 공동체의 붕괴에 대한 심각도를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63) 직업에 따른 정부의 갈등관리 정책 부족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84〉 직업에 따른 정부의 갈등관리 정책 부족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정부의 갈등관리 정책 부족	어업	12	5.0000	.00000	.00000	5.550	0.000
	양식업	21	4.7143	.46291	.10102		
	농업	39	3.8462	1.36764	.21900		
	숙박업(펜션 포함)	9	4.6667	.50000	.16667		
	맨손어업	9	5.0000	.00000	.00000		
	기타	27	4.0000	.48038	.09245		
	요식업	9	4.3333	1.00000	.33333		
	합계	126	4.3095	.96718	.08616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정부의 갈등관리 정책 부족에 대한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5.0, 양식업은 4.7, 농업은 3.8, 숙박업(펜션 포함)은 4.6, 맨손어업은 5.0, 기타는 4.0, 요식업은 4.3으로 대체로 정부의 갈등관리 정책 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어업 종사자들 같은 경우 평균이 5.0에 이르러 정부의 갈등관리 정책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64) 직업에 따른 주민과 주민간 또는 주민과 정부간 불신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85〉 직업에 따른 주민과 주민간 또는 주민과 정부간 불신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주민과 주민간 또는 주민과 정부간 불신	어업	12	4.5000	.52223	.15076	3.746	0.002
	양식업	21	4.0000	.00000	.00000		
	농업	39	3.8462	.67037	.10734		
	숙박업(펜션 포함)	9	4.3333	.50000	.16667		
	맨손어업	9	4.0000	.00000	.00000		
	기타	27	3.8889	.57735	.11111		
	요식업	9	3.6667	.50000	.16667		
	합계	126	3.9762	.55806	.04972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주민과 주민간 또는 주민과 정부간 불신에 대한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2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4.5, 양식업은 4.0, 농업은 3.8, 숙박업(펜션 포함)은 4.3, 맨손어업은 4.0, 기타는 3.8, 요식업은 3.6으로 대체로 주민과 주민간 또는 주민과 정부간 불신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어업과 숙박업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주민과 주민간 또는 주민과 정부간 불신에 대한 심각도를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65) 직업에 따른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86〉 직업에 따른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복구비의 합리적 이지 못한 배분	어업	12	5.0000	.00000	.00000	12.252	0.000
	양식업	21	4.7143	.46291	.10102		
	농업	39	4.3846	.63310	.10138		
	숙박업(펜션 포함)	9	4.6667	.50000	.16667		
	맨손어업	9	4.0000	.00000	.00000		
	기타	27	3.8889	.32026	.06163		
	요식업	9	4.6667	.50000	.16667		
	합계	126	4.4048	.58211	.05186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에 대한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5.0, 양식업은 4.7, 농업은 4.3, 숙박업(펜션 포함)은 4.6, 맨손어업은 4.0, 기타는 3.8, 요식업은 4.6으로 대체로 복구비의 배분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어업종사자들이 5.0을 나타내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에 대한 심각도를 매우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66)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87〉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	어업	12	4.7500	.45227	.13056	5.711	0.000
	양식업	21	4.7143	.46291	.10102		
	농업	39	4.5385	.64262	.10290		
	숙박업(펜션 포함)	9	4.6667	.50000	.16667		
	맨손어업	9	4.6667	.50000	.16667		
	기타	27	4.1111	.32026	.06163		
	요식업	9	5.0000	.00000	.00000		
	합계	126	4.5476	.54563	.04861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4.7, 양식업은 4.7, 농업은 4.5, 숙박업(펜션 포함)은 4.6, 맨손어업은 4.6, 기타는 4.1, 요식업은 5.0으로 대체로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요식업의 경우 이에 대한 심각성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67) 직업에 따른 복구 참여로 인한 건강 악화 심각도 인식의 차이

〈표 4-88〉 직업에 따른 복구 참여로 인한 건강 악화 심각도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복구 참여로 인한 건강 악화	어업	12	3.7500	.45227	.13056	4.408	0.000
	양식업	21	3.8571	.85356	.18626		
	농업	39	4.0769	.62343	.09983		
	숙박업(펜션 포함)	9	4.3333	.50000	.16667		
	맨손어업	9	3.6667	.50000	.16667		
	기타	27	3.3333	.67937	.13074		
	요식업	9	4.0000	.86603	.28868		
	합계	126	3.8333	.72388	.06449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복구 참여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3.7, 양식업은 3.8, 농업은 4.0, 숙박업(펜션 포함)은 4.3, 맨손어업은 3.6, 기타는 3.3, 요식업은 4.0으로 대체로 복구 참여로 인한 건강 악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남
- 특히, 숙박업 종사자들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가장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

(68) 직업에 따른 정부 복구비의 부족 인식의 차이

〈표 4-89〉 직업에 따른 정부 복구비의 턱없는 부족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정부 복구비의 턱없는 부족	어업	12	5.0000	.00000	.00000	10.774	0.000
	양식업	21	4.7143	.46291	.10102		
	농업	39	4.1538	.67037	.10734		
	숙박업(펜션 포함)	9	5.0000	.00000	.00000		
	맨손어업	9	5.0000	.00000	.00000		
	기타	27	4.1111	.57735	.11111		
	요식업	9	4.6667	.50000	.16667		
	합계	126	4.4762	.62883	.05602		

- 직업에 따른 유류유출 사고 전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정부 복구비의 턱없는 부족에 대한 갈등 심각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확률 0.000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업은 5.0, 양식업은 4.7, 농업은 4.1, 숙박업(펜션 포함)은 5.0, 맨손어업은 5.0, 기타는 4.1, 요식업은 4.6으로 대체로 정부 복구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어업과 숙박업, 맨손어업 종사자들이 가장 부족함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남

4) 교차분석

(1) 학력과 갈등정도의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 학력과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후 갈등의 정도에 대한 인식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음
- 중졸 이하는 보통이 31.3%, 대체로 심각함이 25%, 매우 심각함이 43.8%이며, 고졸은 보통이 5.9%, 대체로 심각함이 58.8%, 매우 심각함이 35.3%, 전문대졸은 대체로 심각함이 33.3%, 매우 심각함이 66.7%였음
- 반면에 대학교졸은 매우 미미함이 50%, 대체로 미미함이 25%, 대체로 심각함이 25%였고, 대학원 이상도 대체로 미미함이 50%의 빈도를 나타내는 등 학력이 높을수록 갈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향을 알 수 있음

〈표 4-90〉 학력과 갈등정도의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갈등정도					계
			매우 미미함	대체로 미미함	보통	대체로 심각함	매우 심각함	
학력	중졸 이하	빈도	0	0	15	12	21	48
		%	.0%	.0%	31.3%	25.0%	43.8%	100%
	고졸	빈도	0	0	3	30	18	51
		%	.0%	.0%	5.9%	58.8%	35.3%	100%
	전문대졸	빈도	0	0	0	3	6	9
		%	.0%	.0%	.0%	33.3%	66.7%	100%
	대학교졸	빈도	6	3	0	3	0	12
		%	50.0%	25.0%	.0%	25.0%	.0%	100%
	대학원 이상	빈도	0	3	0	0	3	6
		%	.0%	50.0%	.0%	.0%	50.0%	100%
전체		빈도	6	6	18	48	48	126
		%	4.8%	4.8%	14.3%	38.1%	38.1%	100%

χ^2 : 132.321, df: 16, 유의 확률: 0.00

(2) 학력별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주체에 대한 교차분석

- 학력과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주체에 대한 인식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음
- 중졸 이하는 어업 종사자가 12.5%, 양식업 종사자가 56.3%, 숙박업(펜션 포함)종사자가 43.8%, 맨손어업 종사자가 12.5%이며, 고졸은 어업 종사자가 52.9%, 양식업 종사자가 29.4%, 숙박업(펜션 포함)종사자가 11.8%, 맨손어업 종사자가 5.9%였음
- 반면에 전문대졸은 어업 종사자가 33.3%, 양식업 종사자가 66.7%이며, 대학교졸은 어업 종사자가 75.0%, 맨손어업 종사자가 25.0%였고, 대학원 이상도 대체로 어업 종사자가 50%, 양식업 종사자가 50%의 빈도를 나타냄

〈표 4-91〉 학력별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주체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주체				계
			어업 종사자	양식업 종사자	숙박업(펜션 포함) 종사자	맨손어업 종사자	
학력	중졸 이하	빈도	6	27	9	6	48
		%	12.5%	56.3%	18.8%	12.5%	100%
	고졸	빈도	27	15	6	3	51
		%	52.9%	29.4%	11.8%	5.9%	100%
	전문대졸	빈도	3	6	0	0	9
		%	33.3%	66.7%	.0%	.0%	100%
	대학교졸	빈도	9	0	0	3	12
		%	75.0%	.0%	.0%	25.0%	100%
	대학원 이상	빈도	3	3	0	0	6
		%	50.0%	50.0%	.0%	.0%	100%
전체		빈도	48	51	15	12	126
		%	38.1%	40.5%	11.9%	9.5%	100%
χ^2 : 37.489, df: 12, 유의확률: 0.00							

(3) 학력과 서해안 갈등의 주도집단의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 학력별 서해안에서 유류유출 사고로 인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주도하는 집단에 대한 인식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대부분의 학력에서 갈등을 주도하는 집단으로 어업종사자들을 꼽았으며, 특히 대학교 졸업 이상의 사람들은 100% 갈등 주도 집단으로 어업종사자들을 생각함
- 그러나 갈등을 주도하는 집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꼽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음

〈표 4-92〉 학력과 서해안 갈등의 주도집단의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서해안 갈등의 주도 집단							전체
			어업 종사자	양식업 종사자	맨손 어업 종사자	숙박업 종사자	농업 종사자	정부 (지방 자치 단체)	기타	
학력	중이 졸하	빈도	21	6	9	0	3	6	3	48
		%	43.8%	12.5%	18.8%	.0%	6.3%	12.5%	6.3%	100%
	고졸	빈도	18	3	3	3	0	12	12	51
		%	35.3%	5.9%	5.9%	5.9%	.0%	23.5%	23.5%	100%
	전문 대졸	빈도	6	0	0	0	0	3	0	9
		%	66.7%	.0%	.0%	.0%	.0%	33.3%	.0%	100%
	대 학 졸	빈도	12	0	0	0	0	0	0	12
		%	100%	.0%	.0%	.0%	.0%	.0%	.0%	100%
	대학원 이상	빈도	6	0	0	0	0	0	0	6
		%	100%	.0%	.0%	.0%	.0%	.0%	.0%	100%
전체		빈도	63	9	12	3	3	21	15	126
		%	50.0%	7.1%	9.5%	2.4%	2.4%	16.7%	11.9%	100%

χ^2 : 49.644, df: 24, 유의확률: 0.002

(4) 학력과 경제책임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 학력별 서해안에서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경제책임 인식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대학교 졸업과 대학원 졸업 이상의 경우 경제책임에 대하여 스피리트호 사고 기업에 있다는 견해가 각 75%, 100%로서 학력이 높을수록 사고기업에 책임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93〉 학력과 경제책임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경제 책임			전체
			스피리트호 사고 기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력	중졸 이하	빈도	21	21	6	48
		%	43.8%	43.8%	12.5%	100%
	고졸	빈도	30	15	6	51
		%	58.8%	29.4%	11.8%	100%
	전문대졸	빈도	6	3	0	9
		%	66.7%	33.3%	.0%	100%
	대학교졸	빈도	9	3	0	12
		%	75.0%	25.0%	.0%	100%
	대학원 이상	빈도	6	0	0	6
		%	100%	.0%	.0%	100%
전체		빈도	72	42	12	126
		%	57.1%	33.3%	9.5%	100%

χ^2 : 11.608, df: 8, 유의 확률: 0.017

(5) 학력별 갈등원인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 학력별 서해안에서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갈등원인 인식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각 학력별로 대체로 경제적 측면을 갈등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94〉 학력별 갈등원인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갈등원인							전체
			경제적 측면	지역 기반적 측면	법제적 측면	인식적 측면	운영적 측면	자원적 측면	심리적 측면	
학 력	중졸이하	빈도	24	0	9	6	6	3	0	48
		%	50.0%	.0%	18.8%	12.5%	12.5%	6.3%	.0%	100%
	고졸	빈도	27	0	6	0	9	6	3	51
		%	52.9%	.0%	11.8%	.0%	17.6%	11.8%	5.9%	100%
	전문대졸	빈도	0	3	0	0	0	6	0	9
		%	.0%	33.3%	.0%	.0%	.0%	66.7%	.0%	100%
	대학교졸	빈도	12	0	0	0	0	0	0	12
		%	100%	.0%	.0%	.0%	.0%	.0%	.0%	100%
	대학원이상	빈도	3	0	3	0	0	0	0	6
		%	50.0%	.0%	50.0%	.0%	.0%	.0%	.0%	100%
전체		빈도	66	3	18	6	15	15	3	126
		%	52.4%	2.4%	14.3%	4.8%	11.9%	11.9%	2.4%	100%
χ^2 : 103.132, df: 24, 유의확률: 0.00										

(6) 학력별 불신원인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 학력별 서해안에서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불신원인 인식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4-95〉 학력별 불신원인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불신원인			전체
			전체이기주의 (내 입장만 생각해서)	정보불투명 (보상체계,금액 등의)	종사하는 직업이 달라서	
학력	중졸이하	빈도	18	27	3	48
		%	37.5%	56.3%	6.3%	100%
	고졸	빈도	15	36	0	51
		%	29.4%	70.6%	.0%	100%
	전문대졸	빈도	6	3	0	9
		%	66.7%	33.3%	.0%	100%
	대학교졸	빈도	6	6	0	12
		%	50.0%	50.0%	.0%	100%
	대학원 이상	빈도	0	6	0	6
		%	.0%	100%	.0%	100%
전체		빈도	45	78	3	126
		%	35.7%	61.9%	2.4%	100%

χ^2 : 14.465, df: 8, 유의확률: 0.070

(7) 월평균 소득과 갈등정도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 월평균 소득별 서해안에서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갈등정도 인식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4-96〉 월평균 소득과 갈등정도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갈등정도					전체
			매우 미미함	대체로 미미함	보통	대체로 심각함	매우 심각함	
월 평 균 소 득	100만원 이하	빈도	0	0	3	12	6	21
		%	.0%	.0%	14.3%	57.1%	28.6%	100%
	101~200만원	빈도	0	3	9	24	24	60
		%	.0%	5.0%	15.0%	40.0%	40.0%	100%
	201~300만원	빈도	0	0	6	9	15	30
		%	.0%	.0%	20.0%	30.0%	50.0%	100%
	301~400만원	빈도	0	0	0	3	3	6
		%	.0%	.0%	.0%	50.0%	50.0%	100%
	401만원 이상	빈도	6	3	0	0	0	9
		%	66.7%	33.3%	.0%	.0%	.0%	100%
전체		빈도	6	6	18	48	48	126
		%	4.8%	4.8%	14.3%	38.1%	38.1%	100%
χ^2 : 75.798, df: 12, 유의확률: 0.00								

(8) 월평균 소득별 서해안 갈등 주도 집단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 월평균 소득별 서해안에서 유류유출 사고로 인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 주도 집단 인식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4-97〉 월평균 소득별 서해안 갈등 주도 집단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서해안 갈등의 주도 집단							전체
			어업 종사자	양식업 종사자	맨손 어업 종사자	숙박업 (펜션 포함) 종사자	농업 종사자	정부 (지방 자치 단체)	기타	
월 평 균 소 득	100만원 이하	빈도	9	3	6	0	3	0	0	21
		%	42.9%	14.3%	28.6%	.0%	14.3%	.0%	.0%	100%
	101~200만원	빈도	33	6	6	0	0	12	3	60
		%	55.0%	10.0%	10.0%	.0%	.0%	20.0%	5.0%	100%
	201~300만원	빈도	12	0	0	3	0	9	6	30
		%	40.0%	.0%	.0%	10.0%	.0%	30.0%	20.0%	100%
	301~400만원	빈도	0	0	0	0	0	0	6	6
		%	.0%	.0%	.0%	.0%	.0%	.0%	100%	100%
	401만원 이상	빈도	9	0	0	0	0	0	0	9
		%	100%	.0%	.0%	.0%	.0%	.0%	.0%	100%
전체		빈도	63	9	12	3	3	21	15	126
		%	50.0%	7.1%	9.5%	2.4%	2.4%	16.7%	11.9%	100%

χ^2 : 107.254, df: 24, 유의확률: 0.00

(9) 월평균 소득과 경제책임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 월평균 소득별 서해안에서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경제책임 인식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4-98〉 월평균 소득과 경제책임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전 체			경 제 책 임			전 체
			스피리트호 사고 기업이 많은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중앙정부가 도의적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생 계 비 의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	
월 평 균 소 득	100만원 이하	빈도	6	15	0	21
		%	28.6%	71.4%	.0%	100%
	101 ~ 200만원	빈도	42	18	0	60
		%	70.0%	30.0%	.0%	100%
	201 ~ 300만원	빈도	12	6	12	30
		%	40.0%	20.0%	40.0%	100%
	301 ~ 400만원	빈도	3	3	0	6
		%	50.0%	50.0%	.0%	100%
	401만원 이상	빈도	9	0	0	9
		%	100%	.0%	.0%	100%
전 체		빈도	72	42	12	126
		%	57.1%	33.3%	9.5%	100%

χ^2 : 90.076, df: 24, 유의확률: 0.00

(10) 월평균 소득별 갈등원인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 월평균 소득별 서해안에서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갈등원인 인식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4-99〉 월평균 소득별 갈등원인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갈등원인							전체	
			전체경제적측면	지역기반적측면)	법·제도적측면	인식적측면	운영적측면	자원적측면	심리적측면		
월 평 균 소 득	100만원 이하	빈도	12	0	3	0	0	3	3	21	
		%	57.1%	.0%	14.3%	.0%	.0%	14.3%	14.3%	100%	
	101~200만원	빈도	36	3	0	6	9	6	0	60	
		%	60.0%	5.0%	.0%	10.0%	15.0%	10.0%	.0%	100%	
	201~300만원	빈도	3	0	15	0	6	6	0	30	
		%	10.0%	.0%	50.0%	.0%	20.0%	20.0%	.0%	100%	
	301~400만원	빈도	6	0	0	0	0	0	0	6	
		%	100%	.0%	.0%	.0%	.0%	.0%	.0%	100%	
	401만원 이상	빈도	9	0	0	0	0	0	0	9	
		%	100%	.0%	.0%	.0%	.0%	.0%	.0%	100%	
	전체		빈도	66	3	18	6	15	15	3	126
			%	52.4%	2.4%	14.3%	4.8%	11.9%	11.9%	2.4%	100%

χ^2 : 90.076, df: 24, 유의확률: 0.00

(11) 월평균 소득별 불신원인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 월평균 소득별 서해안에서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불신원인 인식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각 소득별로 정부의 불투명으로 인해 불신이 짝튼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00〉 월평균 소득별 불신원인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불신원인			전체
			전체이기주의 (내 입장만 생각해서)	정보불투명 (보상체계, 금액 등의)	종사하는 직업이 달라서	
월 평 균 소 득	100만원 이하	빈도	12	9	0	21
		%	57.1%	42.9%	.0%	100%
	101 ~ 200만원	빈도	15	42	3	60
		%	25.0%	70.0%	5.0%	100%
	201 ~ 300만원	빈도	9	21	0	30
		%	30.0%	70.0%	.0%	100%
	301 ~ 400만원	빈도	6	0	0	6
		%	100%	.0%	.0%	100%
	401만원 이상	빈도	3	6	0	9
		%	33.3%	66.7%	.0%	100%
	전체	빈도	45	78	3	126
		%	35.7%	61.9%	2.4%	100%

χ^2 : 21.091, df: 8, 유의확률: 0.007

(12) 직업별 갈등정도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 직업별 서해안에서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갈등정도 인식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4-101〉 직업별 갈등정도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갈등정도					전체
			매우 미미함	대체로 미미함	보통	대체로 심각함	매우 심각함	
직업	어업	빈도	0	0	0	6	6	12
		%	.0%	.0%	.0%	50.0%	50.0%	100%
	양식업	빈도	0	0	3	9	9	21
		%	.0%	.0%	14.3%	42.9%	42.9%	100%
	농업	빈도	0	0	15	12	12	39
		%	.0%	.0%	38.5%	30.8%	30.8%	100%
	숙박업	빈도	0	0	0	3	6	9
		%	.0%	.0%	.0%	33.3%	66.7%	100%
	맨손어업	빈도	0	0	0	6	3	9
		%	.0%	.0%	.0%	66.7%	33.3%	100%
	기타	빈도	6	6	0	12	3	27
		%	22.2%	22.2%	.0%	44.4%	11.1%	100%
	요식업	빈도	0	0	0	0	9	9
		%	.0%	.0%	.0%	.0%	100%	100%
전체		빈도	6	6	18	48	48	126
		%	4.8%	4.8%	14.3%	38.1%	38.1%	100%

χ^2 : 93.519, df: 24, 유의확률: 0.00

(13) 직업별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주체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 직업별 서해안에서 유류유출 사고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주체 인식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4-102〉 직업별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주체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주체				전체
			어업 종사자	양식업 종사자	숙박업 (펜션 포함) 종사자	맨손어업 종사자	
직업	어업	빈도	12	0	0	0	12
		%	100%	.0%	.0%	.0%	100%
	양식업	빈도	6	15	0	0	21
		%	28.6%	71.4%	.0%	.0%	100%
	농업	빈도	6	24	6	3	39
		%	15.4%	61.5%	15.4%	7.7%	100%
	숙박업	빈도	3	3	3	0	9
		%	33.3%	33.3%	33.3%	.0%	100%
	맨손어업	빈도	0	6	0	3	9
		%	.0%	66.7%	.0%	33.3%	100%
	기타	빈도	21	3	0	3	27
		%	77.8%	11.1%	.0%	11.1%	100%
	요식업	빈도	0	0	6	3	9
		%	.0%	.0%	66.7%	33.3%	100%
전체		빈도	48	51	15	12	126
		%	38.1%	40.5%	11.9%	9.5%	100%
χ^2 : 110.736, df: 18, 유의확률: 0.00							

(14) 직업별 서해안 갈등의 주도집단에 대한 교차분석

- 직업별 서해안에서 유류유출 사고로 인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주도집단 인식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4-103〉 직업별 서해안 갈등의 주도집단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서해안 갈등의 주도 집단							전체
			어업 종사자	양식업 종사자	맨 손 어업 종사자	숙박업 (펜션 포함) 종사자	농업 종사자	정부 (지방 자치 단체)	기타	
직업	어업	빈도	6	3	0	0	0	3	0	12
		%	50.0%	25.0%	.0%	.0%	.0%	25.0%	.0%	100%
	양식업	빈도	12	0	0	3	0	0	6	21
		%	57.1%	.0%	.0%	14.3%	.0%	.0%	28.6%	100%
	농업	빈도	9	3	12	0	0	15	0	39
		%	23.1%	7.7%	30.8%	.0%	.0%	38.5%	.0%	100%
	숙박업	빈도	6	0	0	0	0	0	3	9
		%	66.7%	.0%	.0%	.0%	.0%	.0%	33.3%	100%
	맨손어업	빈도	9	0	0	0	0	0	0	9
		%	100%	.0%	.0%	.0%	.0%	.0%	.0%	100%
	기타	빈도	21	0	0	0	0	3	3	27
		%	77.8%	.0%	.0%	.0%	.0%	11.1%	11.1%	100%
	요식업	빈도	0	3	0	0	3	0	3	9
		%	.0%	33.3%	.0%	.0%	33.3%	.0%	33.3%	100%
전체		빈도	63	9	12	3	3	21	15	126
		%	50.0%	7.1%	9.5%	2.4%	2.4%	16.7%	11.9%	100%
χ^2 : 158.150, df: 36, 유의확률: 0.00										

(15) 직업별 경제책임에 대한 교차분석

- 직업별 서해안에서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경제책임 인식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어업과 양식업, 맨손어업 종사자들은 스피리트호에 경제에 대한 책임에 각각 75%, 85.7%, 66.7 응답함으로써 유류유출 사고 기업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농업과 숙박업 종사자들의 경우 중앙정부의 책임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남

〈표 4-104〉 직업별 경제책임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경제책임			전체
			스피리트호 사고 기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직업	어업	빈도	9	3	0	12
		%	75.0%	25.0%	.0%	100%
	양식업	빈도	18	0	3	21
		%	85.7%	.0%	14.3%	100%
	농업	빈도	12	21	6	39
		%	30.8%	53.8%	15.4%	100%
	숙박업	빈도	3	6	0	9
		%	33.3%	66.7%	.0%	100%
	맨손어업	빈도	6	3	0	9
		%	66.7%	33.3%	.0%	100%
	기타	빈도	21	3	3	27
		%	77.8%	11.1%	11.1%	100%
전체		빈도	72	42	12	126
		%	57.1%	33.3%	9.5%	100%

χ^2 : 40.223, df: 12, 유의확률: 0.00

(16) 직업별 갈등원인에 대한 교차분석

- 직업별 서해안에서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갈등원인 인식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대부분의 직업에서 갈등의 원인이 전체 경제적 측면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양식업, 농업 종사자들의 경우 일부에서 운영적 측면과 지원적 측면을 갈등의 원인으로 꼽고 있음

〈표 4-105〉 직업별 갈등원인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갈등원인							전체
			전체 경제적 측면	지역 기반적 측면	법·제 도적 측면	인식적 측면	운영적 측면	자원적 측면	심리적 측면	
직업	어업	빈도	12	0	0	0	0	0	0	12
		%	100%	.0%	.0%	.0%	.0%	.0%	.0%	100%
	양식업	빈도	6	0	0	0	9	6	0	21
		%	28.6%	.0%	.0%	.0%	42.9%	28.6%	.0%	100%
	농업	빈도	9	3	9	3	6	6	3	39
		%	23.1%	7.7%	23.1%	7.7%	15.4%	15.4%	7.7%	100%
	숙박업	빈도	6	0	3	0	0	0	0	9
		%	66.7%	.0%	33.3%	.0%	.0%	.0%	.0%	100%
	맨손 어업	빈도	6	0	0	3	0	0	0	9
		%	66.7%	.0%	.0%	33.3%	.0%	.0%	.0%	100%
	기타	빈도	18	0	6	0	0	3	0	27
		%	66.7%	.0%	22.2%	.0%	.0%	11.1%	.0%	100%
요식업	빈도	9	0	0	0	0	0	0	9	
	%	100%	.0%	.0%	.0%	.0%	.0%	.0%	100%	
전체		빈도	66	3	18	6	15	15	3	126
		%	52.4%	2.4%	14.3%	4.8%	11.9%	11.9%	2.4%	100%
χ^2 : 100.721, df: 36, 유의확률: 0.00										

(17) 직업별 불신원인에 대한 교차분석

- 직업별 서해안에서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불신원인 인식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대부분의 직업에서 불신의 원인으로 정보의 불투명을 꼽고 있었으나, 양식업의 경우 14.3%, 농업의 경우 30.8%, 숙박업의 경우 33.3%가, 맨손어업자들의 경우 66.7%, 기타 44.4%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때문에 불신하고 있다고 해 이기주의 역시 불신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106〉 직업별 불신원인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불신원인			전체
			전체이기주의	정보 불투명	종사하는 직업이 다르기 때문	
직업	어업	빈도	0	12	0	12
		%	.0%	100%	.0%	100%
	양식업	빈도	3	18	0	21
		%	14.3%	85.7%	.0%	100%
	농업	빈도	12	24	3	39
		%	30.8%	61.5%	7.7%	100%
	숙박업	빈도	3	6	0	9
		%	33.3%	66.7%	.0%	100%
	맨손 어업	빈도	6	3	0	9
		%	66.7%	33.3%	.0%	100%
	기타	빈도	12	15	0	27
		%	44.4%	55.6%	.0%	100%
요식업	빈도	9	0	0	9	
	%	100%	.0%	.0%	100%	
전체		빈도	45	78	3	126
		%	35.7%	61.9%	2.4%	100%
χ^2 : 39.068, df: 12, 유의확률: 0.00						

5) 상관관계분석

(1) 서해안지역 유류유출사고 관련 갈등정도와 갈등유형의 상관관계

- 작년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한 갈등의 정도와 서해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의 유형과의 상관관계는 아래와 같음
- 갈등의 정도와 마을 안에서 주민과 주민간 갈등, 마을과 마을간의 갈등, 주민(집단)과 기업(유류유출회사)와의 갈등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갈등의 정도가 높을수록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4-107〉 서해안지역 유류유출사고 관련 갈등정도와 갈등유형의 상관관계

구분		갈등정도	주민과 주민간	마을과 마을간	주민과 기업간	주민과 정부간	기업과 정부간	정부와 정부간
갈등 정도	Pearson 상관계수	1	.536(**)	.309(**)	.267(**)	.159	.224	.027
	유의 확률		.000	.000	.002	.075	.012	.764
	N	126	126	126	126	126	126	126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2) 서해안지역 유류유출사고 관련 갈등정도와 갈등원인의 상관관계

- 작년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한 갈등의 정도와 서해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 원인의 상관관계는 아래와 같음
- 갈등의 정도와 지역 공동체의 붕괴, 정부의 갈등관리 정책 부족, 주민과 주민간 또는 주민과 정부간 불신,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 복구 참여로 인한 건강 악화 정도, 정부 복구비의 턱없는 부족 정도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며,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가 심각성과 갈등의 정도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108〉 서해안지역 유류유출사고 관련 갈등정도와 갈등원인의 상관관계

구분		갈등정도	지역공동체 붕괴	정부의 갈등관리 정책 부족	주민간, 주민·정부 간 불신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	복구 참여로 인한 건강 악화	정부 복구비의 턱없는 부족
갈등 정도	Pearson 상관계수	1	.127	.139	.160	.192(*)	.492(**)	.124	.391(**)
	유의확률		.155	.121	.073	.031	.000	.168	.000
	N	126	126	126	126	126	126	126	126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3. 서해안 사례를 통해 본 충남 갈등관리 및 사회위험해소의 문제점

1) 지역기반적 측면

(1) 지역공동체에 대한 구심점 형성 노력 부족

- 현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를 둘러싸고 서해안 지역에서는 배·보상과 긴급 생계비 지급, 양식시설 철거, 방제활동 참가, 삼성중공업과의 자매결연 등 수많은 갈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음
- 이러한 갈등의 시점 일수록 지역 공동체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결집 시킬 수 있는 구심점 적인 역할이 필요함
- 이러한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교회, 성당 등의 지역 종교단체나 수산·양식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수협 등이 될 것임
- 그러나 교회, 성당 같은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지역 단체들조차도 보상과 지원을 둘러싸고 갈등 속에 있으며 수협의 경우에도 수협공제회 가입자만을 배려하는 등 지역 공동체 결집을 위한 구심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2) 주민간, 주민·정부간 신뢰 부족

- 앞선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해안 지역에서 갈등의 정도와 갈등 유형간의 상관관계에서 갈등의 정도와 주민간의 갈등의 상관관계수가 0.536으로서 비교적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이 나타남
- 즉, 주민간의 갈등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기반적 측면에서 주민간 갈등 해소를 위해 이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임

- 신뢰는 문제를 공감하게 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통한 그 결과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구성원 스스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함
- 신뢰는 자기 강화적(self-reinforcing)이고 축적적(cumulative)인 선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신뢰는 신뢰할수록 더 커지게 되지만, 불신은 악순환의 고리를 강화시킴(강형기, 2006)
- 그러나 현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를 둘러싸고 서해안 지역에서는 앞선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민과 주민간 또는 주민과 정부간의 불신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응답자가 83.3%에 이룸으로써 불신이 지역 갈등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법·제도적 측면

(1) 갈등관리법제 부재

- 과거 관에서 결정하면 국민의 불만과 저항이 있어도 법과 제도로써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강제로 수용케 했던 일방 통행식 정책의 추진과 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국민과의 갈등 해소 방법이 될 수 없음
- 오늘날 주민들은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정책 수립과 문제 해결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짐
- 이러한 현상은 유류유출 사고를 겪고 있는 서해안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의 집행과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의 폭을 깊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으며 이를 해소할 시스템이 필요함
-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갈등관리지원센터를 마련하고, 갈등과 관련된 정책 연구, 갈등 해결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 갈등관리위원회 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될 ‘갈등관리기본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제정되지 않았음

- 임시방편적인 제도가 아닌 평소에 다양한 사회적 재난과 재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갈등관리기본법제가 필요함

(2) 이미 확립되어 있는 민사 책임 제도의 한계

- 해양유류오염 사고의 경우, 국제협약에 바탕을 둔 국제보상체제(international compensation regime)가 확립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 체제에 의해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민사책임을 제도화하고 있음
- 유류오염보상 보장법은 바로 이러한 국제보상체제를 국내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됨
- 국제보상체제에는 「1971년 기금」, 「1992년 기금」, 「2003년 보충기금」등이 있으나 「1971년 기금」이 1992년 5월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게 됨으로써 사실상 「1992년 기금」과 「2003 보충기금」만이 실효성을 갖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2년 기금」에는 가입하였으나, 이 기금의 보상상한액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2003년 보충기금」에는 정유사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입하지 않았음
- 국제보상체제는 보상이 지연되어 피해자의 고통이 장기화된다는 점과 현행 보상체제 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 경제적 피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처럼 「1992년 기금」에만 가입한 경우, 보상상한선이 낮게 규정되어 있어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처럼 규모가 큰 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박재묵, 2008)

3) 인식적 측면

(1) 정보의 불투명

- 앞선 실증분석에서도 서해안 지역 불신 원인으로 정보의 불투명이 61.9%로서 서해안 지역 주민들이 불신의 원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적극적인 정보의 공유가 부족하거나 보상 시스템을 운영하는 측에서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불신의 벽을 만들게 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보상체계와 금액 문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문화 부재

- 사회갈등 예방을 위한 적극적 시민참여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성숙과 공동체 문화 형성이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와 호혜에 익숙하지 못함
- 그러나 설문을 통해 갈등 발생 시 선호하는 행동 유형을 살펴보면 서로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는 선에서 협상한다가 42.9%, 서로 원하는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상대와 협력한다가 38.1%로서 양보와 협력을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것은 이론과 실재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실천적 측면에서의 양보와 협상을 통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립이 필요

(3) 심리적 지원 시스템 부족

- 기름유출 사고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의 만리포 해수욕장과 모항 항구 주민 70%이상이 기름유출사태에 따른 자살충동을 느낀 것으로 조사됨(뉴시스, 2008.3.21)
- 또한 사고 이후 태안 주민들은 기름 독성으로 인한 건강 이상과 정신적 충격을 계속적으로 호소해 왔으며, 태안 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는 5년 전 대구 지하철 참사의 생존자들 보다 높았고, 거의 전쟁 증후군을 앓는 사람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www.imbc.com).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과 녹색연합, 생명인권운동본부 등의 조사에서도 정신건강 관련 응답자 310명의 55%인 170명은 분노, 회피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1%의 주민이 우울, 35%의 주민이 강박장애를 호소함(복수 응답)
- 통상 자동차 사고자의 12%, 성폭행 피해자의 8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에 견주면, 심각한 피해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음(한겨레 21, 2008.3.20)
- 이처럼 심각한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충격과 장애상황으로 인하여 주민간의 고성이나 더 자주 오가고, 사소한 일에도 말다툼이 생겨나며, 갈등이 고조된다고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음
- 그러나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심리적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이를 담당할 기구가 가동되지 않고 있음

(4) 행정기관의 신뢰성 부족

- 우리나라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있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난점은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임
- 이러한 불신감, 정부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회의가 무엇보다도 갈등을 야기 시키

는 중요한 역할을 함

- 앞선 실증분석에서 갈등 원인별 심각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정부의 갈등관리 정책 부족에 대해 높음과 매우 높음이 88.1%에 이르러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불신으로 인하여 대화와 타협으로의 해결이 잘 되지 않고 갈등이 가중되고 있음

4) 운영적 측면

(1) 신속한 대응시스템 부재

- 태안 지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쟁점은 다양하지만, 사회적 갈등 출현의 주된 요인은 책임 당사자의 배·보상 이행과 사회안전망의 작동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다고 할 수 있음
- 초기 주민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와 삼성중공업에 대한 무한 보상 요구 모두 배·보상 이행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불신의 벽이 높아져 또다시 갈등을 유발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음

(2) 합리적인 보상체계 확립 노력 부족

- 서해안 지역 내 주민간 또는 마을 간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배·보상의 문제로써,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수준에서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같은 읍·면 내 에서는 마을별로 그리고 마을 내에서는 가구별로 지급 금액을 둘러싼 불만이 표출되었고 논란이 있었음
- 기존 이러한 재난을 경험하거나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의 적합한 기준 등이 마련되

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납득 가능한 합리적 기준으로의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3) 정부 부처 간의 이원화된 관리 시스템

- 지난 2007년 서해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를 둘러싸고 현재 서해안 지역에서는 10여개의 주민대책위원회가 난립해 있는 등 주민과 주민간, 주민과 정부간, 주민과 기업간 등의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 들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양식업은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횃집 등 요식업은 농림수산 식품부 소속으로 같은 서해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문제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소관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해양경찰청까지 각자 이원화된 업무처리 상황을 볼 수 있음
- 중앙 부처 간의 업무처리 이원화는 문제의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갈등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을 함

5) 경제적 측면

(1) 복구·생계비의 부족

- 앞선 실증분석에서 갈등원인별 심각도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 복구비의 턱없는 부족에 대해 높음과 매우 높음이 92.9%로 인식하고 있음
- 즉, 지역 주민들은 복구·생계비의 부족이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지난 2008년 1월에는 태안군 지역의 주민이 긴급생계비 지급 액수의 불만을 품고 윈손 약지 일부를 절단하거나 생계비 수령을 거부하고 태안군청을 향의방문(박재묵, 2008)하는 등 복구·생계비 부족의 문제가 갈등 양상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

(2) 사고기업의 체계적이지 못한 경제지원

- 서해안 유류유출사고의 경제적 책임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57.1%의 응답자가 스피리트호 사고 기업이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사고의 경제적 책임에 대해 사고기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남
- 기름유출사고와 관련된 기업은 삼성중공업, 허베이 스피리트사, 현대오일뱅크로서 이 중에서 국제보상체제에 의해 제도적으로 피해보상에 참여하는 기업은 허베이 스피리트사와 오일뱅크임
-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일단 제도화된 국제보상체제 바깥에 있기 때문에 허베이 스피리트사나 정부의 구상권 행사, 주민들의 피해보상 소송에 의해서만 피해보상을 이행하게 되어 있음
- 허베이 스피리트사는 보험금 지급을 최대의 책임이행으로 보고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삼성중공업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으며, 이것만으로 이들은 주민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사고 기업의 피해 보상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삼성중공업의 경우 구름포 지역 복원, 임직원 여름휴가 태안에서 보내기, 자매결연 맺기 등을 통해 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서해안발전기금으로 1,0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절차적인 문제에서 주민을 온전히 납득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휴가 숙박업소 선정 등의 문제로 주민간 갈등을 부추기게 됨

제5장 충청남도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와 전략

- 충남 지역의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으로서 지역적 차원, 광역적 차원, 국가적 차원 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함
- 앞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갈등의 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해서 첫째, 지역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인식적 측면과 지역기반적 측면의 노력, 일부 경제적 측면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 둘째, 광역적 차원에서는 일부 법·제도적 측면, 일부 경제적 측면, 운영적 측면에 있어서 광역 정부 본연 역할인 갈등의 조정과 중재자로서의 역할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 셋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경제적 지원 측면과 법·제도적인 정비 측면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1. 지역적 차원

1) 다양한 사회행사 개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노력

- 지역공동체는 물리적·형식적으로 구축한다하여 이것이 지속적으로 작용가능케 회복되는 것이 아니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꾸준한 노력과 서로의 교류를 통한 신뢰의 회복을 통해 가능해 지는 것임
- 따라서 이를 위해서 군민체육대회,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지역민들의 화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등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 지역 신뢰 형성

- 민주성과 효율성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보완하는 개념임. 그동안 한국의 행정은 민주성과 효율성은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해 왔고 민주성을 희생하면서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효율과 성장 일변도를 달려옴
-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과 집행은 시간이 지연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은 투명성과 감시를 통해 비효율적인 관행이 제거되고 부패와 낭비를 감소시킴
- 갈등의 해결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 부상하는 시대, 사회의 갈등이 증폭되면 불신을 낳게 되며 불신은 결국 행정비용의 증가를 수반하고 행정비용의 증가는 행정의 비효율과 직결될 수 있음
- 갈등의 시대야 말로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요구하는 시대로서,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의 해결 과정에 있어서 이와 같이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이루는 풍토를 조성하여 주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임

3) 심리 지원 시스템 마련

- 서해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 지역의 주민들은 사고 이후 태안 기름 독성으로 인한 건강 이상과 정신적 충격을 계속적으로 호소해 왔으며, 분노, 회피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문제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스트레스 역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민간 조직 차원에서의 지원 서비스나 일회성적인 지원에서 끝마칠 것이 아니

라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사고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심리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4) 주민교육 등을 통한 지역 자생방안 탐색

- 앞선 분석에서 갈등의 원인별 심각성의 분석 결과,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것이 높거나 매우 높음에 응답한 응답자가 94.6%에 달해 가장 큰 갈등의 원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음
- 정부의 지원금이나 보상금은 생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이들을 하나의 마중물로서 작용하게 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임시방편적이고 일회성적인 경제적 보상금 지급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에서는 주민들의 근본적인 생계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책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이를 위해 주민들의 자생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주고, 새로운 생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함

5) 지역 대책위원회 등의 통합적 운영 마련 및 건전한 주민참여 조직 육성

- 정부와 주민간 갈등에서 자주 논쟁이 되는 것은 주민조직 대표성의 문제로서, 주민조직의 대표 계층이 지역민의 민의나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가는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옴
- 주민조직은 주민의 자주적인 에너지 결속의 장이며 주민의 욕구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구성체로서 갈등의 해결에 있어 중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문제시 됨

- 현재 서해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를 둘러싸고 충남 지역에서는 지난 2월 초 '유류피해 태안군 연합대책위원회'로서 주민조직을 통합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산수협피해배상대책위원회, 태안남면 수협피해배상대책위원회, 안면도 수협피해배상대책위원회, 전 피해민 손해배상대책위원회 등 아직까지도 수많은 주민대표조직이나 위원회가 산발적으로 난립해 있는 상황이며, 이들 간의 갈등이 주민간의 갈등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갈등에 있어 지방정부가 갈등의 중재 및 조정자로 나서고, 대화와 토론·타협의 분위기를 조장함으로써 진정 지역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통합적 지역대책위원회의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대화와 협력을 위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

- 공공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적 관계에서의 협력의 증진이 가능하게 하는 비공식적 규범이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자본이 풍부해야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사회 자본을 형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홍보로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의 경제적, 윤리적 가치가 주민들 사이에서 인식되어야함
-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갈등이나 협상에 대처하는 비공식적인 합리적 규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반대자에 대한 매너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을 다루어가는 태도 같은 것들도 공무원, 시민단체, 학생 모두가 배워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됨
- 다원화된 사회에서 나와 가치를 달리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과 공존하기 위해, 양보하고 합의하여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법을 교육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각종의 갈등으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지역 공무원 뿐 아니라 지역의 시민단체나 언론도 다원화된 사회에서 어떠한 자세로 활동하고 보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배워야 하며, 지역 시민단체는

단순히 문제제기식의 활동방식에서 벗어나서 정책 사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지역 언론도 특정한 입장에 편향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식의 보도태도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 대한 겸손한 이해의 자세와 합의를 통한 대안과 비전을 모색하려고 애쓰는 태도를 가져야한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비판보다는 민주주의적 해결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방향으로의 사회분위기 전환을 위해 반대편의 가치와 주장도 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믿음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가지도록 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2. 광역적 차원

1) 갈등중재기구 설립

- 일반적으로 광역행정은 각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중복투자, 경합경영, 행정서비스 구역 외 누출, 소규모투자의 비경제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즉,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발전한 것임
- 따라서 광역정부의 본연적 역할로 돌아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기초자치단체간 또는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갈등 조정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최창호, 2007)
-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를 둘러싸고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에는 보상을 둘러싼 양자의 주장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보령시와 태안군,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갈등에는 태안군이나 보령시와 중앙정부와의 갈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그러나 광역자치단체 내에 갈등중재기구를 마련한다면 정치적 문제의 개입 등으로 인하여 한 쪽 기초자치단체에 편향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오히려 갈등해결을 위해 만든 기구가 갈등심화를 시키는 형상을 보이게 됨

- 따라서 '갈등상생협력포럼' 등과 같은 별도의 갈등 해결 및 완화 중재기구를 마련함으로써 여기에서 기초자치단체간, 또는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갈등의 중재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음

2) 일부 경제적 지원책 마련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아직까지 재정의 자립도가 높지 않으며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로부터 많은 교부금 및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와 같이 관할권 내 자치단체의 재난사고에 대해 상급자치단체로서 일부분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조정·중재적 협상의 도입

- 과정론적 측면의 특징에 입각하여 갈등의 해결과정에서 원칙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협상적 자세임
- 협상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 또는 집단 간에 상호합의를 통하여 그들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립적인 과정(voluntary process)임(Stephenson, 1989)
- 다시 말해서 협상은 공동의 문제를 안고 있는 둘 이상의 의사결정주체가 임의로 상반되는 가치를 주고받는 교환을 통하여, 다른 형태의 행동결과 보다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상호 전략적 조우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이달곤, 1989)
- 당사자 간의 갈등관리방식으로서의 협상은 이해관계자들을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시킨다는 장점이 있으며 해당 지역주민의 관심사항을 밝힐 수 있고 지역주민의 저항을 극복하거나 보상을 산정할 때 큰 도움이 됨
- 또한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 간의 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으로 갈등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자발적인 협상의 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삼자에 의한 조정과 중재 같은 보완적 수단들을 협상의 범위에 포함시킴

4) 갈등 해결을 위한 광역차원의 제도적 장치 구축

- 각종 분쟁 문제를 둘러싸고 이에 대한 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율적인 협의 및 협약제도가 매우 유용한 방법임
- 당사자 간 사전 협의는 분쟁의 예방차원에서 분쟁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의 지출을 없앤다는 의미를 지님
- 따라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를 둘러싼 자치 단체간 갈등에 있어서도 광역적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간의 자율적인 사전협의 및 협약제도를 보장·권고하여 그 결과를 인센티브화 함으로 이후 발생하는 다른 지역 간의 갈등 문제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적 차원

1) 통합된 갈등관리 시스템

-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는 해양오염이라는 측면에서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지역 경제 기반인 식당 등과 관계하여서는 농림수산물식품부, 선박 사고처리와 관련 하여는 해양경찰청에서 관할하는 등 동일한 사고를 통해 동일한 지역에서의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소관부처가 이처럼 이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중앙 부처간의 업무처리의 이원화는 피해 대상자인 주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려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음
- 물론 중앙정부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통합정책실을 설치 사회위험 및 갈등관리를 통한 사회통합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각 부처의 재해·재난 등 업무의 점검·평가를 하는 등 사회위험 및 갈등관리와 재난관리에 관한 총괄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있음(정책포커스, 2008)
-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부처의 활동을 통합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

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재해·재난에 따른 사전·사후 처리에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적 보완이 사회통합정책실이나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함

2) 합리적 보상체계 확립

-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외에도 수많은 지역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그 내면의 갈등 속에는 피해 집단이 발생하기 마련임
- 따라서 지역에서 재난·재해 발생이나 사건·정책 추진 시 반드시 이러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함
- 재난·재해는 언제 닥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한 후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관계되어 있는 시점에서의 보상체계 마련은 더 많은 갈등을 수반하기 마련임
- 따라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기 전, 미리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3) 갈등관련 법제 정비

- 각종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부간 사전협의제, 정부간 협력제, 분쟁조정제, 분쟁조정 및 지원수단 확보를 위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태안군이나 보령시처럼 보상 및 지원체계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 대립 현안에 대한 중재와 법적 뒷받침이 중요함
- 즉,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갈등관리 기본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 또한 갈등의 해결에 있어 권위주의나 다수결주의에 의한 갈등억제가 아니라 이해

관계자들 간의 합의에 의한 갈등해결절차를 비롯해서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교육 훈련과 협상전문가 또는 조정전문가의 양성 등 행정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갈등관리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예방·해결하는데 전기를 마련하고 갈등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갈등관리기본법' 등의 제정이 필요함

4)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국가 및 사회의 역할 제고

- 우리나라는 정유회사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2003 보충기금」에 가입하지 않고, 「1992년 기금」에만 가입하였음
- 이러한 경우 보상상한선이 낮게 규정되어 있어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처럼 규모가 큰 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사고 당사자의 배상책임 외에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의 국가 및 사회의 역할이 대두하게 됨
-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경우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1992년 기금」이 보상하지 못하는 초과피해와 맨손어업 등의 비 보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고, 보상의 지연에 대비하여 정부가 보상액을 선지급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게 되었음
- 물론 이 경우 국가는 선지급금은 물론 초과피해 등에 대해서도 사고 책임이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짐
- 결국 민사 책임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자본과 국가 간의 역할 분담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번 사고의 경우 이러한 역할 분담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결정되는데 약 7개월이 소요됨
- 따라서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및 재해의 대비로써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민사 책임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함

제6장 결 론

- 본 연구의 목적은 서해안 지역을 비롯한 충남 지역의 갈등 및 사회위험 사례의 실태의 파악·분석을 통해 갈등관리의 기본방향을 도출하고 서해안 지역 및 충남 지역의 갈등관리를 위한 모형 구상 및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와 전략의 도출임
- 그리고 이러한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갈등주체 간 갈등해소를 위한 자생적 갈등조정 문화기반(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 마련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활용된 방법은 문헌연구, 면접조사, 사례조사, 전문가 회의 등으로 이들의 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경험적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 기존 문헌 및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한 지역의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분석하고 기존 연구자료 및 사례 조사를 통한 대안 발굴함
- 서해안 지역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대안 도출함
- 이를 바탕으로 지역기반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 인식적 측면, 운영적 측면, 경제적 측면의 갈등관리 및 사회위험해소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기반적 측면에서는 지역기반적 측면에서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구심점 형성 노력 부족, 주민간 또는 주민·정부간 신뢰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음
 - 둘째,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갈등관리법제 부재, 이미 확립되어 있는 민사 책임 제도의 한계 등을 문제로 들 수 있음
 - 셋째, 인식적 측면에서는 정보의 불투명,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문화 부재, 심리적 지원 시스템 부족,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 넷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신속한 대응시스템 부재, 합리적인 보상체계 확립 노력 부족, 정부 부처 간의 이원화된 관리 시스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 다섯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복구·생계비의 부족, 사고기업의 체계적이지 못한 경제 지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충남지역의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을 지역적 차원, 광역적 차원, 국가적 차원 세 측면에서 검토함
-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갈등의 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해서 첫째, 지역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인식적 측면과 지역기반적 측면의 노력, 일부 경제적 측면 위주로 살펴봄
- 지역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사회행사 개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 노력, 지역의 신뢰 형성, 심리 지원 시스템 마련, 주민교육 등을 통한 지역 자생방안 탐색, 지역 대책위원회 등의 통합적 운영 마련 및 건전한 주민참여 조직 육성, 대화와 협력을 위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함
- 둘째, 광역적 차원에서는 일부 법·제도적 측면, 일부 경제적 측면, 운영적 측면에 있어서 광역 정부 본연 역할인 갈등의 조정과 중재자로서의 역할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 광역적 측면에서는 갈등중재기구 설립, 일부 경제적 지원책 마련, 조정·중재적 협상의 도입, 갈등 해결을 위한 광역차원의 제도적 장치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셋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경제적 지원 측면과 법·제도적인 정비 측면을 위주로 살펴 보도록 하겠음
- 통합된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합리적 보상체계 확립, 갈등관리 기본법 마련 등을 통한 갈등관련 법제 정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국가 및 사회의 역할 제고의 노력 등이 필요함
- 오늘날 우리는 지난 1991년 지방선거로써 30년만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지역 내, 지역 간, 지역과 국가 간의 수많은 갈등 속에 놓여있음
- 그러나 갈등은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많은 물질적·시간적 비용을 소모하게 함

으로써 사회적 효용을 감소시키고 있음

- 또한 앞선 실증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갈등의 심화가 수많은 분쟁과 실업 등의 사회위험과 이어짐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정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광역정부와 중앙정부의 차원에서도 현재 서해안 지역에서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를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갈등과 사회위험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 특히 중앙과 지역과의 관계, 지역과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날 이들의 조정과 중재자로서 광역정부 내 제3자 갈등조정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음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성철 외 (2006),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이론과 실제」, 한국행정DB센터.
- 강인호 외 (2004), “지방자치단체의 갈등해결과 협력방안 구축,”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강정훈 (200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 연구: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 고경훈 (2000), “지방정부의 정책형성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경득·최병학 외 (2007), 「충청남도 갈등관리 실태조사 및 유형화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연구과제.
- 길병욱 (2007), “국방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 「국방산업 육성과 지자체의 비전」,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개소기념 학술심포지엄 주제발표논문(3.28).
- ____ (2008), “국가위기관리의 이론과 범위: 개념과 적용,” 「공공행정연구」, 제9권 2호, 한국공공행정학회.
- 김광구 (2005), “국책사업과 갈등관리 5: 갈등관리를 위한 사회교육체제 구축,” 「국토」 제283호, 국토연구원.
- 김기태 (1996), “조직갈등의 관리모형에 관한 연구: 갈등요인과 과정을 중심으로,” 부산 경상전문대 논문집, 제16권.
- 김길수 (1995),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수용과 저항에 관한 연구: 핵폐기물 처분장의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병섭 (2006), “새만금사업과 갈등조정기구의 대응,” 「정책사례연구」, 서울: 대영출판사.
- 김연금 (2003),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소공원 설계 및 조성,” 「조경학회지」, 제31호.
- 김영중 (1996), “지역갈등의 특성과 갈등해소방안,” 「동국논집」, 제15권.
- 나성린·김용건 (1997), “환경분쟁과 해결방안,” 「환경경제연구」, 16(1).

- 나태준·박재희 (2004),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한국행정연구원.
- 나태준 (2005), “공공갈등 관리기제 도입에 관한 논의와 제안,” 『연세행정논총』, 제28권.
- _____ (2005),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한국행정연구원.
- 노진철 (2005), “현대 위험사회에서의 위험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1).
- _____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초기대응과 재난관리의 한계,” 『ECO』, 12(1).
-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 “갈등관리시스템구축방안 연구보고서,”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문태현 (1992), “정책분석과 비판이론: Habermas의 의사소통능력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6(2), 한국행정학회.
- 박경원 (2003),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국토』, 제203호, 국토연구원.
- 박덕병 (1999),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주민환경운동의 의사소통행위에 관한 참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동서 (1987), 『한국행정론』, 서울: 법문사.
- 박명현 (2004),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관리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재묵 (2008), “환경재난으로부터 사회재난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 분석,” 『ECO』, 12(1).
- _____ (2008),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출유 사과에 따른 사회적 갈등,” 충남대학교 해양연구소 심포지움 논문집, 제16권.
- 배응환 (2004), “협력적 로컬거버넌스의 대두, 천안시 환경기초시설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 박형서 (2005), “국책사업과 갈등관리 1: 국책사업 사회갈등의 원인과 특징,” 『국토』, 제283호, 국토연구원.
- 산업자원부 원전사업단기획단 (2005),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 정책평가』, 명지대학교 과학기술사회연구소.
- 심상완 (2002), 『영국의 안전관리체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안광일 (1994), 『정부갈등관리론』, 서울: 대명출판사.
- 안성민 (1999), “갈등관리의 제도화,”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안성민 (2001), “지방정부의 갈등관리에 대한 제도적 접근,” 『사회과학논집』, 11(2).
- 안성호·배응환 (2004), 『지방거버넌스와 지방정책: 네트워크관점에서 본 지방정책사례』, 서울: 다운샘.
- 안재영 (1999), “정책결정참여자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영월 다목적댐 건설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광록 (1996), “갈등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대전산업대학교 논문집, 13(1).
- 오부영 (2000), “정책결정 지연과 집단갈등에 관한 연구: 영월댐 건설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석홍 (2006), 『행정개혁론』, 서울: 박영사.
- 오세덕 (1985), “조직균형리론의 전개와 그 한계성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논총』, 제3권.
- 유기현 (1992), 『스트레스관리』, 서울: 무역경영사.
- 이광중 (1995),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 제13권, 한국생산성학회.
- 이달곤 (1989), “협상이론의 연구와 원칙에 준거한 협상전략,” 『행정논총』, 27(1).
- _____ (2005), 『협상론: 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전략』, 서울: 법문사.
- 이선우 (2001), “정책갈등 관리행태의 문화적분석,”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선우 외 (2001), “영월 다목적댐 건설사업의 협상론적 재해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2),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승철 (1993), “정책대상집단의 정책관여요인에 관한 연구: 비선호시설입지정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열 외 (2005), “한국사회의 위험구조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종렬 (1995), “핵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과 주민갈등: 울진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2), 한국행정학회.
- 장영두 (2001), “협상에 기초한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대안적 환경분쟁해결방안,” 『한국행정논집』, 13(3).
- 장옥연 (2005),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역사환경 보전 계획과정 연구: 서울 인사동과 북촌 계획 사례,” 서울시립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희성 (1997), “도시개발과 환경성평가 기술,” 『건축』, 41(12).
- 전재경 (2005), “국책사업과 갈등관리 3: 갈등관리 법제의 구조와 과제,” 『국토』, 제283호, 국토연구원.
- 전주상 (2000), “지방정부와 주민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영길 (1997), “조직간 갈등의 조정가능성 분석: 한국 토지정보관리부처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제5권, 강원대학교.
- 정희성·이창훈 (2005), “환경갈등 현황 및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경일 외 (2003), “프레임분석을 통한 수자원 갈등 각 이해집단의 의미구성 이해: 한탄강댐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1(4).
- 천대운 (2001), 『갈등관리전략론』, 서울: 선학사.
- 최병두 (1989), “도시계획의 사회철학적 재인식,” 『사회비평』, 제2권 여름호.
- 최병학 (2003), 『계룡시 승격 추진관련 로컬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_____ (2004), “한반도 평화통일과 충청권 안보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대전평화통일 포럼 주최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충청권의 역할: 안보정책 거버넌스와 북한 이탈주민대책』, 주제발표논문(11. 19).
- _____ (2005), “미국과 캐나다의 국방도시,” 『열린충남』, 제32호, 충남발전연구원.
- _____ (2006), “전원·문화·국방의 모범도시: 계룡시,” 『열린충남』, 제34호.
- _____ (2007), “지역특화 국방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방안,” 『국방산업 육성과 지자체의 비전』,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개소기념 학술심포지엄 주제발표논문(3,28).
- _____ (2008), “재난에 강한 안전한 충남 만들기,” 『도·시·군 재난관리 관계관 혁신워크숍』, 주제발표논문, 충청남도.
- 최병학 (2008), “충남도민의 위험인식도 조사분석,” 『공공행정연구』, 제9권 2호, 한국공공행정학회.
- _____ (2008), “동북아 위기관리 협력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상생·협력을 향한 동북아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제2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공공행정학회·중국상해 사회과학원 공동주최.
- 최병학 외 (2008),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1년 갈등과 상생의 현장르포,” 『정책포커스』, 제3호,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 최병학·백운성 (2007), “육군종합행정학교 및 학생중앙군사학교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현안연구과제.
- 최창호 (1999),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_____ (2007), 『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삼영사.
- 최해진 (2004), 『갈등의 구조와 전략』, 서울: 두남.
- 한국사회이론학회 (1995), “갈등과 우리사회,” 『현상과 인식』.
- 한수현 (2005), “통합적 갈등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재원 (1994), “협상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연구: 서울시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허 석 (1995), “공공정책결정과 주민저항에 관한 연구: 핵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사례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성만 (2000), “정부와 비정부조직의 정책경쟁: 영월댐 개발정책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귀곤 · 김명진 공역 (1993), 『환경위험과 문화』, 서울: 명보문화사; Douglas, Mary & Aaron Wildavsky (1993), *Risk and Culture: Essays on the Selection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뉴시스』, (2008. 3. 21), 뉴시스.

『정책포커스』, (2008. 9),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한겨레 21』, (2008. 3. 20), 한겨레신문사.

2. 국외문헌

Brodtkin, E. Z. (1987), “Policy Politics: If We Can’t Govern, Can We Manag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02(4).

Cameiro, Robert (2001), *A Changing Cannon of Government: From Custody to Service*, In OECD, *Government of the Future*, Paris: OECD.

Carpenter, Susan L. and W. J. D. Kennedy (1987), “Environmental Conflict Management,” in Robert W. Lake. (ed.), *Resolving Locational Conflict*, New Brunswick, New Jersey: Center for Urban Policy Research in Rutgers University.

Deutsch, Morton (1973), *The Resolution of Conflict: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Proces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Douglas, Mary & Aaron Wildavsky (1982), (『환경위험과 문화』, 김귀곤 · 김명진 역, 명보문화사) *Risk and Culture: Essays on the Selection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sping-Andersen, Go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ty Press.

- Fink, Clinton F. (1968), "Some Conceptual Difficulties in the Theory of Social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12, No.4.
- Glaser, Barney G. & Anselm L. Strauss (1988),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Aldine De Gruyter.
- Goss, Sue (2001), *Making Local Governance Work: Networks, Relationships and the Management of Change*, London: Palgrave.
- Hammond, et.al (1992), *Making Better Use of Scientific Knowledge: Separating Truth from Justice*, *Psychological Science*, 3(2).
- Heclo H. (1978), "Issue Networks and the Executive Establishment," in A. King, *The New American Political System*,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Heitzmann. K. & R. Canagarajah, Siegel (2002), "Guidelines for Assessing the Sources of Risk and Vulnerability,"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Series, The World Bank.
- Thomas, K. (1992), "Organizational Conflict," in S. Kerr(ed), *Organizational Behavior*, Chicago: Rand McNally.
- Innes and Booher (1998), "Consensus Building and Complex Adaptive System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5(4).
- Jordan, A. G. & J. J. Richardson (1983), "Policy Communities: the British and European Style," *Policy Studies Journal*, 11(June).
- Katz, D. and R. L. Kahn (1978),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s*, (2nd ed.). John Wiley & Sons, Inc.
- Maslow, Abraham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 Perrow, Charles (1984), *Normal Accidents: Living with High-Risk Technologies*, New York: Basic Books.
- Maxo, Staphenson, Jr. and Gerald M. Pops (1989), "Conflict Resolution Methods and Policy Proces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Minnery, John R. (1995), *Conflict Management in Urban Plannig*, England: Gower Publishing Co.
- Neubourg, C. and C. Weigand (2000), "Social Policy as Social Risk Management,"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Year 2000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on Social Security. September 25-27, Helsinki.

- Raiffa, Howard (1982), *The Art and Science of Negotiation*, Cambridge, M.A.: The Balknap Press of Harvard Univ. Press.
- Rein, M. & Schon. D. (1994), *Frame Reflection: Toward the Resolution of Intractable Policy Controversies*, N.Y.: Basic Book.
- Rubin, J. & Brown. B. (1975), *The Social Psychology of Bargaining & Negotiation*, Orlando. F. L.: Academic Press.
- Sandole, Dennis J. R. (2003), *Conflict: From Analysis to Intervention*, New York: Continuum.
- Strauss, Anselm & Juliet Corbin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ition. Thousand Oaks: Sage.
- Wildavsky, Aaron (1987), "Choosing Preferences by Constructing Institution: A Cultural Theory of Preference Form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

■ 부록

설문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서해안 지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충남지역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와 전략 연구』의 일환으로써 충남지역의 갈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갈등해소 방안과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응답결과는 통계법 제13조, 제14조에 의거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각 문항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귀하의 평소 생각이나 느낌을 해당란에 한 개만 골라 표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충남발전연구원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응답자 인적사항	
성 별	___① 남 ___② 여
연 령	___① 20대 ___② 30대 ___③ 40대 ___④ 50대 ___⑤ 60대 이상
학 력	___① 중졸 이하 ___② 고졸 ___③ 전문대졸 ___④ 대졸 ___⑤ 대학원 이상
월평균 소득	___① 100만원 이하 ___② 101~200만원 ___③ 201~300만원 ___④ 301~400만원 ___⑤ 401만원 이상
직 업	___① 어업 ___② 양식업 ___③ 농업 ___④ 숙박업(펜션 포함) ___⑤ 맨손어업 ___⑥ 기타()

I-1 지역 갈등 발생 현황 조사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작년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갈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____① 매우 미미함 ____② 대체로 미미함 ____③ 보통
____④ 대체로 심각함 ____⑤ 매우 심각함

2. 내가 살고 있는 지역(충남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강도와 횟수가 기름유출 사고 전에 비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내용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2-1.	갈등의 강도	①	②	③	④	⑤
2-2.	갈등의 횟수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충남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를 유형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각 갈등은 지금 그 심각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내용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3-1.	주민과 주민간 갈등(마을 안에서)	①	②	③	④	⑤
3-2.	마을과 마을간(이웃마을과의)	①	②	③	④	⑤
3-3.	주민(집단)과 기업(유류유출회사)간	①	②	③	④	⑤
3-4.	주민(집단)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①	②	③	④	⑤
3-5.	기업(유류유출회사)와 정부(지방자치단체)간	①	②	③	④	⑤
3-6.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정부(지방자치단체)간	①	②	③	④	⑤

4. 작년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1가지만 체크해주세요.

____① 어업 종사자 ____② 양식업 종사자 ____③ 농업 종사자
____④ 숙박업(펜션 포함) 종사자 ____⑤ 맨손어업 종사자
____⑥ 기타()

5. 작년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로 인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주도하는 집단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1개만 골라주세요)

- ___① 어업 종사자 ___② 양식업 종사자 ___③ 맨손어업 종사자
___④ 숙박업(펜션 포함) 종사자 ___⑤ 농업 종사자 ___⑥ 정부(지방자치단체)
___⑦ 기업(스피리트호 사고 기업) ___⑧ 기타()

6.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다음 중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1개만 골라주세요)

- ___① 갈등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갈등을 무시 하고 외면해 버린다
___② 나 자신의 이익 보다는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한다
___③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___④ 서로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협상한다
___⑤ 서로 원하는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상대와 협력한다
___⑥ 정부(지방자치단체)에게 중재를 요청한다
___⑦ 기타()

7.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또는 복구비·생계비를 누가 충당해 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1개만 골라주세요)

- ___① 스피리트호 사고 기업이 많은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___② 중앙정부가 도의적 차원에서 많은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___③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의 많은 부분을 책임 져야 한다
___④ 원통하더라도 지역 주민 스스로가 책임 져야 한다
___⑤ 기타()

I-2 지역 사회위험 발생 현황조사

8.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사회위험(태풍·홍수·가뭄 등, 화재·붕괴·환경오염 등, 실업·분쟁·파업 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 ___① 매우 미미함 ___② 대체로 미미함 ___③ 보통
___④ 대체로 심각함 ___⑤ 매우 심각함

9. 아래의 유형별 사회위험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자연적 위험	태풍 및 호우	①	②	③	④	⑤
	가뭄	①	②	③	④	⑤
	폭설	①	②	③	④	⑤
	지진	①	②	③	④	⑤
인적 위험	화재 사고	①	②	③	④	⑤
	붕괴 · 폭발사고	①	②	③	④	⑤
	교통사고	①	②	③	④	⑤
	환경오염사고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위험	실업	①	②	③	④	⑤
	분쟁	①	②	③	④	⑤
	파업	①	②	③	④	⑤

II 지역 갈등 및 사회위험 발생 원인 조사

10.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갈등 원인 중 어느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십니까?(1개만 골라주세요)

- ____ ① 소득감소, 생계막막 등(경제적 측면)
 ____ ② 지역 커뮤니티 또는 공동체의 붕괴 등(지역기반적 측면)
 ____ ③ 정부의 갈등관리 제도 및 정책적 대안의 미흡 등(법·제도적 측면)
 ____ ④ 주민간 또는 주민과 기업·정부간 불신 등(인식적 측면)
 ____ ⑤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 등(운영적 측면)
 ____ ⑥ 복구 참여로 인한 건강악화 등(기초생활적 측면)
 ____ ⑦ 정부 복구비의 턱없는 부족 등(자원적 측면)
 ____ ⑧ 분노, 우울, 걱정 등(심리적 측면)
 ____ ⑨ 기타 측면(_____)

11. 주민간 또는 주민과 기업·정부간, 마을과 마을간 불신(믿지 못하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 ① 내 입장만 생각해서(이기주의)
 ____ ② 정보 불투명(보상체계, 금액 등의)
 ____ ③ 종사하는 직업이 달라서
 ____ ④ 기타(_____)

12.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면, 지금 각 원인별 그 심각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내용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12-1	지역 공동체의 붕괴 정도	①	②	③	④	⑤
12-2	정부의 갈등관리 정책 부족 정도	①	②	③	④	⑤
12-3	주민(집단)과 주민(집단)간 또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 불신 정도	①	②	③	④	⑤
12-4	복구비의 합리적이지 못한 배분 정도	①	②	③	④	⑤
12-5	유류유출 사고 후 생계문제의 심각성 정도	①	②	③	④	⑤
12-6	복구 참여로 인한 건강 악화 정도	①	②	③	④	⑤
12-7	정부 복구비의 턱없는 부족 정도	①	②	③	④	⑤

Ⅲ-1 지역 갈등 해결 방안 조사

13.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1개만 골라주세요)

- ☐ ① 지역 커뮤니티 또는 공동체의 재정립 등(지역기반적 측면)
☐ ② 정부의 갈등관리 제도 및 정책적 대안의 마련 등(법·제도적 측면)
☐ ③ 주민간 또는 주민과 기업·정부간 신뢰 풍토 조성 등(인식적 측면)
☐ ④ 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지속적 노력 등(운영적 측면)
☐ ⑤ 기타 ()

14. 지역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태안군)은 다음 중 어떤 측면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1개만 골라주세요)

- ☐ ① 지역 커뮤니티 또는 공동체의 재정립 등(지역기반적 측면)
☐ ② 정부의 갈등관리 제도 및 정책적 대안의 마련 등(법·제도적 측면)
☐ ③ 주민간 또는 주민과 기업·정부간 신뢰 풍토 조성 등(인식적 측면)
☐ ④ 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지속적 노력 등(운영적 측면)
☐ ⑤ 기타 ()

15. 지역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충청남도)은 다음 중 어떤 측면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1개만 골라주세요)

- ___ ① 지역 커뮤니티 또는 공동체의 재정립 등(지역기반적 측면)
- ___ ② 정부의 갈등관리 제도 및 정책적 대안의 마련 등(법·제도적 측면)
- ___ ③ 주민간 또는 주민과 기업·정부간 신뢰 풍토 조성 등(인식적 측면)
- ___ ④ 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지속적 노력 등(운영적 측면)
- ___ ⑤ 기타 (_____)

16. 지역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다음 중 어떤 측면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1개만 골라주세요)

- ___ ① 지역 커뮤니티 또는 공동체의 재정립 등(지역기반적 측면)
- ___ ② 정부의 갈등관리 제도 및 정책적 대안의 마련 등(법·제도적 측면)
- ___ ③ 주민간 또는 주민과 기업·정부간 신뢰 풍토 조성 등(인식적 측면)
- ___ ④ 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지속적 노력 등(운영적 측면)
- ___ ⑤ 기타(_____)

17.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만 골라주세요)

- ___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공동체 살리기 노력
- ___ ② 지역 자치기구(반상회 등)의 활발화
- ___ ③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및 여가 공간 마련
- ___ ④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 ___ ⑤ 마을의 공동체 공간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마을회관, 노인정 등)
- ___ ⑥ 기타 (_____)

18.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갈등관리 제도 및 정책적 대안의 마련 등과 같은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1개만 골라주세요)

- ___ ① 정보의 공개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
- ___ ② 대화 파트너로서의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 ___ ③ 언론을 통한 여론 형성
- ___ ④ 피해의 적절한 보상
- ___ ⑤ 갈등관리 교육 및 홍보의 확대
- ___ ⑥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 시스템 정상 가동
- ___ ⑦ 전문가(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및 제3자(협상가, 상담가)의 적극 활용
- ___ ⑧ 기타 (_____)

Ⅲ-2 지역 사회위험 해결 방안 조사

19.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위험(태풍·홍수·가뭄 등, 화재·붕괴·환경 오염 등, 실업·분쟁·파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1개만 골라주세요)

- ____ ① 정부의 사회위험 예방 및 관리 제도, 정책적 대안 마련 등(법·제도적 측면)
 ____ ② 주민간 또는 주민과 기업·정부간 신뢰 풍토 조성 등(인식적 측면)
 ____ ③ 사회위험 해소를 위한 주민들의 지속적 노력 등(운영적 측면)
 ____ ④ 기타(_____)

기 타

서해안지역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지역갈등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연 구 진 ■

연구책임 길병옥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국방연구소장)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본 포럼 운영위원장)

공동연구 안혜원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조차현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리더십센터장)
이준건 (충남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본 포럼 사무차장)
배일권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연구위원)

연구보조 윤은경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이경용 (충남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본 포럼운영간사)

기획연구 2008-13 · 서해안지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충남지역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와 전략 연구

글쓴이 · 길병옥·최병학 외 / 발행인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8년 12월 30일 / 발행 · 2008년 12월 30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238(포럼 사무국) / 팩스 · 041-840-1229
ISBN · 978-89-6124-075-8 93500

<http://www.cdi.re.kr>

©2008.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